

정책연구

2024-13

#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Prediction the Role Change of Regional Cultural Facilities  
from Population Crisis and Corresponding Strategies

김연진·이희재·이지아





#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Prediction the Role Change of Regional Cultural Facilities  
from Population Crisis and Corresponding Strategies

김연진·이희재·이지아





### 연구 책임

---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 연구

---

이지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 연구 개요



# 1. 서론

##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동시대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현상은 여러 원인으로부터 가시화됨으로써 관련 이슈 및 정책방안에 관한 다방면의 논의가 요구됨
-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산율인 2.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임
- 이보경·장요한·정예진·홍사흠·김동근(2022)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지역 단위 장래인구를 예측한 결과, 2020년 인구밀도를 100으로 가정할 시 2050년의 인구밀도는 91수준으로 감소하고, 인구거주 지역 중 장래 무거주화 위험 및 인구 감소 지역이 87.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따라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 중 85.5%가 현재 거주 중인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함
-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 당면과제에 대한 문화시설 차원의 대응이 동시대의 관점에서 요구되고, 도서관 등 생활권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복합화 등 문화시설의 기능전환 및 조성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음

###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하며, 첫째는 동시대 관점에서 인구위기와 문화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는 장래인구 변화를 추론하여 새로운 지표를 통해 복수의 대상지역의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를 평가하며, 셋째는 인구위기에 대응한 문화시설 입지지표 및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나.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시공간적 범위: 문화기반시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2024년 현재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중기적 관점으로서 2045년까지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인구소멸지역을 종합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함
- 내용적 범위: 인구위기 대응 정책 동향 및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문화시설 입지 지표 개발 및 시사점 도출,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의 타당성 논의, 시설 복합화 및 프로그램 일시적 적용의 구체적 실행전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 연구방법

- 문헌 및 사례분석: 인구위기의 주요 이슈 및 지역단위 문화시설 현황 분석을 위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과 같은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하였고,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국내·외 정책동향을 조사하고, 문화시설 조성에 관한 정책사례를 관리적 관점과 활용 관점에서 분석함
- 지리정보체계(GIS) 시각화 및 분석: 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시각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문화시설 입지적정성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해 지리정보체계 분석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최근린 이웃 분석, 거리 행렬을 활용한 물리적 접근성 분석, 대상지별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산출 및 시점별 비교분석을 실시함
- 델파이(Delphi) 설문조사 및 분석: 문화시설의 현장종사자, 교수·연구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 문화현장 및 학계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함
- 표적집단면접(FGI): 문헌 및 사례분석, GIS 분석, Delphi 설문조사로부터 도출한 결과를 정리하고자 표적집단면접을 수행하였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분야로 구분하여 각 시설별 종사자, 건축 및 GIS 분석 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3회 실시함

## 2. 인구위기와 문화시설 현황 분석

### 가. 인구위기 관련 주요 이슈

#### 1) 인구감소

- 현재의 인구를 유지함에 있어 요구되는 출산율은 2.1이나,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81을 기록하였고, 이에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언급함
- 2021년 행정안전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0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에 비해 많아짐에 따라 인구의 자연 감소가 현실화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함
-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20~30대 청년층 중심으로 사회적 이동 심화로 인해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0년의 경우 50.1%라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와 지역 불평등 이슈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임
- 사회 내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인 인구고령화는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라 발생하고,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상호 비례하는 관계임
- 인구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생산인구의 감소는 각 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경제 성장 둔화 및 경제적 압박과 직결됨
- 고령자 비율이 14%에 도달한 고령사회 시점은 유럽 국가들이 길게는 115년에서 짧게는 40년 걸린 데 반해 일본의 경우 24년 만에 전환되었고, 심지어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도달함으로써 일본 보다도 빠른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함
-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알아본 결과, 저출산, 지역소멸, 저출생 순으로 연관성이 높게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위기 이슈가 지역소멸이라는 키워드와의 높은 연관관계가 있음에 주목할 수 있음

## 2) 지역소멸

- 지역소멸은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인프라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집중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이동하고,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임
- 대한민국은 도시화 비율이 90%가 넘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광역시가 인근 중소도시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음
- 2004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 행정안전부는 11개 시·도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전국 인구의 10%, 청년 인구의 7%, 고령 인구의 81% 및 국토 면적의 59%를 차지함
-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프라 접근성 현황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생활인프라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이 이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생활문화시설, 박물관·미술관, 시민·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경우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편이고, 특히 생활인프라 중 거점시설에 속하는 문화시설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동 지역에 비해 비해당지역의 동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에 접근성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고, 구체적으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하거나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조치를 실시하는 것임
- 같은 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기반시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와 조사·지원·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시설을 포함한 생활인프라와 관련한 특례 및 지원으로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및 문화기반의 확충과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나. 문화시설 현황 분석

### 1) 문화시설 배치 기준

#### ① 문화시설 법적 구분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시설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의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임
- 그 밖에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법», 「지역문화진흥법», 「평생교육법», 「전시산업발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문화시설의 범위는 각 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함윤주·조현민·김지선·김연준(2019)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의 소비 활동과 관련된 시설만을 문화시설로 정의하였으나, 그 외 법률에서는 문화예술이 아닌 다른 유형의 서비스 혹은 문화예술 관련 생산활동이 발생하는 시설까지 포함하여 문화시설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② 문화시설의 역할 변화

- 문화시설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왔고, 1970년대 이전에는 국가적인 대규모 행사장과 필수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시기 문화시설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주요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중심지 역할을 함
- 1980년대에는 전문예술시설이 강조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문화복지와 문화의 민주화에 주목함으로써 생활권 문화시설의 확산이 두드러졌으며, 2000년대에는 창작공간과 상징적 문화시설, 2010년대 이후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시민주도형 문화시설이 주목받기 시작함
- 문화시설의 역할이 시대별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바와 같이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과 같은 동시대 이슈에 따라 문화시설의 역할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한 하여 정책 변화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임

### ③ 문화시설 공급 모형

- 문화시설은 콘텐츠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역시 다르기에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 기반을 강화하는 데는 다양한 전략이 존재함
- 기본적인 문화시설 확충에 있어 가장 기초적으로 쓰이는 전략은 도시공공시설 입지론을 바탕으로 인구나 면적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필요한 문화시설의 수를 정하는 것임
- 도시공공시설 입지론은 동일한 규모의 시설을 일정 지역 내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는 거리최소화 모형, 한정시간 입지모형, 최대수요 입지모형으로 구분됨

### ④ 문화시설 배치 기준

- 현재 국내 문화시설의 설치 및 공급은 OECD 주요국가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근거로 문화시설 확충목표를 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기준 없이 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설치 및 공급을 결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인프라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변경 등을 제안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기초생활시설 국가적 최저기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차량 및 도보 기준 시간거리를 제시함
-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목표는 인구 관점에서 설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기준은 시설마다 상이하고, 생활인프라로서의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화시설의 공급과 배치에 대한 기준도 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2) 문화시설 분포 현황

### ① 문화기반시설 현황

- 문화시설 중 문화시설 공급 및 배치기준이 지역의 인구 및 이동거리로 설정된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

- 고령인구수가 유소년 인구수를 초과하여 인구 오너스기(Demographic Onus)로 진입한 2017년부터 문화기반시설 증감 추이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모두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인구현황과 지역별 분포현황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나타남
- ② 분석대상 문화시설의 시·도 단위 분포현황
- 전국 시·도 단위 문화시설 분포현황에 따르면 도서관의 경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박물관은 수도권과 강원도, 미술관은 수도권과 전남지역에 다수 분포해 있음
  - 이상의 분포현황에 따르면 공공 문화시설의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 광역지자체임에도 시설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③ 분석대상 문화시설의 시·군·구 인구수에 따른 분포현황
- 분석 시점 2022년 기준 전국 시·군·구 인구분포와 인구 10만 명 당 문화시설별 향유 수준을 확인한 결과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서울 내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어 인구밀도 대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도서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밀도 대비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일부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인구수 대비 문화시설 개수가 높게 분포한 특징을 보임

## 다.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 1) 문화시설 관리정책

- ① 런던의 문화시설 종합계획(Cultural Infrastructure Plan)
- 런던에서는 도시 내 문화시설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고, 특히 창의적 인재와 문화시설을 위한 공간을 보장하며, 런던을 글로벌 창의적 수도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본 계획이 다루는 다섯 가지 과제는 ‘토지 가치 증가’, ‘국가 계획 시스템’, ‘세금 인상’, ‘허가 제한’, ‘재원 축소’이고, 이와 같은 당면과제에 대한 대안으로 일곱 가지의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문화시설 위치파악’, ‘새로운 문화시설 창출’, ‘세계적 수준의 기반 시설 제공’, ‘위기에 처한 문화시설 보호’, ‘투자확대’, ‘문화 및 창의 산업 지원 정책 마련’, ‘교육 및 네트워크 제공’임

## ② 도쿄 문화시설 관리운영지침

- 도쿄 문화시설 관리운영지침은 ‘도쿄 문화 전략 2030’의 실현을 위해 도쿄 도립 문화시설의 중장기적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구체적 대상시설은 도쿄 도립 문화시설에 해당함
- 본 관리운영지침의 지향점은 ‘문화접근성 강화’, ‘디지털 기술의 활용’, ‘다양성 및 포용성’, ‘환경 지속 가능성’이고, 이와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주요 과제 및 해결 방향에 대해 ‘자료 수집 및 보존’, ‘전시회 운영’, ‘시설 보존 및 관리’로 구분함과 동시에 각 대상시설에 대한 개별 지침을 제시함

## ③ 문화시설 관리정책의 시사점

- 런던의 경우 도시경쟁력의 근원을 창의성과 창조산업에 두고, 이를 위한 동력원으로서의 문화시설을 자원화 하여 상세히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을 고정적이고 유형화된 시설로서만이 아니라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장소)이라는 관점으로 문화시설 생태계가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 도쿄의 경우 도쿄도 차원에서 문화시설 관리 방향 및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문화서비스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모두 고도화하고자 하고, 현재 직면한 환경 변화, 인구, 기술, 기후 등의 문제를 도시차원에서 적응하고 대응하고자 함

## 2) 문화시설 복합화 정책 사례

### ① 독일 사회적 도시(Soziale Stadt) 정책 기반 교육시설의 복합문화공간화

- 독일의 ‘사회적 도시’ 정책은 도시 빈곤 지역의 환경, 주변 인프라,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시민 참여 과정을 지원하므로 세대 간 정의, 평등한 분배, 사회적 이동성, 시민권, 가족 친화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따라 독일의 각 도시들은 ‘사회적 도시’의 흐름 속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교육기회와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의 다양한 사회-복지-문화 관련 공간적, 물리적 인프라를 집적하여 개방하거나 복합화하고, 다양한 교육-복지-문화-사회 서비스 기관 및 단체들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도시 전반의 교육품질을 높임
- ② 프랑스 집 가까이 있는 문화(Culture près de chez vous) 정책 사례
- ‘집 가까이 있는 문화’는 지방자치단체와 프랑스 문화통신부, 공공문화기관, 국립 박물관 등 450곳의 예술창작기관 및 문화예술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가와 예술작품이 프랑스 문화소외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공공문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 파리 오페라 극장의 좌석을 모델로 한 콘서트 홀에 설치된 ‘오페라 버스(Opéra Bus)’는 농촌이나 소외 지역을 돌아다니며 오페라를 공연하고, 디지털화된 프랑스 국립 문화시설들의 소장품을 프랑스 전 지역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박물관을 기반으로 한 ‘미크로-폴리(Micro-Folie)’가 구체적 사례임

### 3. 인구위기 지역의 문화시설 입지특성 및 기대효용도 지표 개발

#### 가. 분석대상지 선정 및 문화시설 입지현황 분석

##### 1) 인구위기 지역 도출

##### ① 인구분포 현황 및 장래인구 추계

- 2022년 분석시점을 기준으로 2025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세종과 같은 특수성에 기반한 인구 증가 및 일부지역의 미미한 증가 수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위기가 도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집계구단 기초단위구를 결합시켜 만든 구역으로 기초단위구에 통계적 특성인 동질성, 동량성을 부가하여 확정된 근린지역 통계서비스 구역을 의미함

- 집계구별 장래인구 분포 추정을 위해 2022년 대비 2045년 시도단위 인구 증감률을 고려하여 2045년 집계구별 장래인구 추계 값의 가중치로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경기, 세종 인근의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 국토 차원에서 인구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었음

## ② 분석대상지 선정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결과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감소가 극심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하여 부산광역시와 전북 익산시로 선정함
- 두 대상지 모두 인구유출과 고령화문제를 안고 있고, 각각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대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인구감소 유형에 대응하는 종합적 해결책 모색이 가능함

## 2) 분석대상지 문화시설 입지특성 분석

### ① 대상지 문화시설 분포 현황

- 부산광역시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천명당 시설 개수를 산정했을 때, 2022년, 2045년 모두 1개의 시설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린 이웃분석을 통해 각 시설의 분포가 균집화 되어 있는지 혹은 분산되어 있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 박물관과 도서관은 특정 지역에 균집화되어 있음을 확인함
- 전북 익산시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천명당 시설 개수를 산정했을 때,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2022년, 2045년 모두 1개의 시설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익산시의 경우 모든 문화시설에서 통계적 균집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② 대상지 문화시설 접근성 분석

- 도서관은 생활인프라 시설로 생활권 내 거주민 대상 일상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3.7km의 도달 가능 거리를 설정하였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생활권을 넘어서 비교적 넓은 권역에서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9.3km로 버퍼를 적용함
- 각 집계구 중심으로부터 설정된 버퍼 내에 포함된 시설 개수를 기반으로 접근성 지표를 산출하였고, 접근성 지표는 각각 1~5등급으로 구분함
-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설의 개체 수가 많고, 넓게 분포해 있는 도심을 따라 3등급 이상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수 입지하고 있었으나, 중앙에 위치한 지역을 제외하고 동측, 서측의 시설 접근성 정도가 급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전북 익산시의 경우 시설 수가 매우 적어 도서관, 미술관의 경우 접근성 4, 5등급의 지역이 대부분이었기에 도심과 외곽 구분 없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시설 확장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접근성 분석은 물리적인 접근가능 수준만을 고려한 지표로써, 더 나아가 해당 집계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규모를 고려하여 시설의 이용수준까지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지표의 필요성을 확인함

## 나.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시설 입지 지표 개발

### 1) 현행 기준의 평가 및 개선 필요성

-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1, 2차를 통해 현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해 각 항목별 개선 필요 여부를 확인한 결과 1차 조사 응답자의 80%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해당 응답에 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차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가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냄

① 도서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

- 델파이조사 결과 전체 항목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도서관에 해당하는 각 항목별 개선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중립의견에 가까운 평균점수가 나타남
- ‘인구 3.7만 명 당 1개관을 목표로 2028년까지 1,400관 건립’,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반영’, ‘인구밀집지역 및 도보 12~20분(반경 1~1.5km) 접근 규정’에 관한 각 항목은 개선 필요정도에 있어 4점 만점에 각각 2.65점, 2.85점, 2.75점으로 확인됨

②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

- 박물관·미술관에 해당하는 각 항목별 개선 필요 여부의 델파이조사 결과는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인구 5만 명 당 1개관’,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 1관 추가 가능’,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당 1관 건립’의 항목별 개선 필요 정도에 대해 각각 2.9점, 2.8점, 2.9점, 2.7점으로 분석됨

2)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지표 개발 및 분석

①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정의

- 접근성 지표는 단순히 거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지표에 인구 요소를 가중치로 포함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 지표는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로 명명되었으며, 특정 집계구의 인구가 해당 반경 내의 문화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4. 인구위기 지역의 문화시설 대응방안

### 가. 타 시설 연계 방안의 타당성

#### 1) 인구위기와 문화시설 이용자 수요의 상관관계 분석

- ① 인구감소와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이용자 수요
  - 인구감소와 국·공립 도서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에 있어 델파이조사 1차 결과 응답자의 75%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함
  - 인구감소와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에 있어 델파이조사 1차 결과 응답자의 90%, 85%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함
- ② 지역소멸과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이용자 수요
  - 지역소멸과 국·공립 도서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에 있어 델파이조사 1차 결과 응답자의 80%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함
  - 지역소멸과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에 있어 델파이조사 1차 결과 응답자의 80%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함

#### 2) 문화시설과 타 시설 간 연계 방안의 적절성

- ①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 간 연계 방안
  - 델파이조사를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함
  - 조사 결과 평균점수 3.6점으로써 해당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②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 간 연계 방안
  - 델파이조사를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박물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함
  - 조사 결과 평균점수 3.7점으로써 해당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③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 간 연계 방안
  - 델파이조사를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미술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함
  - 조사 결과 평균점수 3.5점으로써 해당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나. 시설 간 연계의 구체적 실행전략

### 1) 문화시설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전략

- ①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 델파이조사를 통해 국·공립 도서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교육시설(50%), 타 문화시설(15%), 상업시설, 주차시설(이상 10%) 순이었음
  - 1~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다수 선택된 타 시설은 교육시설(70%), 대학시설, 돌봄 시설, 공원시설(이상 40%), 공공청사(30%) 순이었음
- ②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 델파이조사를 통해 국·공립 박물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교육시설(30%), 대학시설(25%), 공원시설, 타 문화시설(이상 15%) 순이었음
  - 1~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다수 선택된 타 시설은 대학시설(65%), 타 문화시설(50%), 교육시설(40%) 순이었음
- ③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 델파이조사를 통해 국·공립 미술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타 문화시설(25%), 교육시설(20%), 대학시설(15%) 순이었음
  - 1~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다수 선택된 타 시설은 타 문화시설(55%), 대학시설, 공공청사(이상 50%), 상업시설(40%) 순이었음

## 2) 문화시설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전략

### ①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 델파이조사를 통해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가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교육시설(65%), 타 문화시설, 공원이설(이상 10%), 돌봄시설, 의료시설(이상 5%) 순이었음
- 1~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다수 선택된 타 시설은 교육시설(80%), 돌봄시설(55%), 공공청사(40%) 순이었음

### ②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 델파이조사를 통해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가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교육시설(40%), 대학시설(20%), 공원이설, 타 문화시설(이상 10%) 순이었음
- 1~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다수 선택된 타 시설은 교육시설, 대학시설(이상 50%), 공공청사, 타 문화시설(이상 40%), 공원이설(35%) 순이었음

### ③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 델파이조사를 통해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가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교육시설(40%), 타 문화시설(20%), 대학시설, 의료시설, 공원이설(이상 10%) 순이었음
- 1~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다수 선택된 타 시설은 대학시설(60%), 교육시설(55%) 공공청사(45%) 순이었음

## 3) 문화시설과 타 시설 간 연계 방안의 우선순위

### ①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의 우선순위

- 델파이조사를 통해 국·공립 도서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는 100점 만점에 교육시설 72.5점, 돌봄시설 41.5점, 대학시설 33.3점 순이었음
- 델파이조사 1차의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차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가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었고, 이에 대한 평균점수는 3.1점임

②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의 우선순위

- 델파이조사를 통해 국·공립 박물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는 100점 만점에 대학시설 52점, 교육시설 44점, 타 문화시설 40.5점 순이었음
- 델파이조사 1차의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차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가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었고, 이에 대한 평균점수는 2.9점임

③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의 우선순위

- 델파이조사를 통해 국·공립 미술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는 100점 만점에 대학시설 49.5점, 교육시설 42.8점, 타 문화시설 41.8점 순이었음
- 델파이조사 1차의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차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가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었고, 이에 대한 평균점수는 3점임

## 다.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변화 분석

### 1)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입지특성 분석

#### ① 시설 간 연계 방안 및 분석 방법

- 앞서 진행된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결과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시설들의 우선순위가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각 시설 간의 연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마련됨
-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과 연계하기에 가장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각 시설 간의 복합화 및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각각 대학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함

## ②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대상지 문화시설 접근성 변화 분석

- 이전 분석과 동일하게 도서관의 경우 집계구 중심에서 3.7km로 반경을 설정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9.3km로 설정함
-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의 경우 도서관과 교육시설 간의 연계는 지역 전반에 걸쳐 시설 접근성 등급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박물관 및 미술관과 대학시설의 연계 또한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전북 익산시 또한 도서관과 교육시설의 연계를 통해 시설 접근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박물관 및 미술관과 대학시설의 연계 또한 집계구별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였으나, 관련시설이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어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음

## 2)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추정

### ① 분석 개요

-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성과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새로이 개발한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를 적용함
- 이는 시설 간 연계 방안을 통해 개선된 접근성 등급을 바탕으로 2045년 인구감소 상황에서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미래에 비효율적 시설 확장이 아닌 기존 시설과의 연계, 활용을 통해서도 문화시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함

### ② 2045년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변화 비교

-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설 간 연계를 통해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의 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킨 결과, 문화시설 기대효용도가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전북 익산시 또한 시설 간 연계를 통해 문화시설 기대효용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지역 규모가 작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소수의 시설만으로도 지역 전반의 기대효용도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함

## 5. 인구위기에 대응한 문화시설 입지지표 및 타 시설 연계 방안

### 가.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 1) 문화시설 입지특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 광역지자체인 부산광역시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존재하며, 특히 박물관과 도서관이 특정 지역에 군집화 되어 있기에 높은 접근성을 보였으며, 이에 부산광역시와 같은 광역지자체는 문화시설의 군집화를 활용하되,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기초지자체인 전북 익산시는 부산광역시에 비해 문화시설의 개체수가 적고, 분포도가 균등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낮은 접근성을 보였으며, 이에 전북 익산시와 같은 기초지자체는 문화시설의 양적 확충과 균형 잡힌 배치를 통해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2)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지표 및 활용의 필요성

-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는 인구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문화시설 입지지표이고, 집계구를 중심으로 인구밀도와 함께 분석할 수 있기에 기존 접근성 지표 보다 진보한 연구 결과임
- 특히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활용됨으로써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 간 문화서비스 불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문화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도심지와 외곽지역 간 기대효용도 격차를 최소화하는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전북 익산시의 경우 신규건립 등 시설의 양적 확충과 함께 인구밀도의 접근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시설 배치, 특히 외곽지역에서의 기대효용도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시설조성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됨

## 나. 문화시설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 1) 향후 문화시설 이용자 수요의 다변화 가능성

- 향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별 이용자 수요가 기존 문화시설 서비스를 넘어 다변화 가능성에 대해 델파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94.7~100%가 다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함
- 이와 관련하여 각 문화시설은 디지털 및 가상현실 기술의 통합과 지역 커뮤니티 특성 및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와 지역주민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전문가 FGI를 통해 확인함
- 지속가능성 측면에 있어서도 공공예산의 활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간의 다목적 활용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각 문화시설이 발전될 것이라 예상됨

### 2) 시설 복합화 및 일시적 적용 전략

- 문화재정 축소 등 재정긴축의 이슈 안에서 지역별 문화시설의 필요 및 활성화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검토가 요구되고, 이는 기존 시설 현황, 문화적 특수성, 필수시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타 시설 연계방안은 크게 문화시설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와 문화시설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으로 구분되고, 두 방안은 모두 공간활용의 관점에서 유사하나 복합용도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적용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음
- 새로이 시설 건립을 통해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의 이슈에 있어 기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인구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3)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개선 효과

- 문화시설 간 연계 전략 적용 전후의 분석 결과는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지수를 통해 문화시설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줌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시설 간 연계를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미래 인구밀도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기대효용도 지수는 수치적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설 간 연계 전략이 기존 문화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각 지역별 중장기적인 문화시설 입지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고, 특히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 활용됨으로써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 간 문화서비스 불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표 1〉 문화시설 연계 전, 후 2022년, 2045년의 지역별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변화량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 간 연계 전 기대효용도 지역 전체 평균값*		'22년 대비 '45년 변화량**	시설 간 연계 후 기대효용도 지역 전체 평균값*	시설 연계 전 대비 후 '45년 변화량**
		2022	2045		2045	
부산	도서관	3.302	3.361	1.8%	1.339	-60.2%
	박물관	1.863	1.897	1.8%	1.625	-14.3%
	미술관	3.256	3.315	1.8%	1.773	-46.5%
익산	도서관	5.949	6.093	2.4%	2.743	-55.0%
	박물관	3.622	3.711	2.5%	2.35	-36.7%
	미술관	6.138	6.284	2.4%	3.208	-48.9%

\*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값은 낮을 수록 기대효용도가 높은 지역임을 의미함

\*\* 변화량이 음수 일 경우 개선되었음을 의미함



---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b>제2장 인구위기와 문화시설 현황 분석</b> .....	<b>11</b>
제1절 인구위기 관련 주요 이슈	13
1. 인구감소	13
2. 지역소멸	16
제2절 문화시설 현황 분석	21
1. 문화시설 배치 기준	21
2. 문화시설 분포 현황	31
제3절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43
1. 문화시설 관리정책	43
2. 문화시설 복합화 정책 사례	51
<b>제3장 인구위기 지역의 문화시설 입지특성 및 기대효용도 지표 개발</b> .....	<b>59</b>
제1절 분석대상지 선정 및 문화시설 입지현황 분석	61
1. 인구위기 지역 도출	61
2. 분석대상지 문화시설 입지특성 분석	70
제2절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시설 입지지표 개발	82
1. 현행 기준의 평가 및 개선 필요성	82

2.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지표 개발 및 분석	93
--------------------------	----

**제4장 인구위기 지역의 문화시설 대응방안 ..... 105**

제1절 타 시설 연계 방안의 타당성	107
1. 인구위기와 문화시설 이용자 수요의 상관관계 분석	107
2. 문화시설과 타 시설 간 연계 방안의 적절성	118
제2절 시설 간 연계의 구체적 실행전략	125
1. 문화시설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전략	125
2. 문화시설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전략	135
3. 문화시설과 타 시설 간 연계 방안의 우선순위	144
제3절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변화 분석	150
1.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입지특성 분석	150
2.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추정	157

**제5장 인구위기에 대응한 문화시설 입지지표 및 타 시설 연계 방안 ..... 165**

제1절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167
1. 문화시설 입지특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167
2.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지표 및 활용의 필요성	169
제2절 문화시설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171
1. 향후 문화시설 이용자 수요의 다변화 가능성	171
2. 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 전략	175
3.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개선 효과	177

**참고문헌 / 179**

**ABSTRACT / 183**

**부록 설문지 / 185**

---

# 표 목차

〈표 1-1〉 델파이 설문조사 대상자	8
〈표 1-2〉 표적집단면접 대상자	9
〈표 2-1〉 광역자치단체별 인구감소지역과 비해당지역의 생활인프라 접근성 평균	18
〈표 2-2〉 광역자치단체별 인구감소지역과 비해당지역의 생활인프라 접근성 차이	19
〈표 2-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시설 상세분류	21
〈표 2-4〉 생활문화시설 범위	22
〈표 2-5〉 문화시설 설치 및 공급 기준	26
〈표 2-6〉 접근성 기반 생활인프라 최소기준(안)	27
〈표 2-7〉 생활SOC 공급기준 (2019.04.기준)	29
〈표 2-8〉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개념	32
〈표 2-9〉 전국 시·도 단위 문화시설 분포현황	33
〈표 2-10〉 인구 10만 명 당 문화시설 향유 수준	35
〈표 2-11〉 도쿄 문화 전략 2030의 주요 과제 및 해결 방향	49
〈표 2-12〉 도쿄 문화 전략 2030의 문화시설별 지침	49
〈표 3-1〉 전국 시·도 단위 총 인구수 (2022년 기준)	61
〈표 3-2〉 통계청 전국 시도 장래인구 추계 값	62
〈표 3-3〉 2022년 대비 2045년 시·도 단위 인구 증감률	64
〈표 3-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021년 최초 지정)	66
〈표 3-5〉 분석대상지 기초현황 (2022년 현황 및 2045년 추정현황)	67
〈표 3-6〉 분석대상지 생활SOC 현황	67
〈표 3-7〉 부산광역시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입지현황	70
〈표 3-8〉 최근린 이웃 분석 파라미터(부산광역시)	71
〈표 3-9〉 최근린 이웃 분석 결과(부산광역시)	71
〈표 3-10〉 전북 익산시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입지현황	72
〈표 3-11〉 최근린 이웃 분석 파라미터(전북 익산시)	72
〈표 3-12〉 최근린 이웃 분석 결과(전북 익산시)	72
〈표 3-13〉 시설 접근성 등급 정의	74

〈표 3-14〉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	82
〈표 3-15〉 현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 개선 필요성	83
〈표 3-16〉 인구 3.7만 명 당 1개관을 목표로 2028년까지 1,400관 건립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85
〈표 3-17〉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반영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86
〈표 3-18〉 인구밀집지역 및 도보 12~20분(반경 1~1.5km) 접근 규정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87
〈표 3-19〉 인구 5만 명 당 1개관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89
〈표 3-20〉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 1관 추가 가능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90
〈표 3-21〉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 가능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91
〈표 3-22〉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당 1관 건립 가능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92
〈표 3-23〉 인구밀도에 따른 등급 정의	93
〈표 4-1〉 인구위기와 국·공립 도서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108
〈표 4-2〉 인구위기와 국·공립 박물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109
〈표 4-3〉 인구위기와 국·공립 미술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110
〈표 4-4〉 인구감소와 국·공립 도서관의 이용자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	111
〈표 4-5〉 인구감소와 국·공립 박물관의 이용자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	112
〈표 4-6〉 인구감소와 국·공립 미술관의 이용자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	113
〈표 4-7〉 지역소멸과 국·공립 도서관의 이용자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	115
〈표 4-8〉 지역소멸과 국·공립 박물관의 이용자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	116
〈표 4-9〉 지역소멸과 국·공립 미술관의 이용자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	117
〈표 4-10〉 국·공립 도서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119
〈표 4-11〉 국·공립 박물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120
〈표 4-12〉 국·공립 미술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121
〈표 4-13〉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	122
〈표 4-14〉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박물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	123
〈표 4-15〉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미술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	124
〈표 4-16〉 국·공립 도서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1순위)	127
〈표 4-17〉 국·공립 도서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1+2+3순위)	128

〈표 4-18〉 국·공립 박물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1순위)	130
〈표 4-19〉 국·공립 박물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1+2+3순위)	131
〈표 4-20〉 국·공립 미술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1순위)	133
〈표 4-21〉 국·공립 미술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1+2+3순위)	134
〈표 4-22〉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1순위)	136
〈표 4-23〉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1+2+3순위)	137
〈표 4-24〉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1순위)	139
〈표 4-25〉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1+2+3순위)	140
〈표 4-26〉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1순위)	142
〈표 4-27〉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1+2+3순위)	143
〈표 4-28〉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	145
〈표 4-29〉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	147
〈표 4-30〉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	149
〈표 4-31〉 문화시설 및 각 시설별 연계방안 1순위 시설 개수	151
〈표 5-1〉 향후 도서관 이용자 수요가 기존 도서관 서비스를 넘어 다변화 될 가능성 여부	172
〈표 5-2〉 향후 박물관 이용자 수요가 기존 박물관 서비스를 넘어 다변화 될 가능성 여부	173
〈표 5-3〉 향후 미술관 이용자 수요가 기존 미술관 서비스를 넘어 다변화 될 가능성 여부	174
〈표 5-4〉 문화시설 연계 전, 후 2022년, 2045년의 지역별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변화량	178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10
[그림 2-1] 대한민국 인구변화 추이 및 시·군·구별 데드크로스 실태	14
[그림 2-2]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연관 키워드 분석 결과	15
[그림 2-3]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16
[그림 2-4]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28
[그림 2-5] 인구감소 지역 내 생활인프라 유지에 관한 비용함수	30
[그림 2-6]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31
[그림 2-7] 2022년 전국 시·도 문화시설 분포현황	33
[그림 2-8] 전국 문화시설 분포현황 (2022년 기준)	34
[그림 2-9] 2022년 전국 시·군·구 인구분포 현황	35
[그림 2-10] 2022년 전국 시·군·구 문화시설 분포현황	42
[그림 2-11] 런던 문화시설 종합계획	44
[그림 2-12] 런던 문화시설 지도	45
[그림 2-13] 문화시설 건강도(London's Cultural Spaces: 2018-2022)	50
[그림 2-14] 계슈비스터-솔 시립학교 외관	53
[그림 2-15] 계슈비스터-솔 시립학교 부지 내 '청소년의 집' 내부시설	54
[그림 2-16] 오페라 버스	55
[그림 2-17] 마이크로-폴리	57
[그림 3-1] 2022년 전국 집계구 인구분포 현황	65
[그림 3-2] 2045년 전국 집계구 인구분포 예측	65
[그림 3-3] 2022년, 2045년 부산광역시 집계구 인구분포	68
[그림 3-4] 2022년, 2045년 전북 익산시 집계구 인구 분포	69
[그림 3-5] 부산광역시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입지현황	71
[그림 3-6] 전북 익산시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입지현황	73
[그림 3-7] 부산광역시 집계구 중심점 기준 버퍼 설정 예시	75
[그림 3-8] 전북 익산시 집계구 중심점 기준 버퍼 설정 예시	76
[그림 3-9] 부산광역시 도서관 대상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77

[그림 3-10] 부산광역시 박물관 대상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78
[그림 3-11] 부산광역시 미술관 대상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78
[그림 3-12] 전북 익산시 도서관 대상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79
[그림 3-13] 전북 익산시 박물관 대상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80
[그림 3-14] 전북 익산시 미술관 대상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80
[그림 3-15]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82
[그림 3-16] 인구 3.7만 명 당 1개관을 목표로 2028년까지 1,400관 건립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85
[그림 3-17] 지역특별화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반영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86
[그림 3-18] 인구밀집지역 및 도보 12~20분(반경 1~1.5km) 접근 규정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87
[그림 3-19] 인구 5만 명 당 1개관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89
[그림 3-20]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 1관 추가 가능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90
[그림 3-21]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 가능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91
[그림 3-22]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당 1관 건립 가능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92
[그림 3-23]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정의 및 산정 식	94
[그림 3-24] 2022년, 2045년 부산광역시 집계구 인구밀도	95
[그림 3-25] 2022년, 2045년 전북 익산시 집계구 인구밀도	96
[그림 3-26] 2022년, 2045년 부산광역시 문화시설(도서관) 기대효용도	98
[그림 3-27] 2022년, 2045년 부산광역시 문화시설(박물관) 기대효용도	99
[그림 3-28] 2022년, 2045년 부산광역시 문화시설(미술관) 기대효용도	100
[그림 3-29] 2022년, 2045년 전북 익산시 문화시설(도서관) 기대효용도	102
[그림 3-30] 2022년, 2045년 전북 익산시 문화시설(박물관) 기대효용도	103
[그림 3-31] 2022년, 2045년 전북 익산시 문화시설(미술관) 기대효용도	104
[그림 4-1] 인구위기와 국·공립 도서관 이용자 수요의 상관관계 1차 조사 결과	107
[그림 4-2] 인구위기와 국·공립 박물관 이용자 수요의 상관관계 1차 조사 결과	109
[그림 4-3] 인구위기와 국·공립 미술관 이용자 수요의 상관관계 1차 조사 결과	110
[그림 4-4] 인구감소와 국·공립 도서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	111
[그림 4-5] 인구감소와 국·공립 박물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	112
[그림 4-6] 인구감소와 국·공립 미술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	113
[그림 4-7] 지역소멸과 국·공립 도서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	114
[그림 4-8] 지역소멸과 국·공립 박물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	116
[그림 4-9] 지역소멸과 국·공립 미술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	117

[그림 4-10] 국·공립 도서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관련 1차 조사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119
[그림 4-11] 국·공립 박물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관련 1차 조사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120
[그림 4-12] 국·공립 미술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관련 1차 조사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121
[그림 4-13] 국·공립 도서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122
[그림 4-14] 국·공립 박물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123
[그림 4-15] 국·공립 미술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124
[그림 4-16]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126
[그림 4-17] 국·공립 도서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126
[그림 4-18]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129
[그림 4-19] 국·공립 박물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129
[그림 4-20]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132
[그림 4-21] 국·공립 미술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132
[그림 4-22]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135
[그림 4-23]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을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136
[그림 4-24]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138
[그림 4-25]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을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138
[그림 4-26]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141
[그림 4-27]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을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141
[그림 4-28]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의 우선순위	144
[그림 4-29]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	145
[그림 4-30]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의 우선순위	146
[그림 4-31]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	146
[그림 4-32]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의 우선순위	148
[그림 4-33]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	148
[그림 4-34] 부산광역시 내 연계시설(교육시설 및 대학시설) 분포 현황	152
[그림 4-35] 전북 익산시 내 연계시설(교육시설 및 대학시설) 분포 현황	152
[그림 4-36] 부산광역시 도서관과 교육시설 연계에 따른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153

[그림 4-37] 부산광역시 박물관과 대학시설 연계에 따른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154
[그림 4-38] 부산광역시 미술관과 대학시설 연계에 따른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154
[그림 4-39] 전북 익산시 도서관과 교육시설 연계에 따른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155
[그림 4-40] 전북 익산시 박물관과 대학시설 연계에 따른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156
[그림 4-41] 전북 익산시 미술관과 대학시설 연계에 따른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156
[그림 4-42] 2045년 시설 연계 전/후 부산광역시 문화시설(도서관) 기대효용도	158
[그림 4-43] 2045년 시설 연계 전/후 부산광역시 문화시설(박물관) 기대효용도	159
[그림 4-44] 2045년 시설 연계 전/후 부산광역시 문화시설(미술관) 기대효용도	160
[그림 4-45] 2045년 시설 연계 전/후 전북 익산시 문화시설(도서관) 기대효용도	162
[그림 4-46] 2045년 시설 연계 전/후 전북 익산시 문화시설(박물관) 기대효용도	163
[그림 4-47] 2045년 시설 연계 전/후 전북 익산시 문화시설(미술관) 기대효용도	164
[그림 5-1] 국·공립 도서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 순위	175
[그림 5-2] 국·공립 박물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 순위	175
[그림 5-3] 국·공립 미술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 순위	176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 1. 연구배경

동시대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주요 인구 동향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원인으로 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관련 이슈 및 정책방안에 관한 다방면의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산율인 2.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경제적 불안정,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부담감 등이 언급된다. 이보경·장요한·정예진·홍사흠·김동근(2022)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법(Gridded Population Gorecast with AI, GPAI)을 개발하여 소지역단위 장래인구를 예측한 결과 2020년 인구밀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50년의 인구밀도는 91수준으로 감소하고, 인구거주 지역 중 장래 무거주화 위험 및 인구감소 지역이 87.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중 또한 2020년 약 50.2%에서 2050년 약 53%로 격차가 커질 것이고, 2020년 대비 2050년 수도권 인구규모는 96.5%, 비수도권의 경우 86.5%로 모두 감소하지만 비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sup>

동시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인구 고령화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국가 경제성장에 다소 부정적인 원인이 된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보건·복지에 따른 비용의 상대적 증가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사회 보장 시스템에 부담을 줄

---

1) 이보경·장요한·정예진·홍사흠·김동근(2022),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 국토연구원, 92~93쪽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이슈와 그로 인한 지역산업 쇠퇴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입구 급감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 기반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 문화시설의 축소와 폐지 논의 또한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118곳인 51.8%가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해당 지역 중 경기 6개와 인천 3개를 제외한 109개의 지자체가 비수도권에 해당하였다. 반면 김면·노수경·정수희(2022)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강원 양구군(인구 수 21,748명), 충남 금산군(인구 수 50,477명) 등의 경우 문화시설 합산 점수가 각각 56.2점, 38.7점으로 인구 수 대비 지역 내 문화시설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sup>2)</sup>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생활인구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통해 이를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로서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의 확충과 함께 문화기반의 확충 또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따라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정소양·이진희·유희연·김유란·정유선(2023)에 따르면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많은 국가의 경우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AIP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으며, 국내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 중 85.5%가 현재 거주 중인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함으로써 높은 AIP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sup>3)</sup> AI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의료, 교통 등의 기반환경이나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교류 및 여가를 위한 거점공간과 관련 프로그램 등이 언급된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서비스에 대한 개개인의 수요는 점차 다양화 고도화되는 추세이고,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2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만 66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삶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게 평가하였으나(중요함 54%, 보통 32.1%, 중요하지 않음 14%), 실제 문화예술 참여 경험률은 15.2%로 청소년(38.3%),

2) 김면·노수경·정수희(2022),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쪽

3) 정소양·이진희·유희연·김유란·정유선(2023),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 지원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79쪽

청년(36.8%), 중년(26.4%), 장년(21%)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sup>4)</sup> 또한 생활권 내 도서관 이용경험이 문화예술 활동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고 있기에 거주지 주변 생활권 내 문화예술 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 당면과제에 대한 문화시설 차원의 대응이 동시대의 관점에서 요구되고, 도서관 등 생활권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복합화 등 문화시설의 기능전환 및 조성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문화시설 중 지역단위 또는 인구기반으로 조성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문화시설 입지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문화시설 입지지표를 새로이 개발함으로써 인구위기 대응방안 차원에서 문화시설 조성 기준 및 구체적 실행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진다.

첫째, 인구위기에 관한 주요 이슈를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연관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문화시설 분포현황과 관련 정책동향 및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동시대 관점에서 인구위기와 문화시설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현 시점부터 2045년 추정 인구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래인구 변화를 추론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지표를 통해 복수의 대상지역의 집계구를 중심으로 2022년과 2045년의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를 평가한다.

셋째, 문화시설 및 서비스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의 설문 및 자문을 통해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구위기에 대응한 문화시설 입지지표 및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

4) 서우석(2023), 「2022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문화재단, 163~165쪽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 1. 연구범위

#### 가.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문화기반시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2024년 현재까지의 자료를 검토하되 장래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변화 예측의 경우 중기적 관점에서 2045년까지로 설정한다.

공간적 범위는 문화기반시설 중 인구 기반으로 조성되는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며, 전 국토를 공간적 범위로 고려하되, 주요 분석대상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라 인구감소 정도가 극심한 지역 및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인구소멸지역 총 89개 및 관리지역 총 18개 시·군·구를 종합하여 선정한다.

#### 나.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인구위기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문화시설의 설치 및 분포 현황을 분석하며, 인구위기 대응 정책 동향 및 관련 문화시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위기와 문화시설 현황을 분석한다. 두 번째는 인구분포 현황 및 장래인구 추정과 인구감소지역 문화시설 입지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문화시설 입지지표를 새로이 개발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세 번째는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문화시설과 타 시설 간 연계 방안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시설 복합화 및 프로그램 일시적 적용의 구체적 실행전략에 대해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변화 분석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 문화시설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2. 연구방법

### 가. 문헌분석

인구위기의 주요 이슈 및 지역단위 문화시설 현황 분석을 위하여 관련 정부문서, 연구기관 정책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기존 지역문화시설 관련 문헌, 포럼자료집, 세미나자료집,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례자료 등의 문헌을 분석한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이 이뤄지고, 특히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인프라 관련 계획 등 타 부처 관련 정책 내용을 검토한다.

### 나. 사례분석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국내외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문화시설 조성에 관한 정책 사례를 관리적 관점과 시설복합화 등 활용 관점에서 분석한다.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 등 도시차원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고찰하며, 문화시설 간 연계 도모 및 문화서비스의 확대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현황에 적용할 시사점을 도출한다.

### 다.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시각화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지리정보체계는 크게 시·군·구 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시각화하는 것과 인구감소지역의 문화시설 입지적정성을 분석·평가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분포 현황을 시각화하는 것은 문화시설 조성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포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입지적정성 평가에 관한 프로세스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QGI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근린 이웃 분석(Nearest Neighbor Analysis)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시설 군집화 정도를 분석하고, 거리 행렬(Distance Matrix)을 활용하여 집계구에서 시설까지의 물리적 접근성을 비교한다. 둘째, 2022년의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접근성 지표를 조정한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를 산출하고, 2045년 인구밀도 추정값을 반영하여 미래의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를 재산정하고, t-test를 통해 두 시점 간의 평균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각 문화시설에 따라 타 시설 간 연계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22년과 2045년의 지역별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를 비교분석한다.

### 라. 델파이(Delphi) 설문조사 및 분석

문화시설의 현장 종사자, 교수 연구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 문화현장 및 학계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지역문화시설 조성방안과 타 시설 연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총 2회에 걸쳐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본 델파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GIS 분석의 타 시설 간 연계를 가정한 시나리오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표 1-1〉 델파이 설문조사 대상자

		사례수(명)	비율(%)
전체		(20)	100.0
성별	남성	(10)	50.0
	여성	(10)	50.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20.0
	교수/연구자	(8)	40.0
	공공기관 종사자	(7)	35.0
	기타	(1)	5.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10.0
	2년~5년 미만	(1)	5.0
	5년~10년 미만	(2)	10.0
	10년 이상	(15)	75.0
연령	30대	(6)	30.0
	40대	(8)	40.0
	50대	(5)	25.0
	60대 이상	(1)	5.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40.0
	충청	(6)	30.0
	전라	(2)	10.0
	경상	(3)	15.0
	제주	(1)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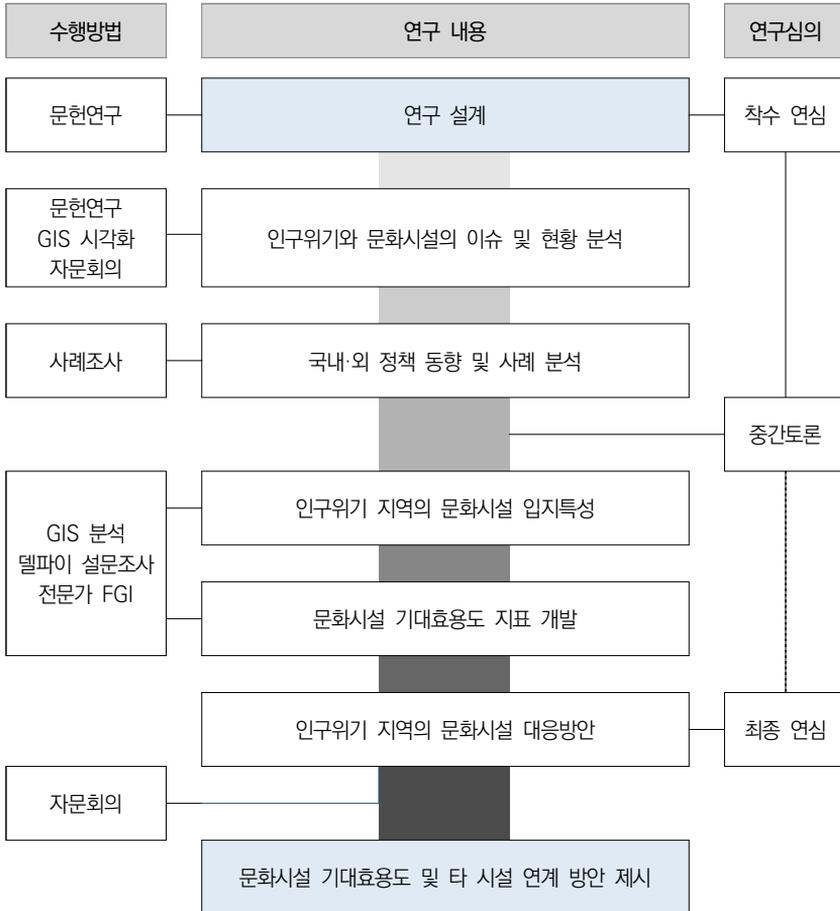
### 마.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실시

본 연구 내 타 연구방법(문헌분석, 사례분석, GIS 분석, 델파이 설문조사)으로부터 도출한 결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한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분야로 구분하여 각 시설별 종사자, 건축 및 GIS 분석 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3회 진행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지표와 GIS 분석결과, 그리고 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표 1-2〉 표적집단면접 대상자

구분		대상자	소속 및 직책
도서관	종사자	강원영	한국도서관협회 본부장
		오선경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건축	백한열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GIS 분석	김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박물관	종사자	기량	(前)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
		김연희	국민대학교 미술관박물관학전공 교수
	건축	한도완	소사건축 대표
	GIS 분석	김현수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미술관	종사자	박지수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
		정호희	이화익갤러리 실장
	건축	유영원	TOE건축사사무소 팀장
	GIS 분석	김민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제2장

## 인구위기와 문화시설 현황 분석



# 제1절 인구위기 관련 주요 이슈

## 1. 인구감소

현재의 인구를 유지함에 있어 요구되는 출산율은 2.1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에 연간 평균 출생아 수 약 101만 명에 따른 합계 출산율 4.53이었다가 1990년대에 1.57(65만 명)로 확인되었고, 202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1보다 낮은 0.84(27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81(26만 명)을 기록하였고, 출산율이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게 된다. 이에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Oxford Institute of Population Ageing)는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언급하며 그 심각성을 지적하였다.<sup>5)</sup>

2021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0년 처음으로 사망자 수(304,948명)가 출생아 수(272,377명)에 비해 많아짐에 따라 인구의 자연 감소가 현실화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하였다. 전국 시군구의 4분의 1은 2000년 이전에 데드크로스 현상을 이미 경험하였고, 현재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최대 6.9배를 넘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발생하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20~30대 청년층 중심의 사회적 이동 심화로 인해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sup>6)</sup> 2020년의 경우 50.1%라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와 지역 불평등 이슈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sup>7)</sup> 전국적으로 총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추세이고, 감소 시점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확인된다. 인구의 자연감소 시기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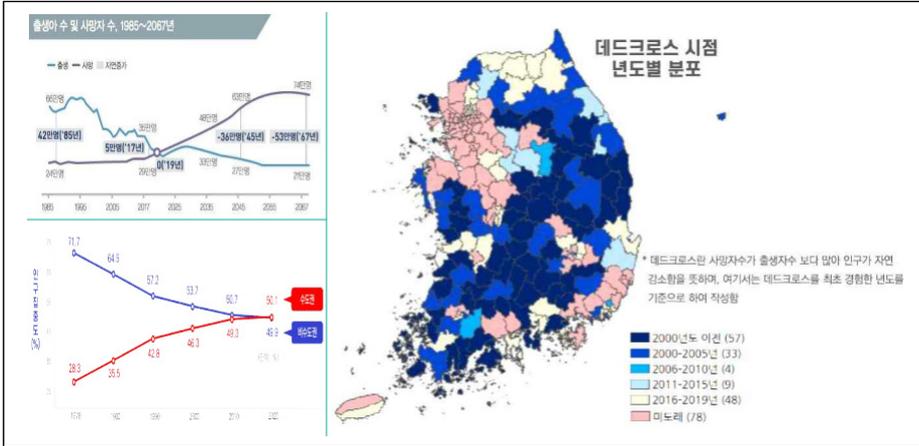
5) 김기홍(2023), 「대한민국 소멸보고서」, 16~17쪽

6)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1990년 42.8%에서 2000년 46.3%, 2010년 49.3%, 2020년 50.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7) 행정안전부(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3~4쪽

경북, 경남이 2020년 이전부터 시작된 반면,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인구는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20년 이후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규모 비중은 역전하게 되었다.

[그림 2-1] 대한민국 인구변화 추이 및 시·군·구별 데드크로스 실태



출처: 행정안전부(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무엇보다 사회 내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인 인구고령화는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라 발생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인구가 노년에 도달하게 되고, 동시에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젊은 세대의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과거 고출산 시대에 태어난 인구 규모와 더불어 국민의 영양 및 건강상태의 개선, 보건의료분야의 양적·질적 서비스 향상 등으로 인해 개인의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절대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고, 특히 유소년 인구 및 생산인구가 급감한데 반해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를 초래한다. 인구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산이 지속되면 충분한 수의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대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레 인구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상호 비례하는 관계로써 출산율이 감소하면 젊은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어 인구고령화가 촉진되고, 이는 다시 인구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경제적 자원에 대한 수요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출산 결정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인구고령화는 사회 내 노동 시장, 의료시스템, 연금제도 등에 대한 부담 가중의 문제와 더불어 생산인구의 감소는 각 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 경제 성장 둔화 및 경제적 압박과 직결된다.

인구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른 시점 산업화가 진행된 유럽 국가들에서 고령자 비율이 7%에 도달하는 고령화 사회는 1864년 프랑스, 1887년 스웨덴, 1929년 영국, 1932년 독일을 중심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국가가 고령자 비율 14%에 도달한 고령사회 시점은 1972년 독일과 스웨덴, 1975년 영국, 1979년 프랑스 순으로 진입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1994년에 고령사회가 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유럽 국가들이 길게는 115년에서 짧게는 40년 걸린 데 반해 불과 24년 만에 전환되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도달했고, 일본 보다도 빠른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점은 상당한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sup>8)</sup>

2024년 2월 기준 최근 3개월 간 국내 언론기사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알아본 결과, ‘저출산(가중치 24.99)’, ‘지역소멸(가중치 10.41)’, ‘저출생(가중치 9.43)’ 순으로 연관성이 높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위기 이슈가 지역소멸이라는 키워드와의 높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남, 광주, 제천, 음성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명이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포함된 것 또한 지역소멸 차원에서 주목해야할 사안이다.

[그림 2-2]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연관 키워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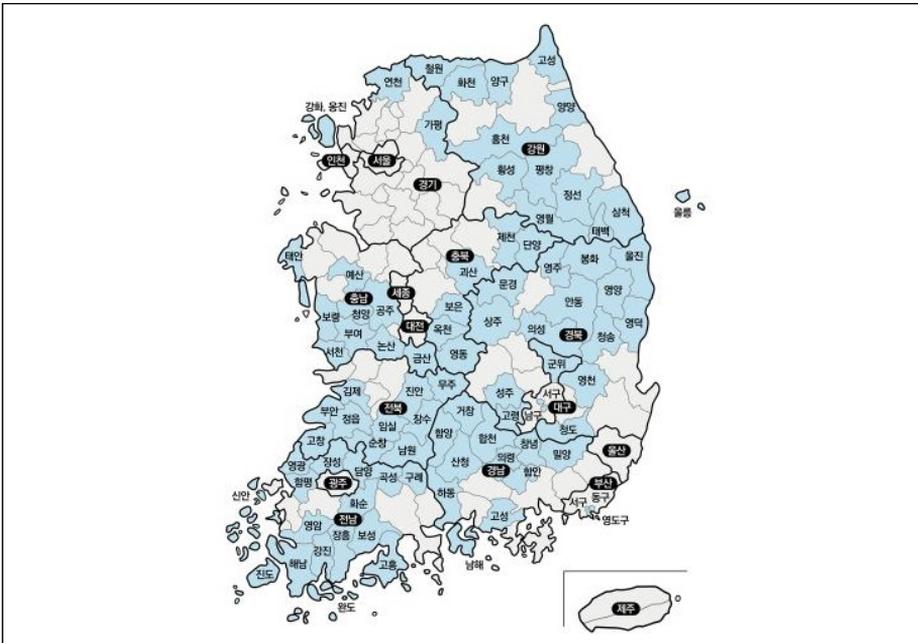
8) 정현숙(2021), 「인구위기국가 일본」, 45쪽

## 2. 지역소멸

지역소멸은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인프라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집중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이동하고,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각 지역사회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가 발생되고, 특히 운영비용 대비 효율이 낮아짐에 따라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대두된다. 특정 지역의 소멸은 타 지역과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 등 전반적인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은 도시화 비율이 90%가 넘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광역시가 인근 중소도시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지역도시의 쇠퇴 조짐은 1990년대 중반부터 확인되기 시작한 반면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점은 2000년대 초반이다.<sup>9)</sup>

[그림 2-3]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9) 오익근(2021), 「중소도시 브랜드 전략」, 13~14쪽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2004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여기서 정의한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021년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현황의 경우, 11개 시·도의 89개 시·군·구가 해당되고, 이는 전국 인구의 10%, 청년 인구의 7%, 고령 인구의 81% 및 국토 면적의 59%를 차지한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더불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역외유출을 의미하는 사회적 감소를 포함하여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였고, 해당 지수는 인구증감을까지 포함한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sup>10)</sup> 이를 통해 도출된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큰 소멸위기지역은 총 59개 시·군·구가 해당되고, 이는 행정안전부(2021)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곳과는 55곳이 같은 지역으로 61.8%의 중복률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면 전남이 13곳으로 전국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고, 강원 및 경북이 각각 10곳(16.9%)과 9곳(15.3%)으로, 이는 전국 대비 54.2%를 기록한다. 해당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인구고령화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한편 강현미·김준래(2023)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프라 접근성현황 및 복합화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 운영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의 운영실태를 진단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을 대상으로 생활인프라 접근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생활인프라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이 이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김기홍(2023), 「대한민국 소멸보고서」, 33쪽

11) 산업연구원(2022),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3~35쪽

〈표 2-1〉 광역자치단체별 인구감소지역과 비해당지역의 생활인프라 접근성 평균

(단위: m)

구분	인구 감소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보건소	수영장	생활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시민·예술회관	박물관·미술관	도시공원	도시지역권·광역권공원
서울	○	-	-	-	-	-	-	-	-	-	-	-	-	-	-
	×	610	383	761	370	247	1,705	1,435	1,088	1,096	5,074	2,217	2,283	274	1,472
경기	○	1,855	1,837	5,273	4,969	2,754	8,654	2,064	7,862	6,465	22,525	10,778	10,630	3,177	16,272
	×	812	801	2,428	1,684	1,251	4,844	2,176	3,955	3,326	11,981	5,854	5,540	1,326	4,309
부산	○	683	370	1,096	510	359	1,045	1,484	1,266	1,103	1,461	1,794	2,032	544	2,133
	×	811	453	1,682	670	668	1,985	1,762	2,117	2,134	3,708	3,507	2,870	415	2,539
대구	○	824	413	1,171	680	477	1,609	1,543	1,740	1,824	1,754	1,456	2,167	394	2,022
	×	736	525	1,941	1,216	782	2,983	2,455	4,236	3,477	4,859	3,949	4,355	651	2,571
인천	○	2,520	2,327	11,400	20,974	3,057	30,127	1,881	30,233	11,345	27,156	31,776	29,278	4,132	29,128
	×	590	456	1,479	850	494	2,953	2,025	2,988	3,071	3,601	3,942	3,271	700	2,492
광주	○	-	-	-	-	-	-	-	-	-	-	-	-	-	-
	×	492	494	2,224	911	799	3,068	2,481	2,940	2,718	3,241	3,346	3,820	555	2,753
대전	○	-	-	-	-	-	-	-	-	-	-	-	-	-	-
	×	603	508	2,121	1,115	790	3,359	1,968	2,536	2,815	5,084	4,250	4,121	769	3,662
울산	○	-	-	-	-	-	-	-	-	-	-	-	-	-	-
	×	782	666	2,926	1,324	1,151	2,751	2,667	3,312	3,721	6,138	4,950	4,497	923	4,227
세종	○	-	-	-	-	-	-	-	-	-	-	-	-	-	-
	×	869	921	4,665	2,573	2,077	12,478	1,841	4,431	4,554	8,438	8,405	6,726	3,065	5,936
강원	○	2,002	1,729	7,252	5,765	4,693	19,109	2,698	12,155	11,176	22,466	11,562	10,711	4,273	8,984
	×	1,275	1,123	5,691	3,252	2,239	9,972	2,652	9,723	8,437	16,886	7,938	7,842	2,839	5,085
충북	○	1,960	1,957	8,138	5,252	5,143	8,796	1,937	11,295	8,893	19,312	9,446	7,924	4,080	11,782
	×	1,295	1,251	4,147	2,968	2,289	7,262	1,896	6,531	6,188	17,614	8,420	6,718	2,246	7,702
충남	○	1,634	1,647	6,156	3,853	5,465	9,762	1,861	13,300	9,395	15,966	9,046	8,463	4,432	13,507
	×	1,247	1,178	4,811	2,883	2,769	7,521	1,780	12,675	8,287	14,080	7,076	9,060	2,244	5,580
전북	○	1,769	1,675	7,815	3,707	5,825	9,560	1,756	9,572	8,248	15,092	12,385	9,424	3,822	6,525
	×	999	955	3,725	2,453	2,678	6,812	2,028	5,545	5,082	11,868	7,328	6,295	2,444	4,451
전남	○	2,029	2,049	8,767	5,800	5,803	14,164	1,954	11,409	11,683	19,555	12,128	9,585	3,965	8,875
	×	1,136	1,164	5,484	2,669	2,660	6,779	1,937	7,695	7,653	18,595	8,061	8,662	2,920	7,291
경북	○	1,991	2,111	8,561	6,068	4,038	12,920	2,143	21,031	9,879	32,312	12,154	10,827	3,704	9,546
	×	1,279	1,315	6,577	3,804	2,725	9,377	2,071	8,266	7,878	20,002	9,319	9,016	3,198	7,276
경남	○	2,125	1,825	8,116	4,307	4,180	16,661	1,855	11,076	8,428	19,758	9,735	8,564	3,331	7,066
	×	1,088	979	4,684	3,017	1,798	15,363	2,354	8,692	8,567	22,115	8,977	7,290	2,316	5,567
제주	○	-	-	-	-	-	-	-	-	-	-	-	-	-	-
	×	1,270	1,150	3,931	1,900	3,510	16,903	2,151	21,612	8,575	15,886	16,991	5,899	3,420	10,218

출처: 강현미·김준래(2014),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의 운영실태 진단」, 건축공간연구원, 43~44쪽

또한 지역별 편차가 있기는 하나 생활문화센터, 박물관·미술관, 시민·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경우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편이고, 생활체육관,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 또한 접근성이 낮은 편에 속하였다. 광역자치단체별 인구감소지역과 비 해당지역의 생활인프라 접근성 격차를 확인한 결과 일부 시설의 경우 동 지역에서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생활문화센터, 박물관·미술관, 시민·예술회관 등과 같은 문화시설이 해당하였다.<sup>12)</sup> 문화시설의 경우 생활인프라 중 거점시설에 속하는 시설로 인구감소지역의 동 지역에 비해 비해당지역의 동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에 접근성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2〉 광역자치단체별 인구감소지역과 비해당지역의 생활인프라 접근성 차이

(단위: m)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보건소	수영장	생활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시민·예술회관	박물관·미술관	도시공원	도시지역권·광역권공원
경기	1,043	1,036	2,845	3,285	1,503	3,810	-112	3,907	3,139	10,544	4,924	5,090	1,851	11,963
부산	-128	-83	-586	-160	-309	-940	-278	-851	-1,031	-2,247	-1,713	-838	129	-406
대구	88	-112	-770	-536	-305	-1,374	-912	-2,496	-1,653	-3,105	-2,493	-2,188	-257	-549
인천	1,930	1,871	9,921	20,124	2,563	27,174	-144	27,245	8,274	23,555	27,834	26,007	3,432	26,636
강원	727	606	1,561	2,513	2,454	9,137	46	2,432	2,739	5,580	3,624	2,869	1,434	3,899
충북	665	706	3,991	2,284	2,854	1,534	41	4,764	2,705	1,698	1,026	1,206	1,834	4,080
충남	387	469	1,345	970	2,696	2,241	81	625	1,108	1,886	1,970	-597	2,188	7,927
전북	770	720	4,090	1,254	3,147	2,748	-272	4,027	3,166	3,224	5,057	3,129	1,378	2,074
전남	893	885	3,283	3,131	3,143	7,385	17	3,714	4,030	960	4,067	923	1,045	1,584
경북	712	796	1,984	2,264	1,313	3,543	72	12,765	2,001	12,310	2,835	1,811	506	2,270
경남	1,037	846	3,432	1,290	2,382	1,298	-499	2,384	-139	-2,357	758	1,274	1,015	1,499

※ 값이 클수록 접근성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제외함

출처: 강현마·김준래(2014),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의 운영실태 진단」, 건축공간연구원, 45쪽

2022년 6월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12) 강현마·김준래(2023),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의 운영실태 진단: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41~48쪽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하거나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환경의 개선, 교육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교통 및 통신 인프라의 개선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젊은 인력과 가족 단위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와 경제 활동을 강화한다.

같은 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기반시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와 조사 지원·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화시설을 포함한 생활인프라와 관련한 특례 및 지원으로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및 문화기반의 확충과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문화기반의 확충 특례를 통해서 인구감소지역에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대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공동 학예사 운영이 가능케 한다. 이 외에도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가·허가·승인·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및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순회 문화공연·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의 지원이 가능하다.

## 제2절 문화시설 현황 분석

### 1. 문화시설 배치 기준

#### 가. 문화시설 법적 구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시설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의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별표 1에서 다음과 같이 문화시설을 분류한다.

〈표 2-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시설 상세분류

문화시설 분류	내용	
공연 시설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문화시설 분류		내용
전시 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화장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도서 시설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역 문화 활동 시설	문화의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문화 보급 전수 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전수화관	지방 고유의 무형유산을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출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분류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에 더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을 포함하고 있다.

〈표 2-4〉 생활문화시설 범위

생활문화시설	규정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지역자치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마을회관
생활문화센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지역서점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출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전시시설로서,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000㎡ 이상의 시설과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설명회장 등의 전시회부대행사에 필요한 시설, 관련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공연장,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등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6호에서도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해 학교·공공청사,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 시설 등으로 정하였으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문화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 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문화시설의 범위는 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이 적은 경우에도 문화시설로 포괄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의 소비 활동과 관련된 시설만을 문화시설로 정의하였으나, 그외 법률에서는 문화예술이 아닌 다른 유형의 서비스 혹은 문화예술 관련 생산활동이 발생하는 시설까지 포함하여 문화시설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함윤주 외, 2019).

## 나. 문화시설의 역할 변화

라도삼·이정현(2023)은 문화시설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왔다고 하였다. 1970년대 이전에는 국가적인 대규모 행사장과 필수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시기 문화시설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주요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국립극장(1973), 세종문화회관(1978), 국립중앙박물관(1972), 국립현대미술관(1969)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0년대에는 전문 예술시설이 강조되었다. 예술의 전당(1988) 등과 같이 국가 상징 전문 문화시설들이 대거 건립되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예술 창작 및 공연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의

문화적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문화복지와 문화의 민주화가 강조되면서 생활권 문화시설의 확산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에는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등이 확충되었으며, 지방자치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시민 문화 활동 참여의 기반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창작공간과 상징적 문화시설이 나타났다. 서울시의 금천예술공장(2009), 문래예술공장(2010) 등의 창작공간은 예술가들에게 창작환경을 제공하며, 동시에 도시의 창의성을 높이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2009) 등의 도시 상징 문화시설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시민주도형 문화시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마을예술창작소, 마을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시설이 향유 공간을 넘어, 주민 참여와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장소로 발전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라도삼·이정현(2023)이 문화시설의 역할이 시대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밝혔듯이,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과 같은 동시대의 이슈에 따라 문화시설의 역할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정책변화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다. 문화시설 공급 모형

문화시설은 콘텐츠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역시 다르다. 따라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 기반을 강화하는 데는 다양한 전략이 존재한다(라도삼·이정현, 2023). 우선 기본적인 문화시설 확충에 있어 가장 기초적으로 쓰이는 전략은 Teiz(1968)가 제시한 ‘도시공공시설 입지론’을 바탕으로 인구나 면적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필요한 문화시설의 수를 정하는 것이다. ‘도시공공시설 입지론’은 동일한 규모의 시설을 일정 지역 내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양혜원, 2015).

‘도시공공시설 입지론’은 거리최소화 모형(P-median Location Model), 한정시간 입지모형(Set Covering Location Model), 최대수요 입지모형(Maximal Covering Location Model)으로 구분된다(라도삼·이정현, 2023).

### 1) 거리최소화 모형<sup>13)</sup>

거리최소화 모형은 Hakimi(1964)가 개발한 모형으로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총 이동거리 최소화 함수로써 수요자와 시설물 간의 총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형평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시설물의 수는 정해져 있고 수요자는 가장 가까운 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을 적용하면 수요자의 분포 상 중심의 위치에 시설이 입지하게 된다. 이 모델에서는 총 이동거리가 주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동거리의 변이는 간과하게 된다. 전체 이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접근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입지를 선정하므로 공급과 분배비용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입지 선정에 적합하다. 경찰서, 소방서, 전화국, 공공의료, 환경처리시설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이 요구되는 기반시설이나,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자동차 영업소처럼 민간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수익시설, 통신 및 전력수송집선장치 위치선정, 파이프라인(Pipeline) 시스템 설계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응용 분야에서 자주 활용된다(박보라 외, 2013). 즉, 거리최소화모형은 최대한 많은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시설의 효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모형이다(라도삼·이정현, 2023).

### 2) 한정시간 입지모형

한정시간 입지모형은 서비스의 가치는 최대 허용 거리 내에서는 변하지 않으나 그 거리를 넘어서면 급격히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Toregas et al., 1971; 양혜원, 2015) 서비스 이용자와 공공시설 간 최대 허용거리를 미리 정해놓고 그 조건의 만족범위 내에서 최적입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안영웅 외, 2020). 앞의 ‘거리최소화 모형’이 가능한 많은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구하였다면, 한정시간 입지모형은 이용 가능한 거리-시간을 기준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도삼·이정현, 2023).

### 3) 최대수요 입지모형

최대수요 입지모형은 Church-Revelle(1974)가 제시한 모형으로 시설물의 개수 혹은

---

13) 고준호·심진섭(2012). P-median model 을 활용한 서울시 전기택시 배터리 교환소 최적입지 선정.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66, 657-662.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때, 시설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어진 제약 조건 아래서 시설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요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이해빈 외, 2023). 즉, 시설 이용자 수를 극대화하여 문화시설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이 모형의 목표이다(라도삼·이정현, 2023).

### 라. 문화시설 배치 기준

그동안 도시공공시설 입지론을 바탕으로 문화시설의 확충 이루어져 왔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차원에서 공연장이나 전시시설,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수요 충족이 강조되었다(라도삼·이정현, 2023).

〈표 2-5〉 문화시설 설치 및 공급 기준

구분	기준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8, 매 5년 마다 수립)에 의해 설치</li> <li>• 2028년까지 1,400관을 건립할 것을 목표로 함(3.7만 명 당 1개관, OECD 평균 기준)</li> <li>•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반영</li> <li>• 도서관 입지: 인구밀집지역 및 도보 12~20분(반경 1~1.5km) 접근 규정</li> </ul>
박물관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2005~2011, 2004년 수립)에 근거</li> <li>• 박물관 미술관: 인구 5만 명 당 1개관 (OECD 평균 3.7만 명 당 1개관)</li> <li>•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 1관 추가 가능하고 대도시 인구기준으로 건립 허용</li> <li>•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인구 50% 증가 시 1개소 추가건립 가능)</li> <li>•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당 1관 건립(인구 50% 증가 시 1개소 추가건립 가능)</li> </ul>

현재 국내 문화시설의 설치 및 공급은 OECD 주요국가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근거로 문화시설 확충목표를 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함윤주 외(2019)에 따르면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국민의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경우 도시의 규모, 지리적 여건, 인구구조, 수요욕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서비스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sup>14)</sup> 그러나 이는 시설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기준 없이 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지역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설치 및 공급을 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생활인프라 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생활인프라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기초생활인프라 범

14) 함윤주 외(2019), 「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7~38쪽

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변경 등을 제안한 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90%를 기준으로 접근성 기반 생활인프라 최소기준안을 도출하면 공공거점도서관은 3.7km(차량이동 약 9분), 전시시설은 9.3km(차량이동 약 23분), 경기장은 6.0km(차량이동 약 14분), 체육관은 7.6km(차량이동 약 18분), 수영장은 15.1km(차량이동 약 36분), 사회복지관은 9.5km(차량이동 약 23분), 노인복지관은 16.3km(차량이동 약 39분), 보건소는 8.5km(차량이동 약 20분), 응급의료기관은 7.5km(차량이동 약 18분), 지역거점공원은 4.1km(차량이동 약 10분)으로 확인된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관련부처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정 후 다음과 같은 국가최소기준안을 도출하였다.<sup>15)</sup>

〈표 2-6〉 접근성 기반 생활인프라 최소기준안

기능	시설	세부시설	국가최소기준안
학습	공공도서관	국공립도서관(국립, 교육청, 도립, 시립)	차량이동 약 10분
문화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시설	차량이동 약 20분
체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차량이동 약 15~30분
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차량이동 약 20~30분
의료	보건소	-	차량이동 약 20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차량이동 약 30분
휴식	지역거점공원	10만 제곱미터 이상	차량이동 약 10분

출처: 구형수(2018), 「생활인프라 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96쪽

최근에는 기초생활시설 국가적 최저기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누리는 기초생활인프라 수준과 국민의 희망수요를 고려해 차량 및 도보 기준 시간거리를 제시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및 기존 기준을 반영하여 선연적 기준을 제시하는 한계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인프라는 근린 내 주민의 활동을 고려하여 15개 시설로 기능을 구분하고 주민편의 서비스, 도시재생 파급효과를 위한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시설의 규모와 위계를 고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적 실현이 필요한 지역거점시설과 생활 밀착 서비스가 필요한 마을단위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sup>16)</sup>

15) 구형수(2018), 「생활인프라 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37~38쪽

16) 국토교통부(2019),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3~4쪽

[그림 2-4]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설치 단위	기능	시설	관련법	공급 현황			이용 현황	장래수요(분)		기존 기준	최저 기준	
				등급 (인구90%)	구간 한계	시간 가피		평균	최빈 값			
마을 단위 (도보)	교육	유치원	유아교육법	9등급 (인구90%)	771m	16	12.1	9.6	10	1개소/ 2-3천 세대	5~10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9등급 (인구90%)	731m	15	9.5	8.5	10	1개소/ 4-6천 세대 학급당 학생수 : 21.5명	10~15	
	학습	도서관	도서관법	4등급 (인구90%)	1.3km	27	11.2 마을도서관	10.3	10	직은도서관: 500가구 이상 1개소	10~15	
	돌봄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9등급 (인구90%)	404m	8	9.6	7.5	5		5	
		마을 노인 복지	경로당	노인복지법	8등급 (인구90%)	289m	6	8.7	6.2	5	1개소/3만	5~10
			노인 교실	노인복지법	8등급 (인구90%)	8.5km	170	11.8	8.9	10		
		기초 의료 시설	의원	의료법	4등급 (인구90%)	1.4km	28	14.3	11.6	10		지역 보건의로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
			약국	약사법	4등급 (인구90%)	1.2km	24	10.9	8.4	10		
		건강생활 지원센터	지역보건법	-	-	-	-	-	-		10	
	체육	생활 체육 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간이운동장	체육시설법	4등급 (인구90%)	932m	19	12.8	10.8	10	생활체육 시설면적 : 4.2㎡/1인	10
		휴식	도시공원 (묘지공원 제외)	도시공원법	4등급 (인구90%)	761m	15	17.5	13.7	10	공원 면적 9㎡/1인	10~15
	생활 편의 시설	주거 편의 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폐기물 관리법	-	-	-	2.9분	3.2	5		5
			무인택배함					(조사생략)	4.2	5		
		소매점	건축법	4등급 (인구90%)	372m	8	11.4	9.7	10		10	
	교통	공영주차장	주차장법	5등급 (인구90%)	2.3km	46	3.1	5.1	5	주거지내 주차장확보율 : 70%	주거지역 내 주차장 확보율 70% 이상	
지역 거점 (차량)	학습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인구90%)	11.5km	27	16.8 (자자체+ 국립)	13.4	10	지역거점 도서관: 1개소/3만	10	
	돌봄 복지 시설	사회 복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인구90%)	16.3km	39	16.9	13.3	10		20~30	
		보건소	지역보건법	(인구90%)	8.5km	20	19.7	13.8	10		20	
	의료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의료법	(인구90%)	7.4km	18	28.3	18.7	10		30	
		문화	공공 문화 시설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 진흥법	(인구90%)	9.4km	23	30.7 공연장	22.4	10		20
			전시시설		(인구90%)	8.8km	21	40.2	25.9	30		
	체육	경기장		(인구90%)	4.2km	10	-	-	-		15~30	
		체육 체육관	체육시설법	(인구90%)	7.6km	18	-	-	-			
		수영장		(인구90%)	15.1km	36	-	-	-			
	휴식	지역거점공원 (묘지공원 제외, 10만㎡ 이상)	도시공원법	(인구90%)	4.1km	10	-	-	-		10	

※ 시간거리는 도보 3km/h, 자동차 25km/h로 환산   : 차량 기준 시간거리   : 도보 기준 시간거리

출처: 국토교통부(2019),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2019년 4월, 국무조정실에서 영유아·청소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모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를 최소수준 이상 공급하고자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하

였다. 『생활SOC 3개년계획(안)』에서는 분야별로 시설을 구분하였으며, 문화에는 도서관과 생활문화공간이 포함되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생활문화공간으로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메이커스페이스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표 2-7〉 생활SOC 공급기준 (2019.04.기준)

생활 SOC	공급기준
공공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기준: 2019년 기준 5만 명당 1개소(1,042개), 2022년까지 4.3만 명당 1개(1,200여 개)로 증가 예정</li> <li>면적기준: 2019년 기준 12분(5km)에서 2022년까지 10분(4km) 이내로 단축 예정</li> </ul>
작은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기준: 2019년 기준 8.5천 명당 1개소(6,058개), 2022년까지 7.6천 명당 1개(6,700여 개)로 증가 예정</li> <li>작은 도서관은 기존 수요와 더불어 공공도서관의 보완재로 활용 예정</li> </ul>
생활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문화센터는 기초지자체(시·군·구) 당 1개 이상 조성 예정</li> <li>2018년 기준 141개(시·군·구당 0.6개소), 2022년 기준 300여 개(시·군·구당 1.3개소 이상)으로 증가 예정</li> </ul>
꿈꾸는 예술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교육전용공간(꿈꾸는 예술터)은 광역지자체(시·도) 당 1개 내외로 조성 예정</li> <li>2018년 기준 5개에서 2022년 기준 15개로 증가 예정</li> </ul>
메이커 스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이커스페이스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립과 '전문창작과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립으로 구분하여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중심으로 배치를 목표로 함</li> <li>2018년 기준 65개에서 2022년 기준 360개로 증가 예정</li> </ul>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목표는 인구 관점에서 설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기준은 시설마다 상이하며, 생활인프라로서의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화시설의 공급과 배치에 대한 기준도 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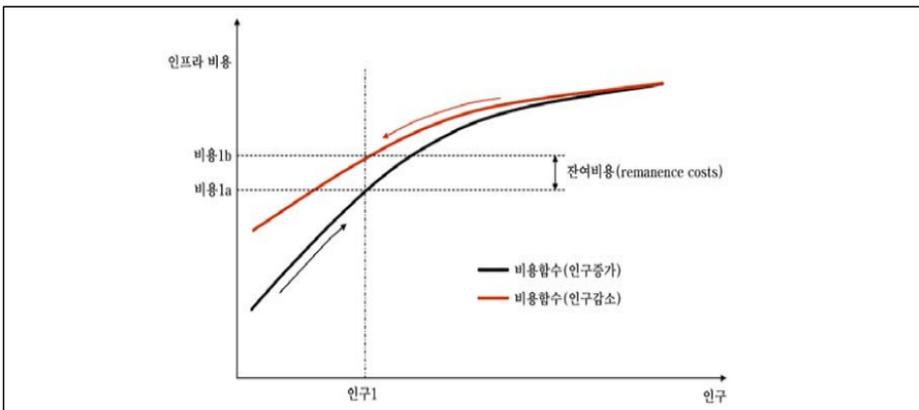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인구기준으로 생활인구<sup>17)</sup>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7)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하는 인구관리 정책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도입된 개념으로 초단기유동인구, 단기 체류자, 중·장기 체류자, 외국인 또는 관계자의 큰 카테고리로 유형화 된다.

구분	생활인구 유형
초단기 유동인구	통근·통학자, 쇼핑·의료·교육·문화·종교 활동 등 생활 목적의 유동인구
단기 체류자	1주일 이내 체류자
중·장기 체류자	학생, 직장인·사업체 종사자, 군인, 연구자, 출향인 등 정기방문자, 휴양·요양자 및 기타(종교시설 입소자)
외국인 또는 관계자	다문화·결혼이민자·외국인자녀, 유학생, 장·단기 외국인 취업자, 업무·관광 등 여행객

생활인프라 여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생활인프라의 성공적 조성으로 생활인구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으며, 생활만족도의 향상으로 인해 더 많은 생활인구가 유치되고 생활인구수 증가에 따른 생활인프라 추가조성·개선으로 순환적 생활인구 정책체계가 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청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경제활동·일자리 여건, 보건·복지 여건 마련과 함께 각종 문화콘텐츠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며, 체류인구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도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연계 시설 등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문화시설 등의 양적 확대와 배치가 중요하나, 인구감소는 생활인프라의 유지비용을 증대시켜 지자체의 재정상황 악화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구형수 외(2016)은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과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의 생활인프라 유지에 대한 비용함수가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 인구규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불필요한 유지비용이 발생함을 밝힌바 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인 생활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주요 공공시설 운영으로 인한 적자규모가 2014년 4,904억 원에서 2016년 6,874억 원으로 40.2%나 증가하였으며, 운영수익은 2014년 6,612억 원에서 2016년 7,322억 원으로 10.8% 증가한 반면에 운영비용은 같은 기간 11,516억 원에서 14,196억 원으로 23.3% 증가하였다.<sup>18)</sup>

[그림 2-5] 인구감소 지역 내 생활인프라 유지에 관한 비용함수



출처: 구형수 외(2016)

18) 구형수(2018). 생활인프라 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 2. 문화시설 분포 현황

### 가. 문화기반시설 현황

문화시설 중 문화시설 공급 및 배치기준이 지역의 인구 및 이동거리로 설정된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구분	시설 수		비고
	('03년 기준)	('23년 기준)	
국립도서관	460개	4개	780개 증가
공공도서관		1,236개	
박물관	289개	913개	624개 증가
미술관	66개	286개	320개 증가
생활문화센터		189개	189개 증가
문예회관	122개	272개	150개 증가
지방문화원		231개	231개 증가
문화의집	135개	69개	66개 감소
문학관	-	48개	48개 증가
합계	1,072개	3,248개	2,176개 증가

[그림 2-6]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출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결과 활용 연구자 작성

고령인구수가 유소년 인구수를 초과하여 인구 오너스기(Demographic Onus)로 진입한 2017년부터 문화기반시설 증감 추이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모두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인구현황과 지역별 분포현황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법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

〈표 2-8〉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개념

분류	관련 법령	내용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 나. 분석대상 문화시설의 시도 단위 분포현황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국내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현황데이터를 확보하였다. 공개된 최신자료의 시점에 기반하여 2022년을 현황분석 초기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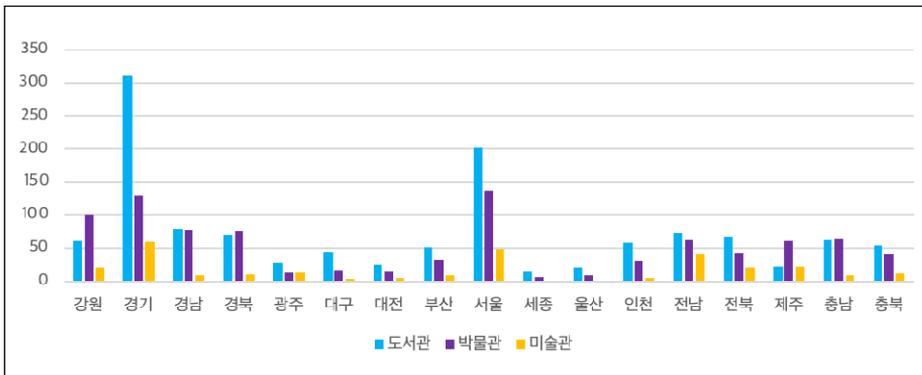
전국 시도 단위 문화시설 분포현황에 따르면 도서관의 경우 경기와 서울에 대체로 밀집해있다. 박물관은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강원도에 100여개의 시설이 밀집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광주, 대구, 대전, 세종, 울산 등의 지역은 대다수가 광역지자체 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수가 적은 편에 속한다. 미술관은 경기, 서울, 전남지역에 다수 분포해있다. 이상의 분포현황에 따르면 공공 문화시설의 대다수가 수도권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 광역지자체임에도 시설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9〉 전국 시·도 단위 문화시설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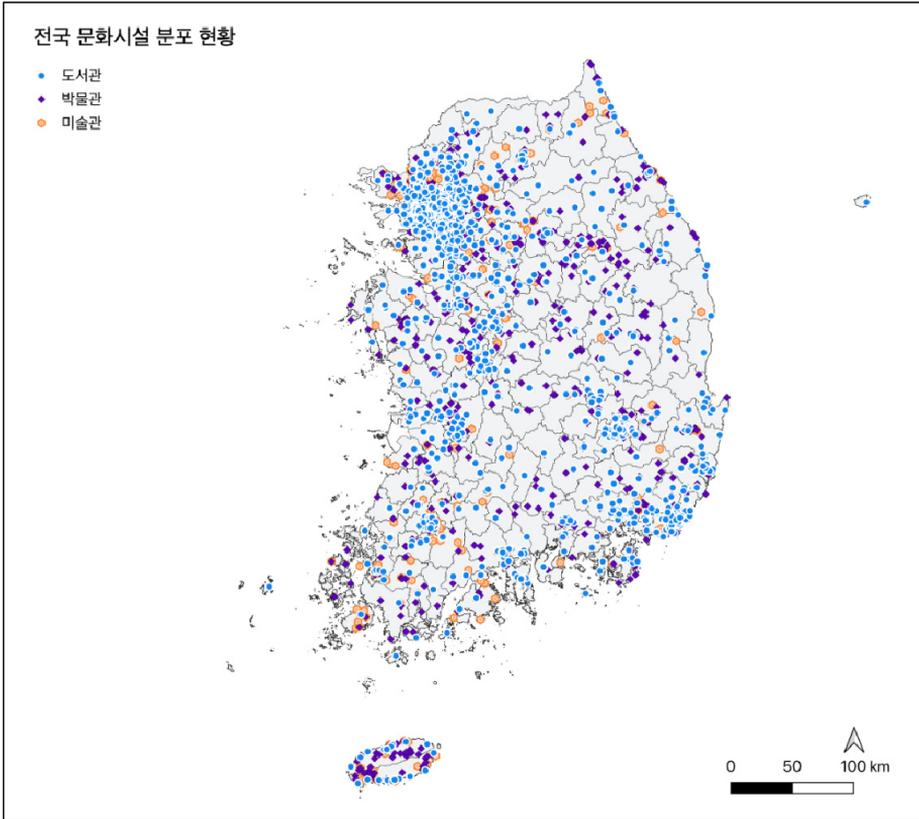
(단위: 개수)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합계
강원	61	100	21	182
경기	310	129	59	498
경남	79	78	10	167
경북	71	77	11	159
광주	27	13	14	54
대구	44	17	4	65
대전	25	15	5	45
부산	51	33	9	93
서울	202	136	49	387
세종	15	7	0	22
울산	20	10	1	31
인천	58	30	5	93
전남	73	62	41	176
전북	66	43	20	129
제주	22	61	22	105
충남	62	64	10	136
충북	54	42	12	108
합계	1,240	917	293	2,450

[그림 2-7] 2022년 전국 시·도 문화시설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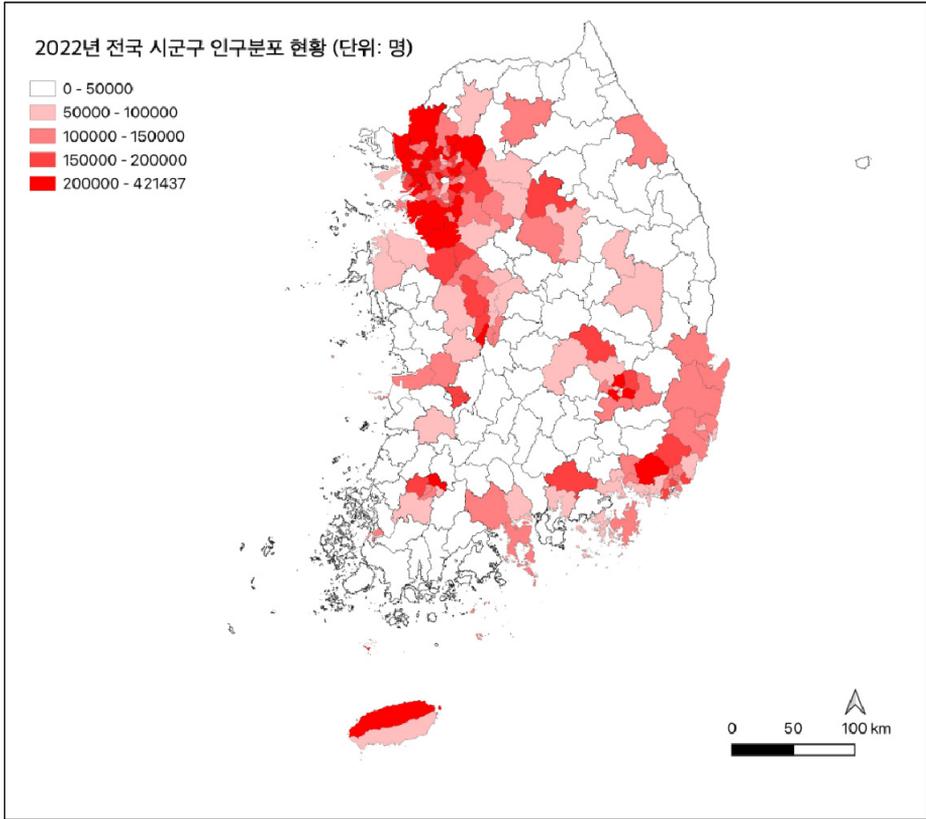
[그림 2-8] 전국 문화시설 분포현황 (2022년 기준)



#### 다. 분석대상 문화시설의 시·군·구 인구수에 따른 분포현황

분석 시점 2022년 전국 시·군·구 인구분포 현황은 그림 2-9, 전국 시·군·구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개수는 그림 2-10과 같다. 표 2-10은 시·군·구별 총인구수를 고려하여 인구 10만 명 당 문화시설별 향유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서울 종로구, 중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 등 특정 지역에 밀집해있어 인구밀도 대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도서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밀도 대비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임실군 등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인구수 대비 시설의 개수가 높게 분포해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2-9] 2022년 전국 시군구 인구분포 현황



<표 2-10> 인구 10만 명 당 문화시설 향유 수준

(단위: 개수)

구분		인구 10만 명당 박물관	인구 10만 명당 미술관	인구 10만 명당 도서관
서울	종로구	55	26	10
	중구	29	2	3
	용산구	8	4	4
	성동구	2	1	5
	광진구	2	0	4
	동대문구	3	0	5
	중랑구	0	0	3
	성북구	4	2	6
	강북구	2	0	5
	도봉구	1	0	6
	노원구	2	1	4
	은평구	1	0	3
	서대문구	5	0	2

구분		인구 10만 명당 박물관	인구 10만 명당 미술관	인구 10만 명당 도서관
부산	마포구	3	0	3
	양천구	0	0	5
	강서구	1	0	1
	구로구	1	0	6
	금천구	0	0	4
	영등포구	1	1	3
	동작구	1	0	4
	관악구	1	0	2
	서초구	2	3	5
	강남구	3	2	6
	송파구	2	1	4
	강동구	1	0	4
	중구	10	5	10
대구	서구	4	6	9
	동구	0	0	5
	영도구	6	0	4
	부산진구	2	1	2
	동래구	2	0	3
	남구	5	0	4
	북구	1	0	5
	해운대구	1	1	4
	사하구	1	1	1
	금정구	4	2	3
	강서구	1	0	4
	연제구	1	0	2
	수영구	0	0	3
사상구	2	0	2	
기장군	1	0	8	
인천	중구	10	3	5
	동구	2	0	1
	서구	0	4	6
	남구	0	0	7
	북구	1	0	3
	수성구	2	0	4
	달서구	0	0	3
	달성군	1	0	2
	군위군	19	0	10
인천	중구	13	1	3
	동구	4	0	7
	연수구	2	0	5
	남동구	1	0	2

구분		인구 10만 명당 박물관	인구 10만 명당 미술관	인구 10만 명당 도서관
	부평구	1	0	3
	계양구	1	0	4
	서구	1	1	2
	미추홀구	2	1	5
	강화군	12	9	9
	옹진군	0	0	12
광주	동구	9	0	4
	서구	1	2	3
	남구	1	0	5
	북구	3	0	3
	광산구	0	0	3
대전	동구	3	0	2
	중구	1	1	2
	서구	0	1	2
	유성구	4	1	5
	대덕구	4	0	4
울산	중구	2	1	2
	남구	1	0	3
	동구	0	0	3
	북구	0	0	7
	울주군	6	0	4
	세종시	4	0	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	0	4
	수원시 권선구	0	0	4
	수원시 팔달구	2	2	7
	수원시 영통구	3	0	5
	성남시 수정구	0	1	4
	성남시 중원구	1	0	4
	성남시 분당구	1	1	4
	의정부시	0	0	3
	안양시 만안구	3	0	3
	안양시 동안구	0	0	4
	부천시	2	0	4
	광명시	1	0	4
	평택시	0	0	4
	동두천시	4	0	4
	안산시 상록구	2	1	5
	안산시 단원구	1	3	5
	고양시 덕양구	4	0	4
고양시 일산동구	1	1	4	
고양시 일산서구	0	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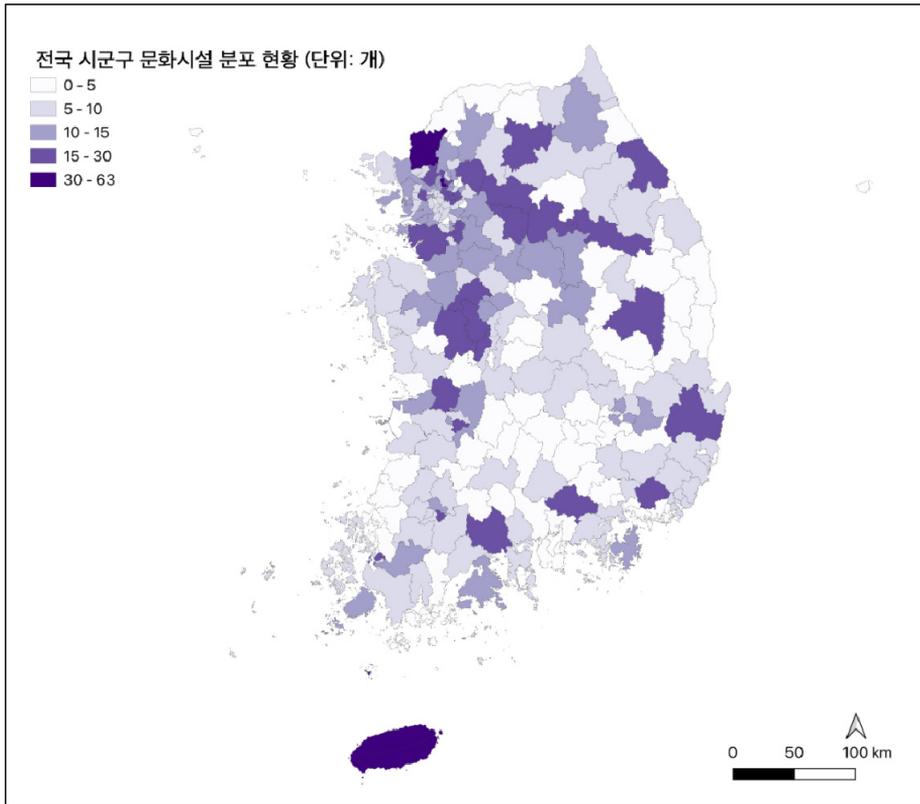
구분		인구 10만 명당 박물관	인구 10만 명당 미술관	인구 10만 명당 도서관
	과천시	11	5	8
	구리시	1	0	3
	남양주시	2	1	4
	오산시	2	1	6
	시흥시	1	0	5
	군포시	0	0	5
	의왕시	3	1	6
	하남시	1	0	5
	용인시 처인구	6	2	5
	용인시 기흥구	2	1	4
	용인시 수지구	1	0	3
	파주시	6	3	8
	이천시	3	2	5
	안성시	4	1	7
	김포시	2	1	3
	화성시	1	0	5
	광주시	3	1	4
	양주시	2	3	7
	포천시	9	0	12
	여주시	15	7	13
	연천군	11	0	11
	가평군	0	14	14
	양평군	12	7	10
	강원도	춘천시	9	3
원주시		5	1	3
강릉시		16	3	4
동해시		2	2	7
태백시		10	0	16
속초시		5	3	8
삼척시		13	0	10
홍천군		6	0	16
횡성군		5	0	14
영월군		123	12	12
평창군		22	0	27
정선군		32	6	13
철원군		0	0	21
화천군		20	0	20
양구군		52	10	10
인제군		44	22	15
고성군		40	0	16
양양군		8	8	8

구분		인구 10만 명당 박물관	인구 10만 명당 미술관	인구 10만 명당 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5	2	7
	제천시	9	0	9
	청주시 상당구	4	2	4
	청주시 서원구	1	2	3
	청주시 흥덕구	3	1	5
	청주시 청원구	2	4	6
	보은군	13	0	13
	옥천군	9	0	9
	영동군	19	0	9
	진천군	3	3	10
	괴산군	17	0	6
	음성군	12	0	14
	단양군	15	0	23
	증평군	6	0	1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7	2	5
	천안시 서북구	0	0	3
	공주시	21	2	8
	보령시	4	2	11
	아산시	5	1	4
	서산시	1	1	6
	논산시	2	0	7
	계룡시	0	0	9
	당진시	5	3	5
	금산군	16	0	20
	부여군	20	0	7
	서천군	8	0	8
	청양군	7	0	14
	홍성군	6	2	6
	예산군	19	3	8
태안군	18	0	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4	3	4
	전주시 덕진구	1	0	4
	군산시	2	2	6
	익산시	7	1	7
	정읍시	8	2	10
	남원시	3	5	11
	김제시	5	3	13
	완주군	9	5	14
	진안군	18	0	9
	무주군	18	9	18
장수군	0	10	20	

구분		인구 10만 명당 박물관	인구 10만 명당 미술관	인구 10만 명당 도서관
	임실군	8	0	25
	순창군	16	8	16
	고창군	8	0	12
	부안군	9	9	9
전라남도	목포시	6	5	5
	여주시	1	1	6
	순천시	4	1	7
	나주시	9	0	7
	광양시	0	1	10
	담양군	23	9	5
	곡성군	0	8	15
	구례군	17	0	17
	고흥군	10	17	14
	보성군	11	11	16
	화순군	3	13	7
	장흥군	18	0	12
	강진군	25	13	6
	해남군	13	3	7
	영암군	21	13	13
	무안군	2	2	7
	함평군	0	14	14
	영광군	8	0	8
	장성군	10	5	21
	완도군	9	0	14
	진도군	15	52	15
	신안군	39	13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3	0	7
	포항시 북구	1	1	2
	경주시	6	2	6
	김천시	6	1	3
	안동시	14	0	8
	구미시	2	0	4
	영주시	6	0	6
	영천시	6	2	4
	상주시	13	0	4
	문경시	21	0	15
	경산시	6	1	2
	의성군	12	0	8
	청송군	9	9	18
	영양군	13	0	13
	영덕군	0	0	6

구분		인구 10만 명당 박물관	인구 10만 명당 미술관	인구 10만 명당 도서관
	청도군	5	5	10
	고령군	14	0	14
	성주군	5	0	11
	칠곡군	6	0	8
	예천군	7	4	7
	봉화군	14	0	7
	울진군	5	5	14
	울릉군	28	0	28
경상남도	진주시	6	1	5
	통영시	3	3	9
	사천시	2	2	6
	김해시	6	1	3
	밀양시	12	0	8
	거제시	6	0	6
	양산시	2	0	4
	창원시 의창구	2	2	4
	창원시 성산구	1	0	3
	창원시 마산합포구	2	1	3
	창원시 마산회원구	0	0	4
	창원시 진해구	2	0	3
	의령군	8	0	8
	함안군	3	0	7
	창녕군	11	0	11
	고성군	26	0	9
	남해군	10	5	10
	하동군	10	0	5
	산청군	43	0	12
	함양군	5	0	5
	거창군	3	0	7
	합천군	15	0	5
제주도	제주시	13	4	5
	서귀포시	36	14	13

[그림 2-10] 2022년 전국 시·군·구 문화시설 분포현황



## 제3절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 1. 문화시설 관리정책

#### 가. 런던의 문화시설 종합계획(Cultural Infrastructure Plan)<sup>19)</sup>

런던에서는 도시 내 문화시설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종합계획(Cultural Infrastructure Plan)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도시 성장과 지역 재생에서 문화를 핵심으로 삼으며,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균형 잡힌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계획은 창의적 인재와 문화시설을 위한 공간을 보장하며, 런던을 글로벌 창의적 수도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런던 문화시설 종합계획에서 문화시설은 문화가 생산되고 향유, 소비 되는 다양한 건축물과 구조물, 장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박물관, 갤러리, 극장, 도서관, 음악 및 공연 장소와 같은 문화 향유·소비 공간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작업실, 영화 및 텔레비전 스튜디오, 창의적 작업 공간 등 문화적 생산 공간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의는 런던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관심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화시설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며, 문화 및 창의 산업에서 중요한 경제적 기여한다. 예술 및 창의 산업은 매년 런던 경제에 522억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런던 일자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산업의 일자리는 자동화 위험이 낮아 미래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문화시설은 또한 관광지로써의 가치를 지니며,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문화적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19) Mayor of London(2019.3), Cultural Infrastructure Plan,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arts-and-culture/space-culture/cultural-infrastructure-plan-and-toolbox>

[그림 2-11] 런던 문화시설 종합계획



출처: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cultural\\_infrastruc\\_ture\\_plan\\_online.pdf](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cultural_infrastruc_ture_plan_online.pdf) (접속일시 : 2024.08.24)

런던 문화시설 종합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과제를 주로 다룬다.

첫째, 토지 가치의 증가이다. 최근 몇 년간 런던의 토지 가치가 급등하면서, 많은 문화 시설이 상업적 개발로 대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 및 창의적 공간이 사라지거나 경제적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국가의 계획 시스템이다. 국가의 계획, 정책과 법규가 문화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개발권의 허가 확대로 인해 많은 문화적 공간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세금 인상이다. 사업에 대한 세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많은 문화시설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문화시설은 높은 세금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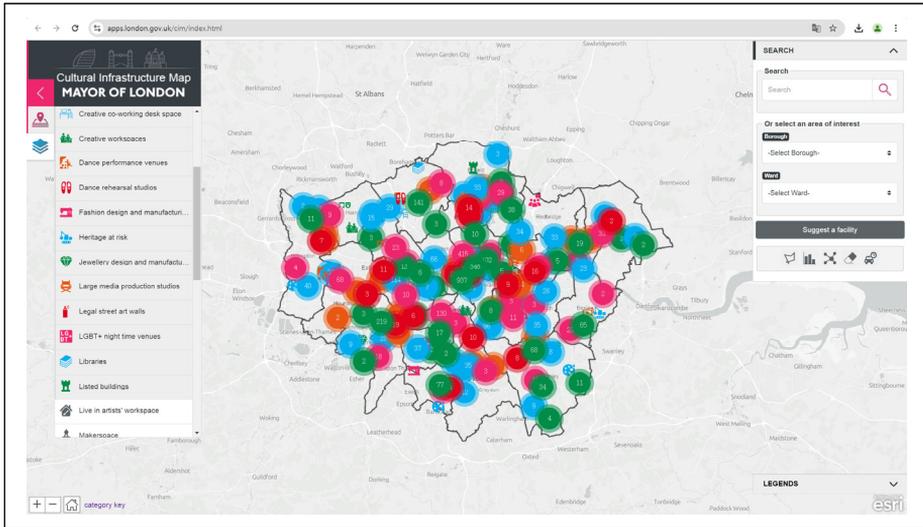
넷째, 허가 제한의 문제이다. 신규 주거 개발이 기존 문화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이루

어질 경우, 새로운 주민들로부터 소음 및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기존 문화시설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거나 기타 규제를 가하는 원인이 된다.

다섯째, 자원 축소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그 결과,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소규모 문화시설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당면과제에 대한 대안으로 런던시장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림 2-12] 런던 문화시설 지도



출처: <https://apps.london.gov.uk/cim/index.html> (접속일시 2024.08.24.)

먼저 문화시설 위치파악이다. 런던 전역의 문화시설 위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를 통합한 ‘문화시설 지도(Cultural Infrastructure Map)’를 도입하여, 문화시설의 위치와 상태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있다. 문화시설지도에는 아카이브를 비롯하여, 박물관, 미술관, 상업 갤러리, 전시관, 장르별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등의 전통적인 문화시설부터, 아티스트 작업공간, 창의적인 공동 작업 데스크 공간, 댄스 리허설 스튜디오, 음악 녹음 스튜디오, 음악 리허설 스튜디오, 연극 리허설 스튜디오 등의 창작·연습공간, 패션 디자인 및 제조, 보석 디자인 및 제조, 대형 미디어 제작 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 창의산업을 위한 제작 및 제조 등의 제작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센터, 야외공간, 술집, 스케이트 파크, 아트월 거리도 문화기반시설로 다루고 있다. 또한 등록 건물과 함께 위기에 처한 문화공간, 예정된 기념물을 함께 다루어, 문화시설의 보존과 새롭게 생겨날 여건을 함께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둘째, 새로운 문화시설 창출이다. 런던의 경제적 번영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문화시설을 창출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기존 건물의 재사용, 새로운 공간의 창출, 그리고 공실을 활용한 임시 사용 등을 통한 문화시설의 수용 능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모색한다. 또한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네트워크를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런던의 광역 도시계획 차원에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셋째, 세계적 수준의 기반 시설 제공이다. 런던이 세계적인 문화 수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는 런던 전역에 새로운 문화 중심지를 조성하고, 창의적 산업을 위한 대규모 생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위기에 처한 문화시설의 보호이다. 증가하는 임대료와 사업세, 허가 변경, 재개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문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위기 대응 사무소(Culture at Risk Office)’를 설립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해하여 낙후되고 노후화된 지역의 펍, 소규모 음악 공연장, 클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투자확대이다. 새로운 문화시설 창출 및 기존 문화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개발업자, 시장, 기금 기부자 및 자선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 또한, 기존의 Good Growth Fund와 Crowd Fund London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며, Creative Land Trust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문화시설의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한다. 이처럼 다양한 기금을 마련하여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문화기반시설 재생·활성화, 소규모 지역문화 재생 프로젝트, 예술인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문화 및 창의 산업이 런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런던 플랜(New London Plan)에 문화 인프라 보호 및 창의적 작업 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창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런던 내 문화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대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지가 상승, 비싼 임대료,

등지 내몰림, 밤문화산업 허가 획득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네트워킹 제공이다. 새로운 사업체 설립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자원을 제공하며, 동종 업계 간 네트워킹과 협력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문화 시설 운영자들이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산업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공간 제공자 위원회(Workspace Providers Board)’, ‘성소수자를 위한 밤문화 시설 포럼(LGBT+ Night-Time Venues Forum)’, ‘런던 음악 위원회(London Music Board)’ 등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문화기반시설 툴박스(Cultural Infrastructure Toolbox)’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문화기반시설 설립에 필요한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싶은 개인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의 정보를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이나 토지정보 제공시에는 운영을 원하는 프로그램, 임대료 수준, 사이트의 크기와 위치, 토지의 임대 또는 매수 여부, 임대 기간, 카페, 소매점 등 보조적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운영자는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요, 개발 목적 충족 방법, 상세한 사업 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Arts Council England’, ‘London Councils Culture Newsletter’, ‘Local Arts Networks’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으며, ‘The Creative Land Trust’, ‘The Stage’, ‘Artists Newsletter’와 같은 무역 간행물에서 저렴한 유료 광고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소유 토지 및 시설이 문화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서비스를 확대한다.

#### 나. 도쿄 문화시설 관리운영지침(都立文化施設運営指針)<sup>20)</sup>

2022년 3월, 도쿄도 생활문화스포츠국(生活文化スポーツ局)에서는 2030년까지 도쿄도의 문화 행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도쿄 문화 전략 2030’을 수립하였다. 해당 전략은 예술과 문화의 힘으로 활력과 풍요로움이 공존하는 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도립 문화시설의 역할과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인구위기의 지속, 코로나19의 영향,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 디지털화의 가속화

20) 生活文化スポーツ局(2022.3), 『都立文化施設運営指針』

등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립 문화시설의 운영 환경 역시 재정비가 필요하였고, 도립 문화시설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운영 방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도립 문화시설들은 대부분 개관한 지 30년 이상이 지나 시설의 노후화 문제와 기능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도쿄도는 도립 문화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도쿄 문화 전략 2030'의 목표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 지침은 '도쿄 문화 전략 2030'의 실현을 위해 도쿄 도립 문화시설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도립 문화시설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운영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지침의 주요 목적이므로, 203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 도립 문화시설들이 도쿄의 문화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시설은 도쿄 도립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도쿄도 에도도쿄박물관, 도쿄도 사진미술관, 도쿄도 현대미술관, 도쿄도 미술관, 도쿄도 정원미술관, 도쿄 문화회관, 도쿄 예술극장이 포함된다.

도쿄 문화시설 관리운영지침에서 지향하는 공통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접근성 강화이다. 누구나 예술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예술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작품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양성 및 포용성이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응하고,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지속 가능성이다.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주요 과제 및 해결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11〉 도쿄 문화 전략 2030의 주요 과제 및 해결 방향

구분	주요 과제 및 해결 방향
자료 수집 및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립 문화시설들은 지속 가능한 자료 수집 및 보존 체계를 확립하며, 수집 자료의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인다. 또한, 각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자료 수집 및 보존 체계를 구축한다.</li> </ul>
전시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시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며, 공모 전시실 등의 시설을 문화예술 창출 및 발신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 또한, 관람객의 수요를 반영한 전시회 기획을 통해 질 높은 독창적인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li> </ul>
시설 보존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디자인을 보존하면서도 시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노베이션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립 문화시설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보장한다.</li> </ul>

또한, 공통 지침을 바탕으로 각 대상시설에 대하여 적용할 개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12〉 도쿄 문화 전략 2030의 문화시설별 지침

대상시설	개별 지침
에도도쿄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도와 도쿄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으로서, 수집, 보존, 조사 연구 등을 통해 400년에 걸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승해야 한다.</li> <li>또한, 수집된 귀중한 자료를 활용한 전시회를 기획하여 에도 도쿄의 역사와 문화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한다.</li> </ul>
도쿄도 사진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진과 영상의 종합 미술관으로서, 수집, 보존, 조사 연구를 통해 고품질의 전시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사진·영상 문화를 발신해야 한다.</li> <li>국제적 페스티벌 등을 통해 우수한 사진·영상 표현을 발굴하고, 첨단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li> </ul>
도쿄도 현대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미술의 중심지로서, 국내외 최첨단 문화예술을 발신하고, 젊은 작가의 육성과 국제적인 예술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쿄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li> </ul>
도쿄도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명작을 널리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며, 누구나 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li> <li>또한, 미술 단체에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li> </ul>
도쿄도 정원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르데코 양식의 구 아사카노미야 저택을 보존하고, 풍부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미술관으로서의 매력을 향상해야 한다.</li> <li>지역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예술과 문화로 사람들의 교류 기회를 창출하며, 누구에게나 개방된 미술관을 지향해야 한다.</li> </ul>
도쿄 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무대 예술의 중심지로서, 국내외 일류 연출가와 출연자가 참여하는 고품질의 공연을 통해 예술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층의 감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li> </ul>
도쿄 예술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정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발신하는 거점으로서, 세계 각국의 극장과 연계한 공연 및 독창적인 작품을 통해 예술성이 높은 무대 예술 작품을 창출하고 감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li> </ul>

## 다. 문화시설 관리정책의 시사점

도시 차원에서 문화시설의 설립과 운영, 관리, 보존 및 폐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설 자체의 효율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지속가능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런던의 경우, 도시경쟁력의 근원을 창의성과 창조산업에 두고, 이를 위한 동력원으로서의 문화시설을 자원화 하여 상세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문화시설의 범위를 향유와 소비만이 아니라, 창·제작과 유통을 포괄하도록 설정하고, 예술가의 작업공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 장르별 제작시설 및 작은 펍들과 거리, 광장·공원 등 광의의 문화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문화시설로 관리함으로써,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 자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시설을 고정적이고 유형화된 시설로서만이 아니라,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장소)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문화시설 생태계가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런던시에서는 문화시설 지도를 제작하여 문화시설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시설 위치와 함께 문화시설의 변화정도를 문화시설 건강도(Cultural Spaces Health Check)로 수치화하여 제공하고, 현재까지의 변화 내용과 원인분석,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인식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림 2-13] 문화시설 건강도(London's Cultural Spaces: 2018-2022)



출처: <https://apps.london.gov.uk/cim/index.html> (접속일시 2024.08.24.)

이와 함께 개인이 소유한 공간을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와 토지소유자를 매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 자산의 문화시설 전환을 촉진하고, 다양한 운영주체가 문화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서비스의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도쿄 문화시설 관리 운영지침의 경우에도, 도쿄도 차원에서 문화시설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개별 대상 시설들의 관리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이 누리려는 문화서비스를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모두 고도화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쿄도 문화시설 운영의 공통지침으로 접근성의 강화와 포용성, 디지털 기술, 환경 지속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환경 변화, 인구, 기술, 기후 등의 문제를 도시차원에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2. 문화시설 복합화 정책 사례

현대인의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시설의 다양화 및 복합화 경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문화시설의 다양화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전통적인 문화시설부터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문화공간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카페, 레스토랑, 서점, 샵롱, 공원, 광장 등 ‘제3의 공간’<sup>21)</sup>이 대안 문화공간으로 대두됨에 따라 문화시설에서의 중간영역 또는 전이공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하나의 시설 내 다양한 문화 활동과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복합화 경향은 예술, 교육, 여가, 쇼핑 등 다수 기능의 통합을 통해 수요자로 하여금 풍부한 경험을 유도하고, 도시적 차원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경향 하에 문화시설간의 복합화, 문화시설이 타 용도의 시설과 연계하여 복합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를 탐구하여 문화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와 고도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21) 일본 건축가 마키 후미히코(槇文彦, 2019)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에 완충공간으로서 중간영역(空き間)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중간영역이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일종의 경계이자 매개공간으로서 도시공간의 내재적 성질(奥性)이 표출하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함. 이러한 의미에서 노상 카페나 음식점, 동네슈퍼 앞 평상, 찻집공원 또는 소규모 공터, 텃밭, 골목길과 같은 마을의 소가로 등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영역이 서로 충돌하고 교우하는 모호한 경계로서 중간영역이라 의미화 됨

### 가. 독일 사회적 도시(Soziale Stadt)<sup>22)</sup>정책 기반 교육시설의 복합문화공간화

독일 각 지역에서 이주민 비율이 증가하고, 빈부의 격차가 커졌으며, 도시발전의 차이가 커지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김성원, 2024).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1999년 독일은 국가 도시개발의 초석으로서 ‘사회적 도시(Soziale Stadt)’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했다(Aring, 2014). ‘사회적도시’ 정책은 독일 연방 정부의 관할 하에 현재 다양한 부처와 지방 정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도시’ 정책은 도시 빈곤 지역의 환경, 주변 인프라,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시민 참여 과정을 지원하므로 세대 간 정의, 평등한 분배, 사회적 이동성, 시민권, 가족 친화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2년 1월에는 전국통합행동계획에서 이주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통합과 지역개발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BBSR, 2017). 2014년에는 ‘사회적 도시’ 개념이 독일의 모든 도시 개발 계획의 지침이 되었다. 지금까지 독일의 390개 도시와 659개 지역이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최근에는 독일의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에서 난민과 이주민의 통합이 더욱 중요해졌다(김성원, 2024).

독일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시설 복합화는 이러한 ‘사회적 도시’ 정책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독일 각 도시들은 ‘사회적 도시’의 흐름 속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교육기회와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의 다양한 사회-복지-문화 관련 공간적, 물리적 인프라를 집적하여 개방하거나 복합화하고, 다양한 교육-복지-문화-사회 서비스 기관 및 단체들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전반의 교육품질을 높여 왔다. 교육 협력 사업들에는 Schule & Co., 살아 있는 도시의 살아 있는 학교(Lebendige Schule in einer Lebendigen Stadt), 생활세계학교(Lebenswelt Schule), 학습지구(Lernende Regionen), 교육 네트워크(Netzwerk Bildung), 교육밴드(Bildungsband) 등이 있다(김성원, 2024).

그중 교육밴드는 도시 행정과 교육사업의 통합하여 복합문화시설로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육밴드는 지구 내 학교 개발 기획단계에서 논의를 진척하며 단지 학교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열린 공간과 공공장소의 중요성에도 주목하여 교육밴드 참여자들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도시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

22) 김성원(2024),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다(김성원, 2024).

교육밴드의 대표적 사례에는 함부르크 알토나 지역의 오스도르퍼 본 교육밴드(Osdorfer Born Bildungsband)가 있다. 오스도르퍼 본 교육밴드의 가장 큰 성과는 지구의 경제부, 건설부, 환경부, 사회부, 청소년부, 보건부 등 분산된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치와 개발 사업을 시 교육부 사업에 종속시킨다는 동의 선언문에 서명하게 한 것이다. 즉 교육밴드가 다루는 사업 영역에 계획된 건설 프로젝트가 속하는 경우(예: 운동장이나 교육기관과 접해 있는 경로 재설계) 관련 부서가 함께 조정하고 계획하도록 하였다(김성원, 2024).

게슈비스터-솔 시립학교(Geschwister-Scholl-Stadtteilschule)의 경우, 오스도르퍼 본 교육밴드의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함부르크 알토나 지역의 낡은 학교 건물을 철거한 후, 학교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 당시 교육밴드의 또 다른 참여 기관인 ‘청소년의 집(Haus-der-Jugend)’을 신축 학교 건물에 포함시켜 학교와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사용토록 복합화한 점이 게슈비스터-솔 시립학교의 특징이다(김성원, 2024).

[그림 2-14] 게슈비스터-솔 시립학교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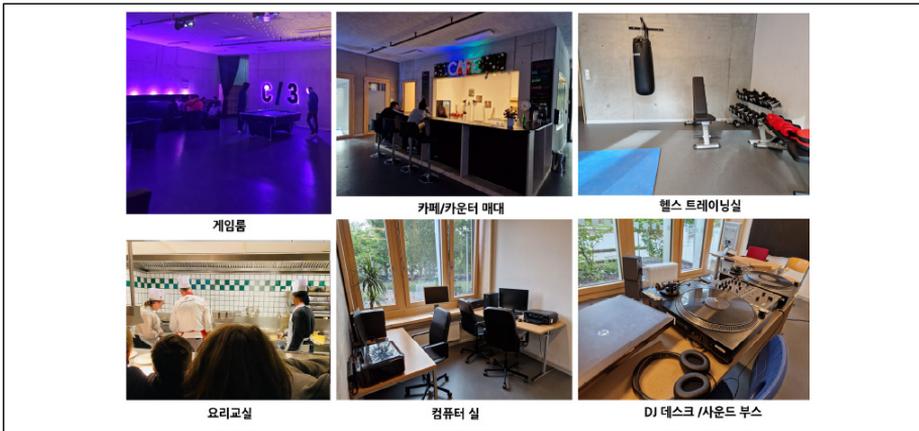
출처: 함부르크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건물은 전체적으로 3층 건물인 4개 건물이 서로 엇갈리며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한 건물이 청소년의 집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학교의 1층에는 행정실, 야외 공간이 있는 식당, 강당과 연결될 수 있는 음악실, 도서관이 있다. ‘청소년의 집’은 학교 건물

과 통합되어 있지만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한다. 청소년의 집은 개방형 공간으로 오후 4시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하고, 4-9시까지 14세 이상 방문객에게 개방하고 있다. 청소년의 집에서는 요리,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김성원, 2024).

또한, 이 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그뤽스타터 벡(Glücksstädter Weg) 지구에는 지역 스포츠홀과 지역 놀이터, 지역 공원(Moorgrabenpark)이 개방적으로 학교와 근접하고 있다. 학교가 협력하고 있는 기관에는 ‘청소년의 집’, 오스도로프 지역관광, KLIICK 어린이 박물관, 보른하이데 극장, 아브락스 카다브락스 서커스단, 보른하이데 커뮤니티 센터, 청년교육센터, 오스도퍼 본북홀, MOSAIQ. e.V. 등이 있다(김성원, 2024).

[그림 2-15] 게슈비스터-솔 시립학교 부지 내 ‘청소년의 집’ 내부시설



출처: 김성원(2024)

### 나. 프랑스 집 가까이 있는 문화(Culture près de chez vous)<sup>23)</sup> 정책 사례

프랑스 문화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는 ‘지역 간 또는 개인 간 문화격차(fiare reculer la ségrégation culturelle)’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집 가까이 있는 문화(Culture près de chez vous)’를 발표하였다. 인구 10,000 명의 생활권 당 문화시설이 하나 미만인 86곳에 대해 예술가와 예술품이 순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정책을 포함하였으며, 이와 같은 공공문화서비스를 위해서 문화통신부는 지

23)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2018.10.04), [해외자료브리핑 9호] 프랑스 문화부, ‘집 가까이 있는 문화’ 정책, <https://policydb.kcti.re.kr/#/policyNewsDetail?bbstypecd=3003200&postno=142574&pageno=9&searchopt=&search=%EB%B0%95%EB%AC%BC%EA%B4%80>

역분권과 관련된 추가재정(crédits déconcentrés supplémentaires)을 통해 650만 유로를 책정했고, 2022년까지 1,000만 유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집 가까이 있는 문화’는 지방자치단체와 프랑스 문화통신부, 공공문화기관, 국립박물관 등 450곳의 예술창작기관 및 문화예술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가와 예술작품이 프랑스 문화소의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공공문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4)</sup>. ‘집 가까이 있는 문화’ 정책 중 하나의 사례인 ‘오페라 버스(Opéra Bus)’는 파리 오페라 극장의 좌석을 모델로 한 콘서트 홀에 설치된 버스로, 농촌이나 소외 지역을 돌아다니며, 오페라를 공연하는 버스이다<sup>25)</sup>.

[그림 2-16] 오페라 버스



출처: La Reveuse 홈페이지

또한, 축가 베르나르 츠미(Bernard Tschumi)가 제작한 ‘미크로-폴리(Micro-Folie)’ 역시 ‘집 가까이 있는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sup>26)</sup>. ‘미크로-폴리’는 디지털화한 프랑스 국립 문화시설들의 소장품을 프랑스 전 지역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박물관을 기반으로 한다. 건축가 베르나르 츠미(Bernard Tschumi)가 설계한 ‘라빌레

24)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licydb/221306108362>

25) La Reveuse 홈페이지. <https://ensemblelareveuse.com/programmes/opera-bus/>

26)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2018.06.04.), [해외자료브리핑 9호] 프랑스 문화부, ‘집 가까이 있는 문화’ 정책. <https://policydb.kcti.re.kr/#/policyNewsDetail?bbstypecd=3003200&postno=142574&pageno=9&searchopt=&search=%EB%B0%95%EB%AC%BC%EA%B4%80>

트 공원(Parc de la Villette)의 ‘폴리(Folies)’에서 영감을 받아 2017년, 프랑스 파리 근교의 스프랑(Sevran)에서 실험적인 프로토타입을 시작하였다(민지은·박신의, 2023).

‘미크로-폴리’는 이미 존재하는 공간(미디어 라이브러리, 문화센터, 유적지, 쇼핑센터 등)에 입주할 수 있는 모듈식 형태로, 간단한 설치와 낮은 비용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한의 전기 콘센트와 인터넷망 시설만 갖추고 있다면 운영할 수 있기에 2023년 5월 30일 기준, 전 세계 341개(프랑스 내 300개)가 개관하였다(민지은·박신의, 2023).

‘미크로-폴리’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모듈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부, 지자체, 혼합조합(Syndicats mixtes), 재단이나 협회 등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지출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최대 4만 유로이다(프랑스 문화부, 2023).

‘미크로-폴리’는 12개 국립문화시설과 협정을 맺고, 그 기관의 소장품을 디지털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박물관 형태를 핵심 기능으로 두고 출발한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이후, 박물관 기능 외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거점 공간 기능을 덧붙이면서 지역문화 활동의 복합적 면모를 수용하고 있다. 새롭게 설치하더라도 모듈형이라는 점에서 비용이 저렴하고, 도서관이나 쇼핑몰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생활형 공간으로 접근성을 높여가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와 같은 ‘작은 만남의 광장’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면서 그 공간의 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장점으로, 프랑스 정부는 최대 200개 이상의 ‘작은 만남의 광장’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민지은·박신의, 2023).

한편, ‘미크로-폴리’의 주요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먼저, 프랑스 국립문화시설의 소장품을 디지털로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박물관이다. 디지털 박물관의 운영 목적은 누구든지 국립문화시설의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문화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미크로-폴리’는 ‘그랑팔레 국립 박물관 연합(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Grand Palais)’, ‘라빌레트(La Villette)’, ‘루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 ‘베르사유 궁전(Château de Versailles)’, ‘앙스티투 뒤 몽드 아랍(Institut du monde arabe)’, ‘시테 드 라 뮤직(Cité de la musique)’,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 ‘유니베르시아스(Universcience)’, ‘케브랑리 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 ‘파리 국립 오페라(Opéra national de Paris)’, ‘아비뇽 페스티벌(Festival d'Avignon)’, ‘퐁피두 센터

(Centre pompidou), ‘필하모니 드 파리(Philharmonie de Paris)’, ‘피카소 미술관(Musée Picasso)’ 등 12개 국립문화시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의 소장품이나 공연을 디지털화한 1,000개 이상의 콘텐츠를 관객들에게 제공한다(민지은·박신의, 2023).

두 번째는 포용적 교육 관점에서의 교육 공간 기능이다. 포용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은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등 학교 교육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부분을 모두 고려한 거시적 차원에서 관련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개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Ébersold, 2017).

세 번째는,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문화예술시설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 방문객은 낯선 환경에 긴장하거나 문화적 충격을 경험함으로써 반사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민지은·박신의, 2023). 문화매개자는 방문객 분석을 통해 이들이 관람하지 않는 여러 요인과 부정적 감정들을 예측하고(즉,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이것이 곧 ‘예방적 차원의 매개’로서 방문객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문화매개자에 의해서 방문객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정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대비한 추가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객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acco & Jamar, 2014).

[그림 2-17] 마이크로-폴리



출처: Ville d'Écoute-vry-Courcouronnes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제3장

## 인구위기 지역의 문화시설 입지특성 및 기대효용도 지표 개발



# 제1절 분석대상지 선정 및 문화시설 입지현황 분석

## 1. 인구위기 지역 도출

### 가. 인구분포 현황 및 장래인구 추계

#### 1) 시군구 단위 분석

분석시점인 2022년 전국 시도 인구분포 현황은 표 3-1과 같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 시도 단위 장래인구 추계 값<sup>27)</sup>은 표 3-2와 같다. 2022년 분석시점을 기준으로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산, 대구, 울산의 경우 2025년 대비 2045년의 인구가 1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세종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특수성에 기반하여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그 외 일부지역의 미미한 증가 수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위기가 도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전국 시도 단위 총 인구수 (2022년 기준)

구분	총 인구수 (명)	구분	총 인구수 (명)
서울특별시	9,428,372	강원특별자치도	1,536,498
부산광역시	3,317,812	충청북도	1,595,058

27)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값은 다양한 인구 통계자료와 인구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계산된다. 먼저, 인구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 인구 자료, 출생, 사망, 이민 등 인구 이동 자료를 수집한다. 이후, 미래의 출생률, 사망률, 이민율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추세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가정을 설정한다. 출생률 가정은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를, 사망률 가정은 연령별 사망률을, 이민율 가정은 인구 이동 패턴을 반영한다. 이 가정들을 바탕으로 코호트-구성요소 방법(cohort-component method)을 사용하여 미래 인구를 추계한다. 통계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정기적인 데이터 갱신과 과거 추계값의 비교 분석을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인다. 따라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값은 신뢰할 만한 자료로 평가된다.

구분	총 인구수 (명)	구분	총 인구수 (명)
대구광역시	2,363,691	충청남도	2,123,037
인천광역시	2,967,314	전북특별자치도	1,769,607
광주광역시	1,431,050	전라남도	1,817,697
대전광역시	1,446,072	경상북도	2,600,492
울산광역시	1,110,663	경상남도	3,280,493
세종특별자치시	383,591	제주특별자치도	678,159
경기도	13,589,432		

〈표 3-2〉 통계청 전국 시도 장래인구 추계 값

구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45년 - 2025년	증감률
서울특별시	9,209,988	8,947,637	8,745,343	8,539,824	8,264,297	-945,691	-10.3%
부산광역시	3,209,584	3,077,470	2,958,617	2,826,940	2,674,673	-534,911	-16.7%
대구광역시	2,296,188	2,197,348	2,110,857	2,020,271	1,918,556	-377,632	-16.4%
인천광역시	2,959,375	2,964,832	2,966,631	2,947,288	2,896,848	-62,527	-2.1%
광주광역시	1,439,236	1,401,078	1,364,974	1,323,136	1,272,392	-166,844	-11.6%
대전광역시	1,438,281	1,396,703	1,368,865	1,339,093	1,298,189	-140,092	-9.7%
울산광역시	1,085,017	1,043,675	1,000,846	953,973	902,461	-182,556	-16.8%
세종특별자치시	427,317	496,997	548,097	584,990	612,399	185,082	43.3%
경기도	14,002,605	14,421,123	14,701,431	14,790,812	14,671,953	669,348	4.8%
강원도	1,524,370	1,529,269	1,537,290	1,535,182	1,516,956	-7,414	-0.5%
충청북도	1,639,888	1,654,450	1,666,519	1,665,471	1,645,652	5,764	0.4%
충청남도	2,198,168	2,228,415	2,250,240	2,254,511	2,236,812	38,644	1.8%
전라북도	1,741,421	1,690,585	1,648,722	1,604,940	1,554,640	-186,781	-10.7%
전라남도	1,737,587	1,698,534	1,662,850	1,625,140	1,581,396	-156,191	-9.0%
경상북도	2,596,343	2,552,040	2,504,282	2,441,219	2,360,226	-236,117	-9.1%
경상남도	3,253,138	3,193,395	3,118,218	3,023,333	2,910,238	-342,900	-10.5%
제주특별자치도	688,998	705,468	714,909	717,158	712,218	23,220	3.4%
전국	51,447,504	51,199,019	50,868,691	50,193,281	49,029,906	-2,417,598	-4.7%

## 2) 집계구 단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분포 특성을 살피고자 ‘집계구<sup>28)</sup>’ 단위를 기준으로 2022년 인구분포 현황을 확인하였다. 「통계청 통계자료제공 규정」에 따르면 집계구란 기초단위구를 결합시켜 만든 구역으로 기초단위구에 통계적 특성인 동질성, 동량성을 부가하여 확정한 근린지역 통계서비스 구역을 의미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집계구 규모가 작은 반면, 지방 기초단위 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아 집계구가 크게 설정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 단위를 집계구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계구는 읍면동 보다 세밀한 단위로, 인구와 주택,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집계구는 인구 규모와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고려하여 설정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 내의 다양한 특성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분석은 시설의 접근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입지를 찾는 데 매우 유용하다. 셋째, 집계구는 지리적 형상이 단순하고 정방형에 가까워 분석과 시각화가 용이하다. 이는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집계구는 통계청의 전수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에,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집계구를 기준으로 문화시설의 접근성 및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집계구별 인구현황을 확인하고자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의 집계구 인구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특별시 및 주요 광역시의 도시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집계구 인구수는 200~800명 사이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집계구별 장래인구 분포를 추정하기 위하여 2022년 대비 2045년 시도단위 인구 증감률을 고려하여 2045년 집계구별 장래인구 추계 값의 가중치로 활용하고자 하였다(표 3-3 참고). 그림 3-1, 그림 3-2는 추정된 결과를 반영한 집계구별 인구 분포이다. 경기, 세종시 인근의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 국토 차원에서 인구수가 급격히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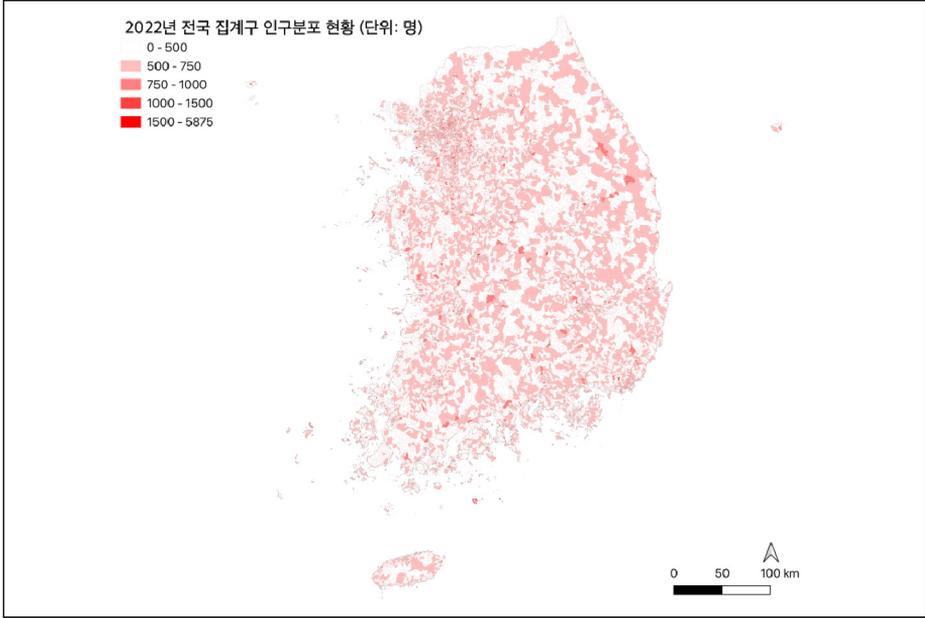
28) 집계구는 기초단위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소 통계 집계 단위이다. 인구 규모(이상적인 인구수는 500명), 주택 유형과 지가 같은 사회경제적 유사성, 그리고 집계구의 형태를 고려해서 설정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인구는 300명, 최적 인구는 500명, 최대 인구는 1,000명으로 정해진다. 건물 유형은 단독 주택, 아파트, 비거주용 건물로 나누고, 기초단위구별 주택 유형을 분석해서 비슷한 주택 유형을 가지도록 집계구를 만든다. 또한, 필지별 지가를 기준으로 기초단위구의 평균 지가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슷한 평균 지가를 가지도록 집계구를 설정한다. 집계구의 형태는 시각적으로 단순한 것이 좋고, 정방형이 가장 이상적이다. 통계청의 전수 조사 자료는 읍면동보다 작은 단위인 집계구로 집계되어 서비스된다.

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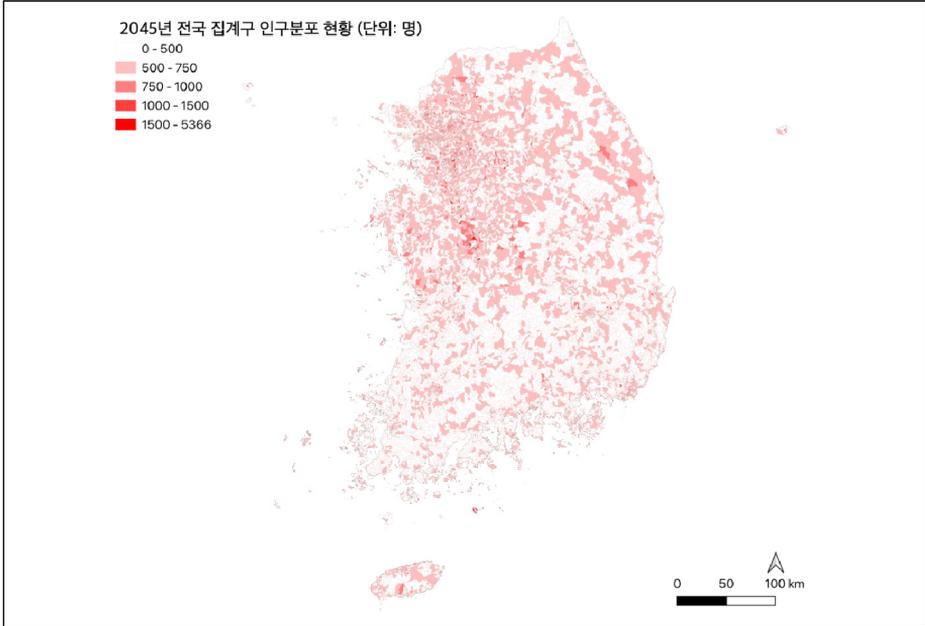
〈표 3-3〉 2022년 대비 2045년 시도 단위 인구 증감률

구분	2022년 (분석기준)	2045년	증감	증감률
서울특별시	9,428,372	8,264,297	-1,164,075	-12.3%
부산광역시	3,317,812	2,674,673	-643,139	-19.4%
대구광역시	2,363,691	1,918,556	-445,135	-18.8%
인천광역시	2,967,314	2,896,848	-70,466	-2.4%
광주광역시	1,431,050	1,272,392	-158,658	-11.1%
대전광역시	1,446,072	1,298,189	-147,883	-10.2%
울산광역시	1,110,663	902,461	-208,202	-18.7%
세종특별자치시	383,591	612,399	228,808	59.6%
경기도	13,589,432	14,671,953	1,082,521	8.0%
강원도	1,536,498	1,516,956	-19,542	-1.3%
충청북도	1,595,058	1,645,652	50,594	3.2%
충청남도	2,123,037	2,236,812	113,775	5.4%
전라북도	1,769,607	1,554,640	-214,967	-12.1%
전라남도	1,817,697	1,581,396	-236,301	-13.0%
경상북도	2,600,492	2,360,226	-240,266	-9.2%
경상남도	3,280,493	2,910,238	-370,255	-11.3%
제주특별자치도	678,159	712,218	34,059	5.0%

[그림 3-1] 2022년 전국 집계구 인구분포 현황



[그림 3-2] 2045년 전국 집계구 인구분포 예측



## 나. 분석대상지 선정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용이성 및 유의미한 시사점 제공을 위해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을 도출하여 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정 결과 값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45년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은 부산, 대구, 울산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지방의 주요 광역시라는 특성을 지녔음에도 인구감소위기를 극심히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10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에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지역과 관심지역 18개를 살펴보았다(표 3-4).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는 내용으로 8개 인구감소지표<sup>29)</sup>를 활용하였다.

〈표 3-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021년 최초 지정)

지역구분	상세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지역 18개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출처: 행정안전부(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29) 인구감소지표 8개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결과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감소가 극심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각 한 곳씩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감소의 심각성, 둘째,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역별 대표성, 셋째, 공공인프라의 차이, 넷째, 정책적 필요성이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지로 광역지자체인 부산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인 전북 익산시를 선정하였다(표 3-5, 그림 3-3, 3-4 참고). 첫째, 부산과 전북 익산 모두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유출과 고령화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부산은 대도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익산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대표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인구감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 셋째, 부산은 광역지자체로서 공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인구감소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익산은 공공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다(표 3-6). 넷째, 두 지역 모두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인구 감소 유형에 대응하는 종합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표 3-5〉 분석대상지 기초현황 (2022년 현황 및 2045년 추정현황)

구분	면적(km <sup>2</sup> )	2022년 상주인구	2045년 추정인구	2022년 인구밀도 (명/km <sup>2</sup> )	2045년 인구밀도 추정값 (명/km <sup>2</sup> )
부산	771	3,317,812	2,674,673	4,303	3,469
전북 익산	507	273,697	240,580	540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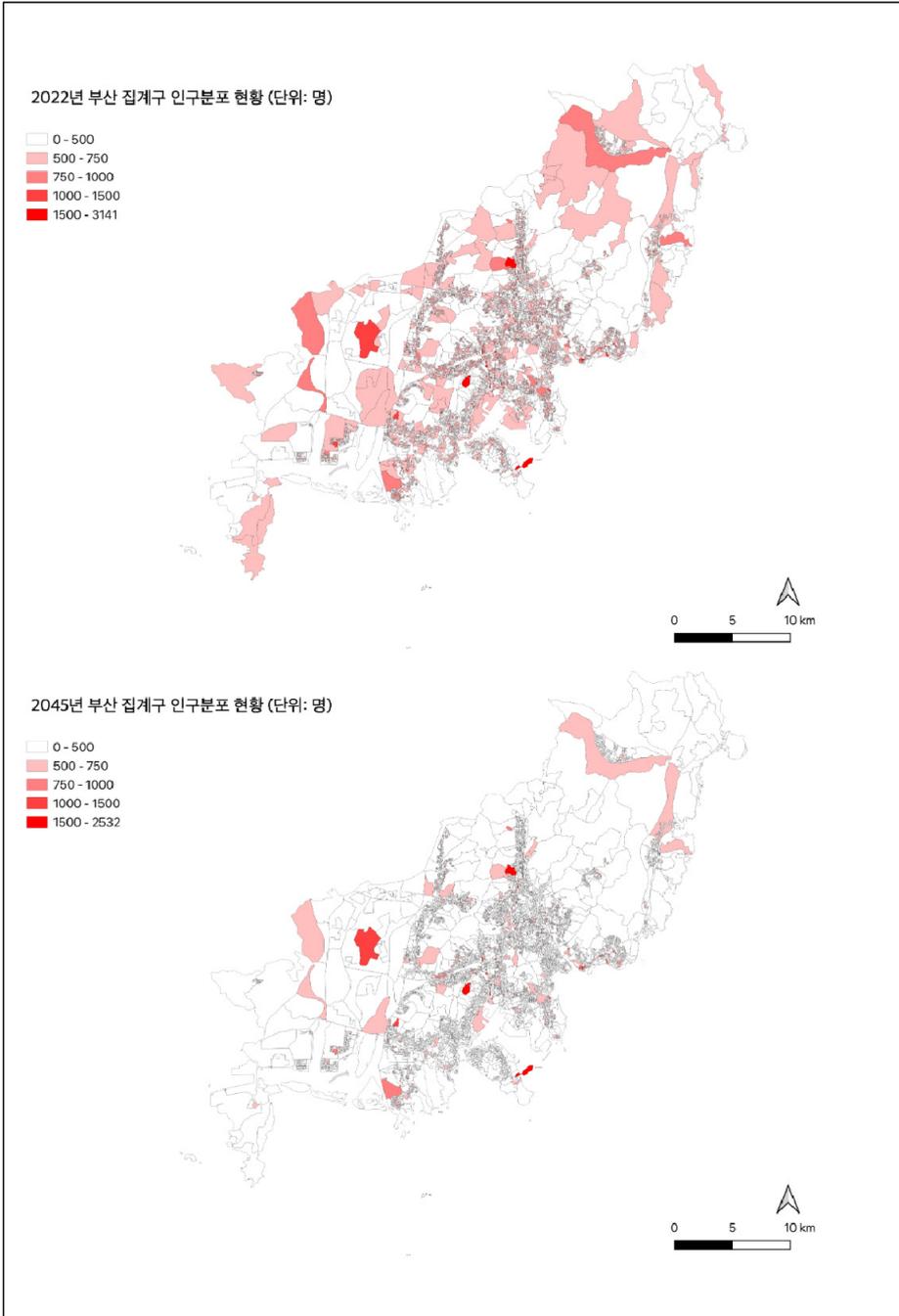
〈표 3-6〉 분석대상지 생활SOC 현황

구분	공공문화시설 <sup>30)</sup>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sup>31)</sup> (노인복지관 등)	의료시설	공원시설
부산	51	138	401	985
전북 익산	5	15	23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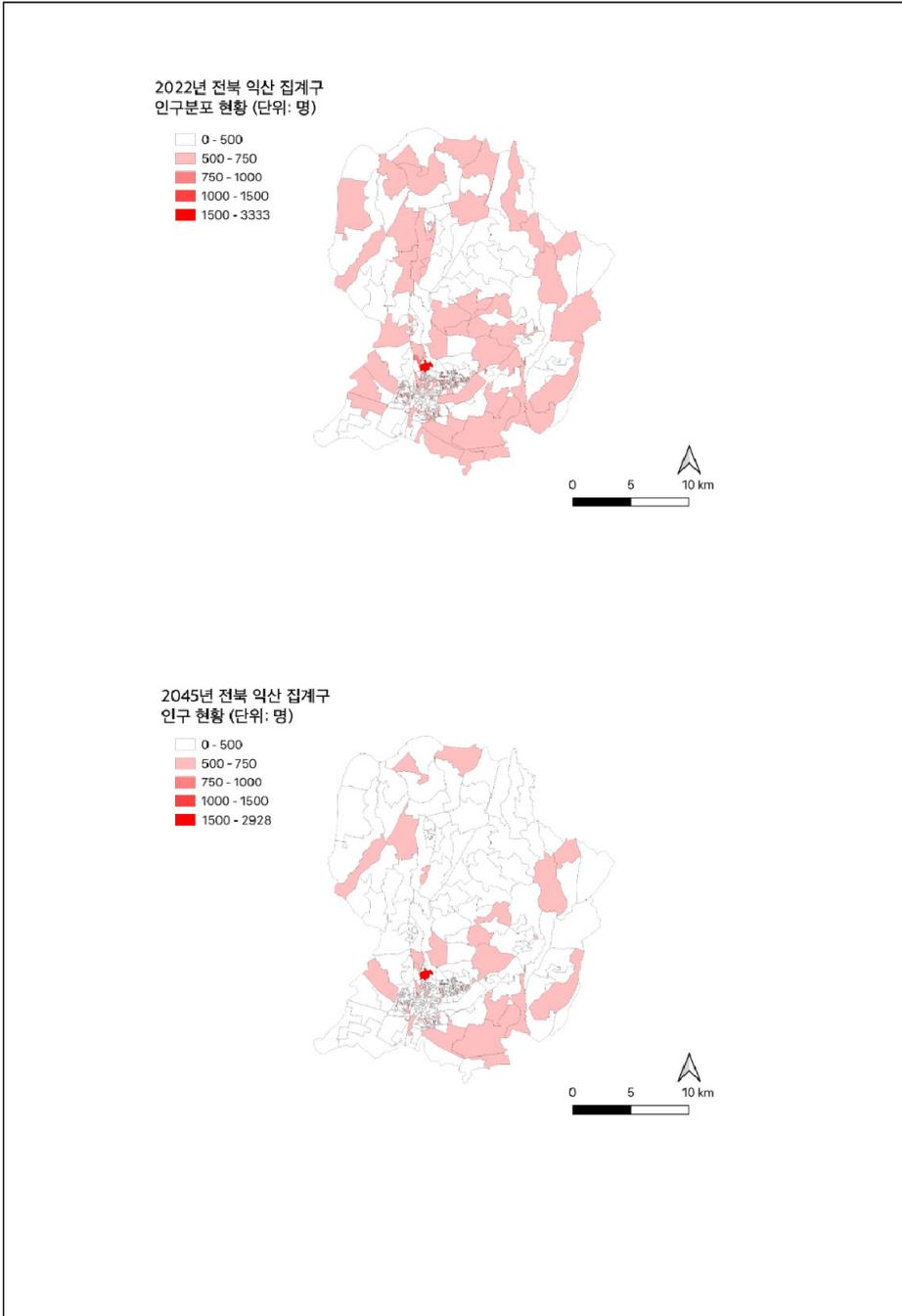
30)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 중 본 연구 분석대상인 문화시설을 제외한 시설

31) 지역별 공공사회복지 홈페이지 참고

[그림 3-3] 2022년, 2045년 부산광역시 집계구 인구분포



[그림 3-4] 2022년, 2045년 전북 익산시 집계구 인구 분포



## 2. 분석대상지 문화시설 입지특성 분석

### 가. 대상지 문화시설 분포 현황

####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내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분포현황은 표 3-7과 같다. 인구 천 명당 시설 개수를 산정했을 때, 2022년, 2045년 모두 1개의 시설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이 계속적으로 공급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7〉 부산광역시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입지현황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시설 개수	51	33	9
인구 천 명당 시설 개수 (2022년)	0.015	0.010	0.003
인구 천 명당 시설 개수 (2045년)	0.019	0.012	0.003

2022년 총인구: 3,317,812명, 2045년 추정인구: 2,674,673명

다음으로 각 시설의 분포가 균집화 되어 있는지 혹은 분산되어 있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S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근린 이웃분석(Nearest Neighb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시설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이해하고, 특정 지역에서의 문화시설 접근성 및 편리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사용된 주요 파라미터는 표 3-8과 같다. 분석 결과 박물관과 도서관은 R값이 1보다 작고 Z-점수의 절댓값이 1.96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해당 문화시설들은 특정 지역에 균집화 되어 있으며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해당 시설들은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접근성이 높음을 의미하지만,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시선으로 보자면 시설이 균집화를 이뤄 지역의 장소성을 형성하며 집적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문화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한편 미술관은 개체수가 9개로 적기에 통계적으로 균집화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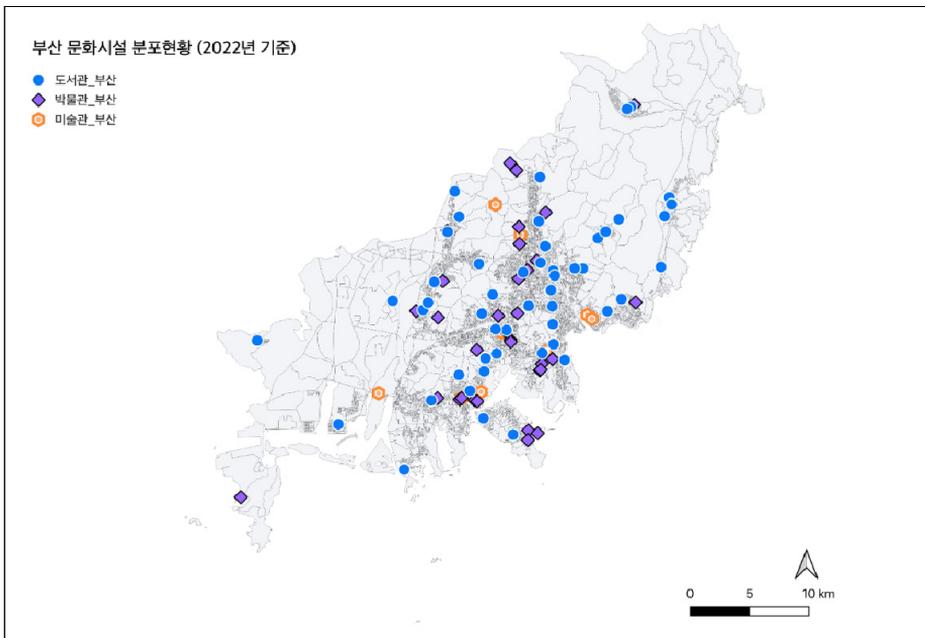
〈표 3-8〉 최근린 이웃 분석 파라미터(부산광역시)

분석 범위	거리계산 방법	문화시설 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부산	유클리드 거리 (Euclidean Distance)	51	33	9

〈표 3-9〉 최근린 이웃 분석 결과(부산광역시)

구분	부산		
	도서관 (51개)	박물관 (33개)	미술관 (9개)
관측된 평균 최근린 이웃 거리 (Observed Mean Distance)	1891.8	2248.9	2923.6
기대 평균 최근린 이웃 거리 (Expected Mean Distance)	2324.2	2904.8	2869.9
최근린 이웃 비율 (Nearest Neighbor Ratio, R)	0.8140	0.7742	1.0187
Z-점수	-2.5167	-2.4814	0.1073

〔그림 3-5〕 부산광역시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입지현황



## 2) 전북 익산시

익산시 내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분포현황은 표 3-10과 같다. 인구 천 명당 시설 개수를 산정했을 때, 부산보다는 큰 수치를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2022년, 2045년 모두 1개의 시설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또한 시설의 추가적 공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3-10〉 전북 익산시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입지현황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시설 개수	9	9	2
인구 천 명당 시설 개수 (2022년)	0.033	0.033	0.007
인구 천 명당 시설 개수 (2045년)	0.037	0.037	0.008

2022년 총인구: 273,697명, 2045년 추정인구: 240,580명

다음으로 전북 익산시 내 문화시설의 통계적 군집화 여부를 살펴보았다. 동일하게 최근린 이웃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사용된 주요 파라미터는 표 3-11과 같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모든 문화시설의 R값이 1보다 크고 Z 점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이 군집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즉, 시설들의 군집화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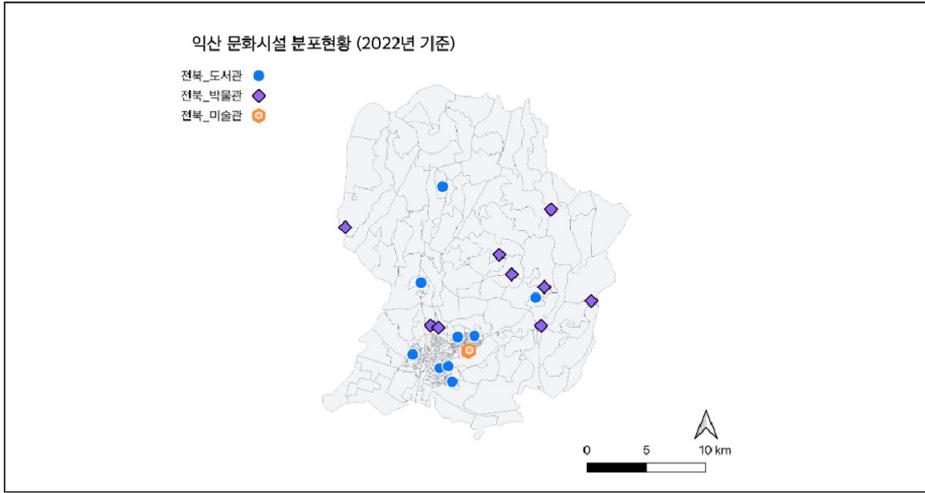
〈표 3-11〉 최근린 이웃 분석 파라미터(전북 익산시)

분석 범위	거리계산 방법	문화시설 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북 익산	유클리드 거리 (Euclidean Distance)	9	9	2

〈표 3-12〉 최근린 이웃 분석 결과(전북 익산시)

구분	전북 익산		
	도서관 (9개)	박물관 (9개)	미술관 (2개)
관측된 평균 최근린 이웃 거리 (Observed Mean Distance, m)	3144.5	3625.5	154.2
기대 평균 최근린 이웃 거리 (Expected Mean Distance, m)	2186.6	2411.2	38.5
최근린 이웃 비율 (Nearest Neighbor Ratio, R)	1.4381	1.5036	4.0033
Z-점수	2.5144	2.8903	8.1253

[그림 3-6] 전북 익산시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입지현황



## 나. 대상지 문화시설 접근성 분석

### 1) 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단위로 설정한 집계구 중심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시설별 특성에 따라 도달 가능 거리를 설정하고, 해당 거리 내에 포함되는 시설의 개수를 기반으로 접근성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 분석의 주요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문화시설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문화 접근성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시설의 규모 및 수용수준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설의 개수와 분포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도달 가능 거리는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생활인프라 기준 및 도입 활용방안 연구’의 결과 값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sup>32)</sup>. 도서관의 경우 생활인프라 시설로 생활권 내 거주민 대상 일상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3.7km의 버퍼로 설정하였다. 반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거점시설로 생활권을 넘어서 비교적 넓은 권역에서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9.3km의 버퍼로 설정하였다 (그림 3-7,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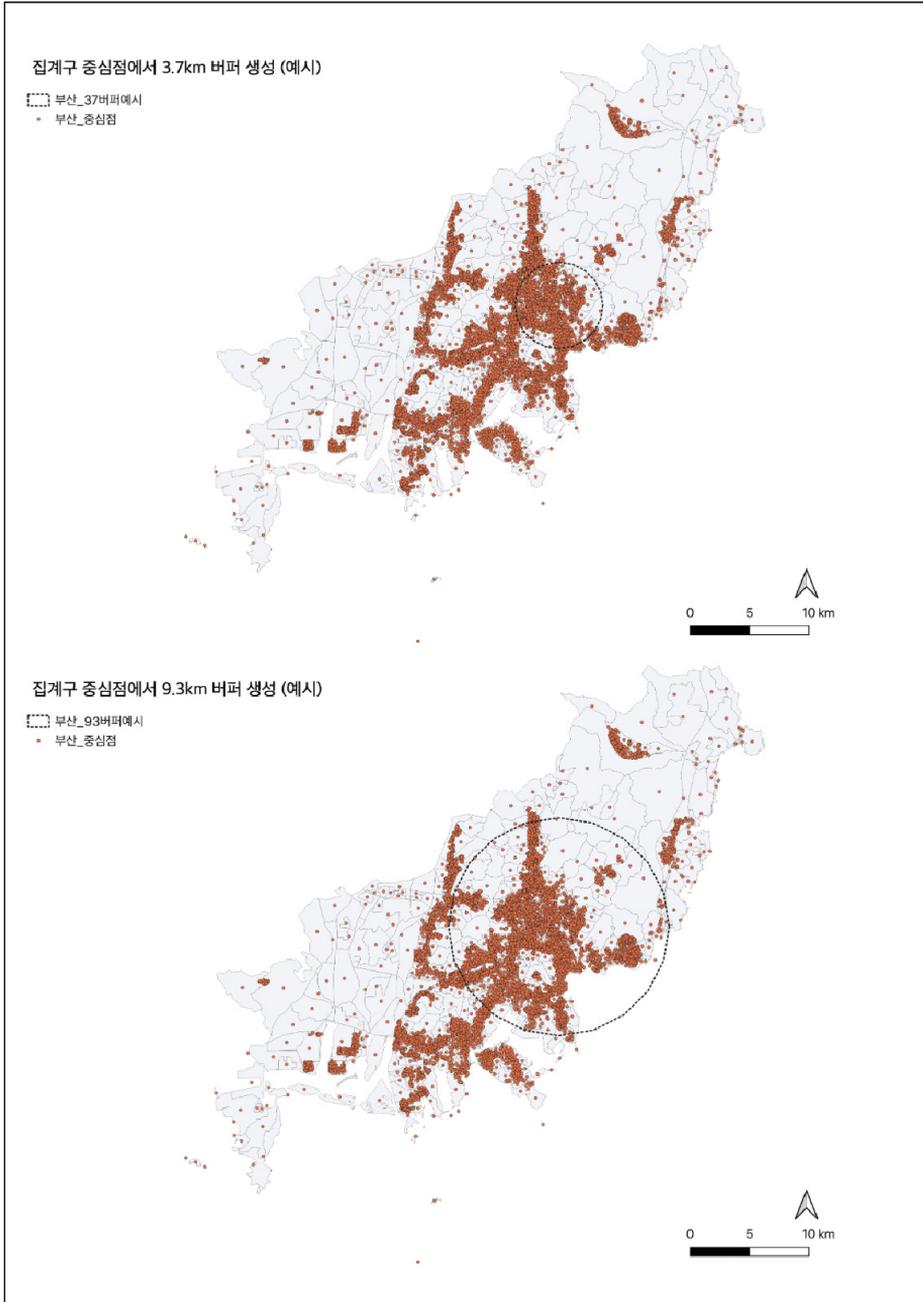
이후 각 집계구 중심으로부터 설정된 버퍼 내에 포함된 시설 개수를 기반으로 접근성 지표를 산출하였다 (표 3-13). 접근성 지표는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버퍼 내 도달 가능 시설 개수가 없을 경우, 접근성이 가장 낮은 5등급으로 평가하였다. 1개인 경우에는 4등급, 1개에서 5개 사이인 경우는 3등급, 5개에서 10개 사이인 경우는 2등급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버퍼 내 시설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접근성이 가장 높은 1등급으로 판단하였다.

〈표 3-13〉 시설 접근성 등급 정의

등급 구분	범위	등급 정의
1	10개 초과	집계구 중심에서 반경 내 도달 가능 시설 개수
2	5개 초과 10개 이하	
3	1개 초과 5개 이하	
4	1개	
5	0개	

32) 생활인프라 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8

[그림 3-7] 부산광역시 집계구 중심점 기준 버퍼 설정 예시  
 (도서관 기준 버퍼: 3.7km, 박물관 및 미술관 기준 버퍼: 9.3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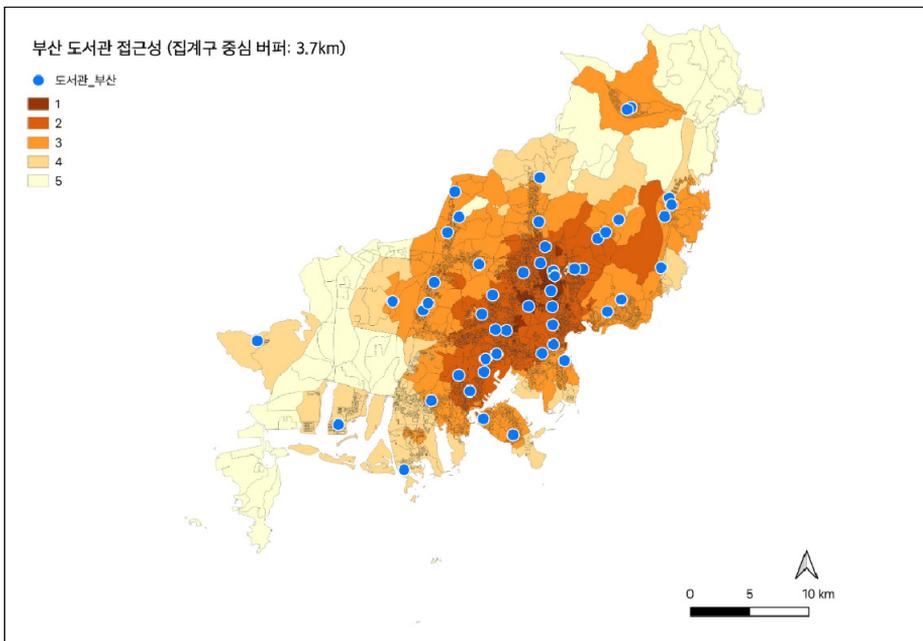
[그림 3-8] 전북 익산시 집계구 중심점 기준 버퍼 설정 예시  
 (도서관 기준 버퍼: 3.7km, 박물관 및 미술관 기준 버퍼: 9.3km)



## 2)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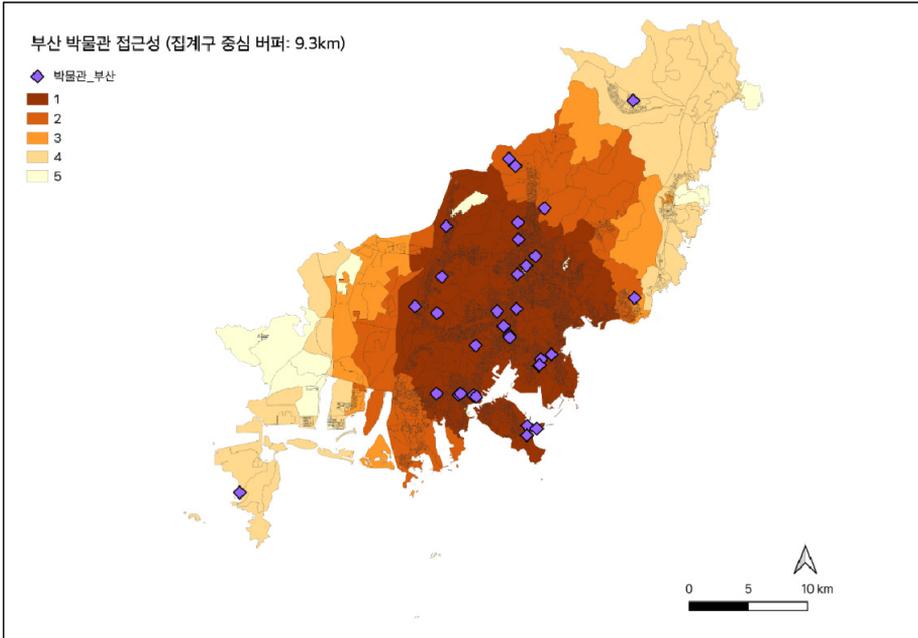
부산광역시 각 집계구 중심점에서 반경 3.7km 이내 존재하는 도서관 개수를 분석하고 앞서 기준에 따라 접근성 등급을 구분하였다(그림 3-9). 부산시 도서관은 총 51개로 분석 대상시설 중 가장 많은 개체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제구, 동래구를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밀집해있어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의 접근성 등급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산 도서관 접근성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림 3-9] 부산광역시 도서관 대상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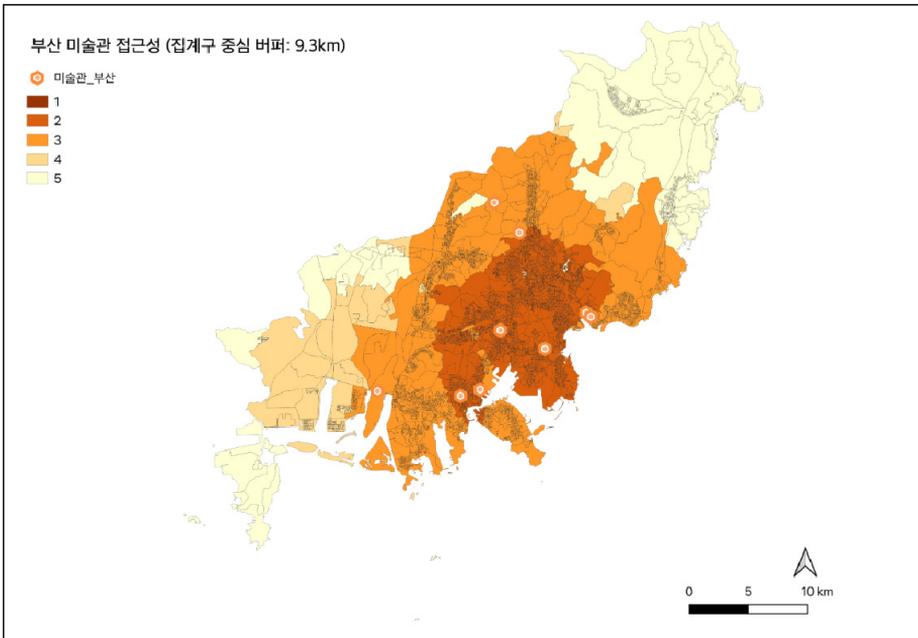


박물관과 미술관은 각 집계구 중심점에서 반경 9.3km 이내 존재하는 시설 개수를 통해 접근성 등급을 구분하였다(그림 3-10, 3-11). 박물관과 미술관 모두 동래구, 해운대구를 포함한 중앙 지역의 시설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물관 수는 많은 반면 미술관 수는 9개로 적어 중심부라고 해도 접근성 등급이 최고 2등급에 머물렀다. 두 개 시설 모두 부산 서측, 동측에 치우친 지역은 시설이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미술관 또한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며 이는 추후 시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로 변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3-10] 부산광역시 박물관 대상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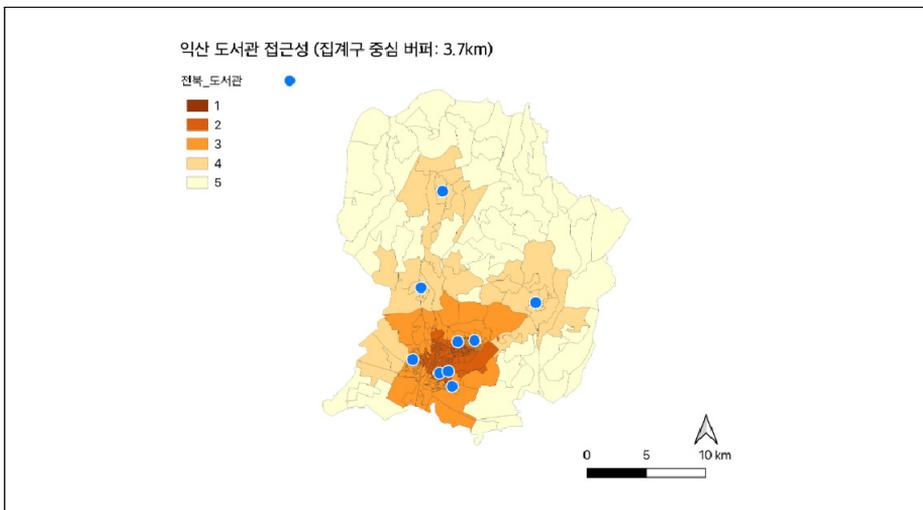
[그림 3-11] 부산광역시 미술관 대상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 3) 전북 익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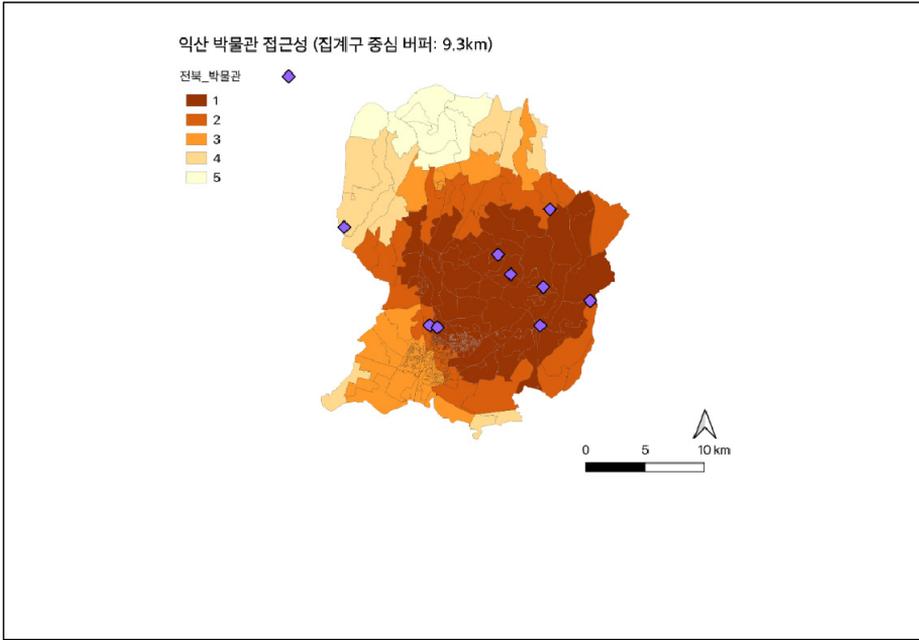
전북 익산시 각 집계구 중심점에서 반경 3.7km 이내 존재하는 도서관 개수를 분석하고 앞서 기준에 따라 접근성 등급을 구분하였다 (그림 3-12). 도서관의 경우 도심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 밀집해있고, 익산 제3산업단지가 입지한 삼기면 부근만 주변대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전북 익산시 도서관 대상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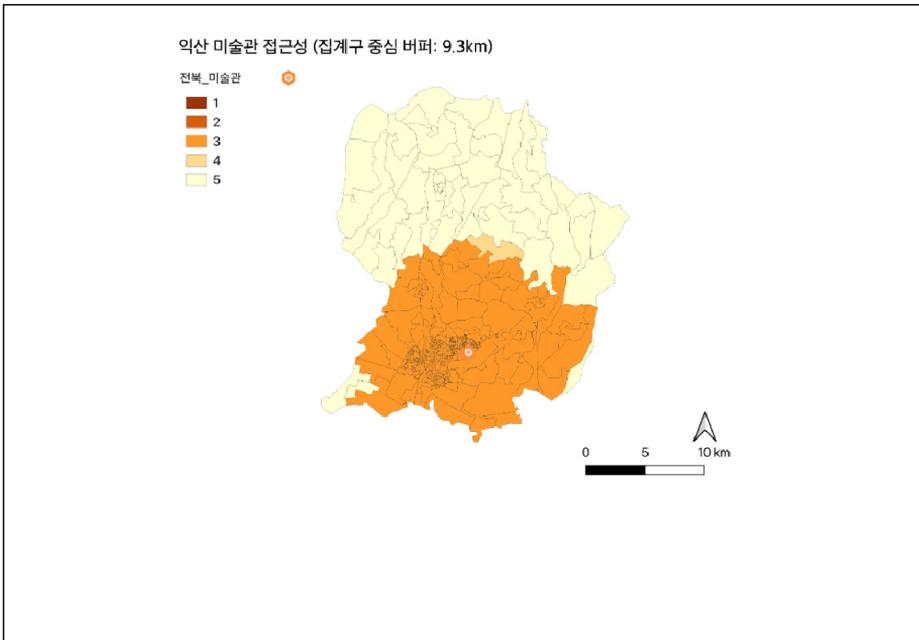


박물관과 미술관은 각 집계구 중심점에서 반경 9.3km 이내 존재하는 시설 개수를 통해 접근성 등급을 구분하였다 (그림 3-13, 3-14). 박물관은 익산시 중앙과 동측에 다수 분포해있어 해당 지역 전반이 접근성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술관의 경우 익산시 도심에 단 두 곳이 존재하기에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또한 접근가능 시설이 극도로 적은 4, 5등급의 접근성 수준을 나타냈다. 종합하자면 도서관과 미술관의 개재수가 적고 한곳에 밀집해있어 지역 전반의 시설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박물관의 접근성은 좋은 편에 속하나 외곽 지역의 경우 5등급의 낮은 접근성을 보이는 지역이 존재하여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3] 전북 익산시 박물관 대상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그림 3-14] 전북 익산시 미술관 대상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 4) 분석 결과 종합

접근성 분석결과, 도서관 3.7km, 박물관 및 미술관 9.3km 반경 내 시설 입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프라 도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계가 다수 분포하고 있었다. 광역지자체를 대표하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기초지자체 유형인 전북 익산시 보다 시설의 개체 수가 많고, 넓게 분포해있는 도심을 따라 접근성 3등급 이상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수 입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 미술관의 경우 부산 중앙에 위치한 지역 제외하고 동측, 서측의 시설 접근성 정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도심보다는 접근성 등급이 낮은 외곽 지역에 대한 시설확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도시규모가 부산광역시보다 작은 편이지만 시설 수가 매우 적어 도서관, 미술관의 경우 접근성 4, 5등급의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도심과 외곽 구분 없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시설 확장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방법은 집계구 중심에서 각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문화시설 접근성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됨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본 분석의 결과는 향후 문화정책 수립 시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절에서 분석한 접근성은 물리적인 접근가능 수준만을 고려한 지표이다. 더 나아가 해당 집계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규모를 고려하여 시설의 이용수준까지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 제2절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시설 입지지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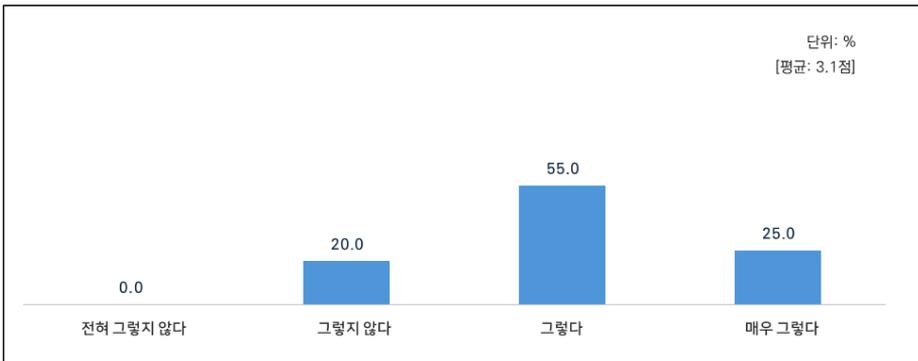
### 1. 현행 기준의 평가 및 개선 필요성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1, 2차를 통해 현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해 각 항목별 개선 필요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3-14〉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

구분	설치 및 공급 기준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8, 매 5년 마다 수립)에 의해 설치</li> <li>- 2028년까지 1,400관(3.7만 명 당 1개관)을 건립할 것을 목표로 함</li> <li>-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반영</li> <li>- 도서관 입지: 인구밀집지역 및 도보 12~20분(반경 1~1.5km) 접근 규정</li> </ul>
박물관 ·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2005~11, 2004년 수립)에 근거</li> <li>- 박물관·미술관: 인구 5만 명 당 1개관(OECD 평균 3.7만 명 당 1개관)</li> <li>-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 1관 추가 가능하고, 대도시 인구기준으로 건립 허용</li> <li>-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인구 50% 증가 시 1개소 추가건립 가능)</li> <li>-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당 1관 건립(인구 50% 증가 시 1개소 추가건립 가능)</li> </ul>

[그림 3-15]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표 3-15〉 현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 개선 필요성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0)	-	20.0	55.0	25.0	20.0	80.0	3.1	
성별	남성	(10)	-	10.0	60.0	30.0	10.0	90.0	3.2
	여성	(10)	-	30.0	50.0	20.0	30.0	70.0	2.9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0.0	75.0	25.0	0.0	100.0	3.3
	교수/연구자	(8)	-	0.0	75.0	25.0	0.0	100.0	3.3
	공공기관 종사자	(7)	-	42.9	28.6	28.6	42.9	57.1	2.9
	기타	(1)	-	100.0	0.0	0.0	100.0	0.0	2.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50.0	0.0	50.0	50.0	50.0	3.0
	2년~5년 미만	(1)	-	0.0	100.0	0.0	0.0	100.0	3.0
	5년~10년 미만	(2)	-	0.0	100.0	0.0	0.0	100.0	3.0
	10년 이상	(15)	-	20.0	53.3	26.7	20.0	80.0	3.1
연령	30대	(6)	-	16.7	33.3	50.0	16.7	83.3	3.3
	40대	(8)	-	25.0	75.0	0.0	25.0	75.0	2.8
	50대	(5)	-	0.0	60.0	40.0	0.0	100.0	3.4
	60대 이상	(1)	-	100.0	0.0	0.0	100.0	0.0	2.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25.0	50.0	25.0	25.0	75.0	3.0
	충청	(6)	-	16.7	50.0	33.3	16.7	83.3	3.2
	전라	(2)	-	50.0	50.0	0.0	50.0	50.0	2.5
	경상	(3)	-	0.0	66.7	33.3	0.0	100.0	3.3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②그렇지 않다/③그렇다/④매우 그렇다)로 전체 항목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 여부를 질문한 결과 1차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평균점수로 환산 시 3.1점(최대 4점)이다. 해당 응답에 관한 동의 정도(①매우낮음/②낮음/③높음/④매우높음)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차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가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었고, 이에 대한 평균점수는 3.7점이다.

## 가. 도서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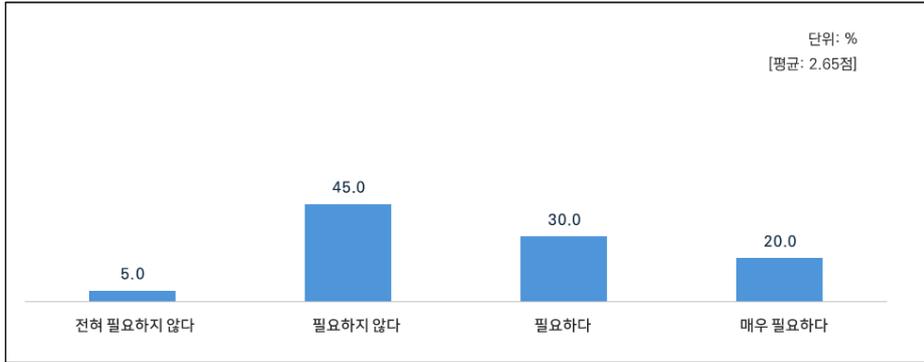
텔파이조사 결과 4점 만점에 3.1점으로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의 전체 항목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도서관에 해당하는 각 항목별 개선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중립의견에 가까운 평균점수가 확인되었다. (도서관-1)인구 3.7만 명 당 1개관을 목표로 2028년까지 1,400관 건립, (도서관-2)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반영, (도서관-3)인구밀집지역 및 도보 12~20분(반경 1~1.5km) 접근 규정에 관한 각 항목은 개선 필요 정도(①전혀 필요하지 않다/②필요하지 않다/③필요하다/④매우 필요하다)에 있어 각각 (도서관-1)2.65점, (도서관-2)2.85점, (도서관-3)2.75점으로 4점 척도에서 중립의견 평균점수인 2.5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항목에 응답한 이유에 대해 서술식 문항을 통해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도서관-1) 항목과 관련하여 단순히 1,400관 건립 기준이 아닌 개별 시설의 규모와 지역적, 인구 구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도심, 도시, 농·어촌 등 상황에 따른 구분과 세부항목에 따른 건립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개별 지역에 따른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고, 인구에 따른 도서관 시설의 연면적과 사서 수를 산정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도서관-2) 항목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 이유에 따르면 각 지역자치단체별 재정적, 인구 구성의 특성에 따라 국고보조 비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주요 도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한 주민의 요구가 있을 수 있기에 특수목적 도서관을 포함한 시설의 추가수요를 반영하여 국고보조 비율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한편 도서관 입지와 관련한 (도서관-3) 항목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 이유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 도서관 기준으로 반경 약 1km 거리 수준이 적정할 것이나,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할 시 해당 거리 기준의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인구 대비 평균 도서관 확보율뿐만 아니라 관련 수요조사, 대중교통 접근 기능여부 등 전반적인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입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16] 인구 3.7만 명 당 1개관을 목표로 2028년까지 1,400관 건립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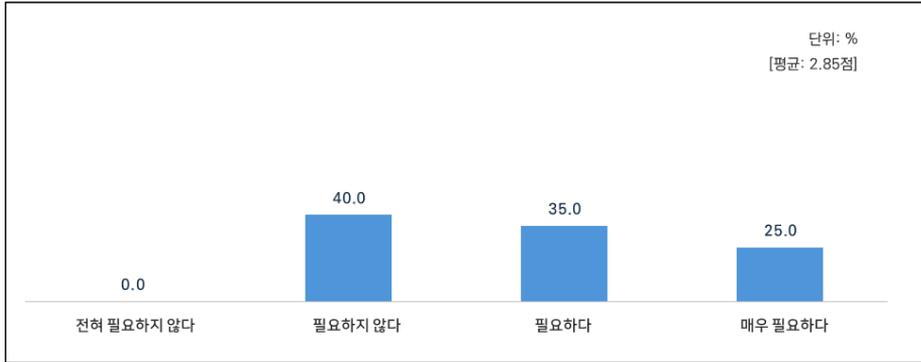


<표 3-16> 인구 3.7만 명 당 1개관을 목표로 2028년까지 1,400관 건립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전체	(20)	5.0	45.0	30.0	20.0	50.0	50.0	2.7	
성별	남성	(10)	0.0	30.0	40.0	30.0	30.0	70.0	3.0
	여성	(10)	10.0	60.0	20.0	10.0	70.0	30.0	2.3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0.0	75.0	0.0	25.0	75.0	25.0	2.5
	교수/연구자	(8)	0.0	25.0	50.0	25.0	25.0	75.0	3.0
	공공기관 종사자	(7)	0.0	57.1	28.6	14.3	57.1	42.9	2.6
	기타	(1)	100.0	0.0	0.0	0.0	100.0	0.0	1.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0.0	100.0	0.0	0.0	100.0	0.0	2.0
	2년~5년 미만	(1)	0.0	0.0	100.0	0.0	0.0	100.0	3.0
	5년~10년 미만	(2)	0.0	100.0	0.0	0.0	100.0	0.0	2.0
	10년 이상	(15)	6.7	33.3	33.3	26.7	40.0	60.0	2.8
연령	30대	(6)	16.7	50.0	16.7	16.7	66.7	33.3	2.3
	40대	(8)	0.0	62.5	37.5	0.0	62.5	37.5	2.4
	50대	(5)	0.0	0.0	40.0	60.0	0.0	100.0	3.6
	60대 이상	(1)	0.0	100.0	0.0	0.0	100.0	0.0	2.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12.5	50.0	12.5	25.0	62.5	37.5	2.5
	충청	(6)	0.0	16.7	50.0	33.3	16.7	83.3	3.2
	전라	(2)	0.0	50.0	50.0	0.0	50.0	50.0	2.5
	경상	(3)	0.0	66.7	33.3	0.0	66.7	33.3	2.3
	제주	(1)	0.0	100.0	0.0	0.0	100.0	0.0	2.0

[그림 3-17]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반영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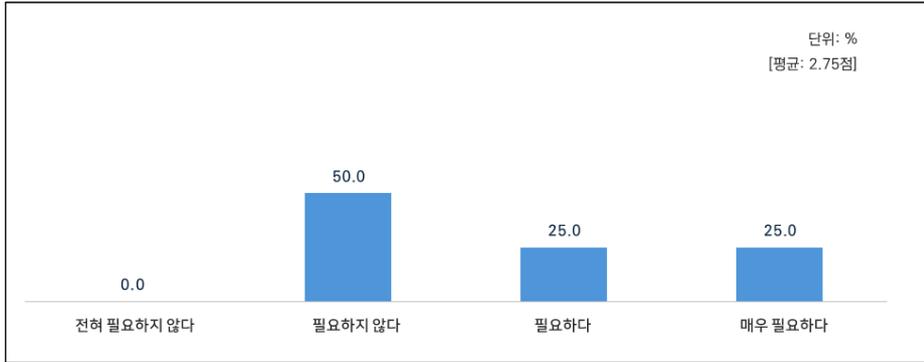


<표 3-17>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반영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전체	(20)	-	40.0	35.0	25.0	40.0	60.0	2.9	
성별	남성	(10)	-	40.0	20.0	40.0	40.0	60.0	3.0
	여성	(10)	-	40.0	50.0	10.0	40.0	60.0	2.7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50.0	50.0	0.0	50.0	50.0	2.5
	교수/연구자	(8)	-	37.5	12.5	50.0	37.5	62.5	3.1
	공공기관 종사자	(7)	-	28.6	57.1	14.3	28.6	71.4	2.9
	기타	(1)	-	100.0	0.0	0.0	100.0	0.0	2.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50.0	50.0	0.0	50.0	50.0	2.5
	2년~5년 미만	(1)	-	0.0	100.0	0.0	0.0	100.0	3.0
	5년~10년 미만	(2)	-	100.0	0.0	0.0	100.0	0.0	2.0
	10년 이상	(15)	-	33.3	33.3	33.3	33.3	66.7	3.0
연령	30대	(6)	-	66.7	33.3	0.0	66.7	33.3	2.3
	40대	(8)	-	37.5	37.5	25.0	37.5	62.5	2.9
	50대	(5)	-	20.0	20.0	60.0	20.0	80.0	3.4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37.5	50.0	12.5	37.5	62.5	2.8
	충청	(6)	-	33.3	33.3	33.3	33.3	66.7	3.0
	전라	(2)	-	0.0	50.0	50.0	0.0	100.0	3.5
	경상	(3)	-	66.7	0.0	33.3	66.7	33.3	2.7
	제주	(1)	-	100.0	0.0	0.0	100.0	0.0	2.0

[그림 3-18] 인구밀집지역 및 도보 12~20분(반경 1~1.5km) 접근 규정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표 3-18> 인구밀집지역 및 도보 12~20분(반경 1~1.5km) 접근 규정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전체	(20)	-	50.0	25.0	25.0	50.0	50.0	2.8	
성별	남성	(10)	-	40.0	30.0	30.0	40.0	60.0	2.9
	여성	(10)	-	60.0	20.0	20.0	60.0	40.0	2.6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75.0	0.0	25.0	75.0	25.0	2.5
	교수/연구자	(8)	-	25.0	50.0	25.0	25.0	75.0	3.0
	공공기관 종사자	(7)	-	57.1	14.3	28.6	57.1	42.9	2.7
	기타	(1)	-	100.0	0.0	0.0	100.0	0.0	2.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100.0	0.0	0.0	100.0	0.0	2.0
	2년~5년 미만	(1)	-	0.0	100.0	0.0	0.0	100.0	3.0
	5년~10년 미만	(2)	-	100.0	0.0	0.0	100.0	0.0	2.0
	10년 이상	(15)	-	40.0	26.7	33.3	40.0	60.0	2.9
연령	30대	(6)	-	66.7	0.0	33.3	66.7	33.3	2.7
	40대	(8)	-	62.5	37.5	0.0	62.5	37.5	2.4
	50대	(5)	-	0.0	40.0	60.0	0.0	100.0	3.6
	60대 이상	(1)	-	100.0	0.0	0.0	100.0	0.0	2.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50.0	25.0	25.0	50.0	50.0	2.8
	충청	(6)	-	16.7	33.3	50.0	16.7	83.3	3.3
	전라	(2)	-	100.0	0.0	0.0	100.0	0.0	2.0
	경상	(3)	-	66.7	33.3	0.0	66.7	33.3	2.3
	제주	(1)	-	100.0	0.0	0.0	100.0	0.0	2.0

## 나.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

박물관·미술관에 해당하는 각 항목별 개선 필요 여부의 델파이조사 결과는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박물관·미술관-1)인구 5만 명 당 1개관, (박물관·미술관-2)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 1관 추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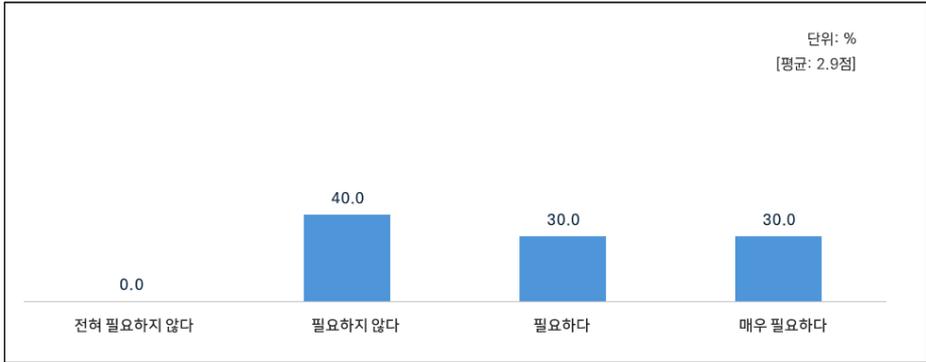
(박물관·미술관-3)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 (박물관·미술관-4)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당 1관 건립의 항목별 개선 필요 정도에 대해 각각 (박물관·미술관-1)2.9점, (박물관·미술관-2)2.8점, (박물관·미술관-3)2.9점, (박물관·미술관-4)2.7점으로 분석되었다.

각 항목에 응답한 이유에 대해 서술식 문항을 통해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박물관·미술관-1) 항목과 관련하여 인구 수에 따른 설치 및 공급 기준 보다는 각 시설의 건립 및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고, 전문인력 및 가치있는 소장품 확보와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박물관·미술관의 수장고 포화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설치 및 공급 기준이 적정 수준이라는 일부 의견과 신규 건립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폐관하지 않고, 각 지역 특성에 맞춰 개선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박물관·미술관-2) 항목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 이유에 따르면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를 대상으로 한 신규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문화시설에 있어 국내 주요도시 내 박물관·미술관 수가 인구대비 현저히 부족하다는 일부 응답이 확인되었다.

기초자치단체 내 건립 기준에 해당하는 (박물관·미술관-3)과 (박물관·미술관-4) 항목에 경우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기초시설로서 인구가 적은 지방의 기초자치단체 내 설치 및 건립을 적극 고려해야 하고, 지역 관광수요와 연계할 수 있도록 특화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국고보조를 통해 소규모 박물관·미술관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그림 3-19] 인구 5만 명 당 1개관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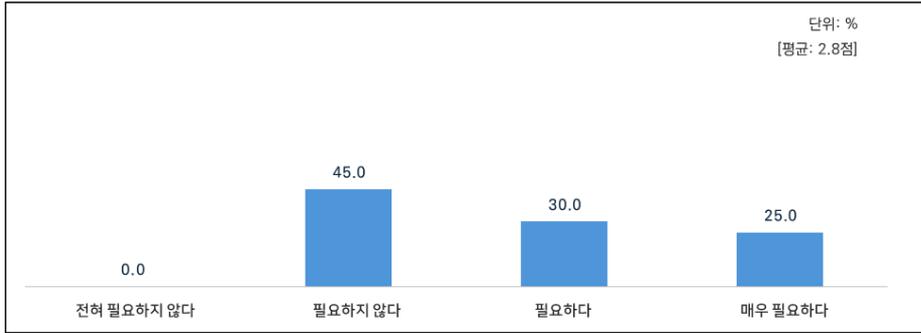


<표 3-19> 인구 5만 명 당 1개관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전체	(20)	-	40.0	30.0	30.0	40.0	60.0	2.9	
성별	남성	(10)	-	20.0	50.0	30.0	20.0	80.0	3.1
	여성	(10)	-	60.0	10.0	30.0	60.0	40.0	2.7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25.0	50.0	25.0	25.0	75.0	3.0
	교수/연구자	(8)	-	37.5	37.5	25.0	37.5	62.5	2.9
	공공기관 종사자	(7)	-	42.9	14.3	42.9	42.9	57.1	3.0
	기타	(1)	-	100.0	0.0	0.0	100.0	0.0	2.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50.0	0.0	50.0	50.0	50.0	3.0
	2년~5년 미만	(1)	-	0.0	100.0	0.0	0.0	100.0	3.0
	5년~10년 미만	(2)	-	50.0	50.0	0.0	50.0	50.0	2.5
	10년 이상	(15)	-	40.0	26.7	33.3	40.0	60.0	2.9
연령	30대	(6)	-	33.3	16.7	50.0	33.3	66.7	3.2
	40대	(8)	-	50.0	37.5	12.5	50.0	50.0	2.6
	50대	(5)	-	20.0	40.0	40.0	20.0	80.0	3.2
	60대 이상	(1)	-	100.0	0.0	0.0	100.0	0.0	2.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62.5	12.5	25.0	62.5	37.5	2.6
	충청	(6)	-	16.7	50.0	33.3	16.7	83.3	3.2
	전라	(2)	-	50.0	50.0	0.0	50.0	50.0	2.5
	경상	(3)	-	33.3	0.0	66.7	33.3	66.7	3.3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그림 3-20]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 1관 추가 가능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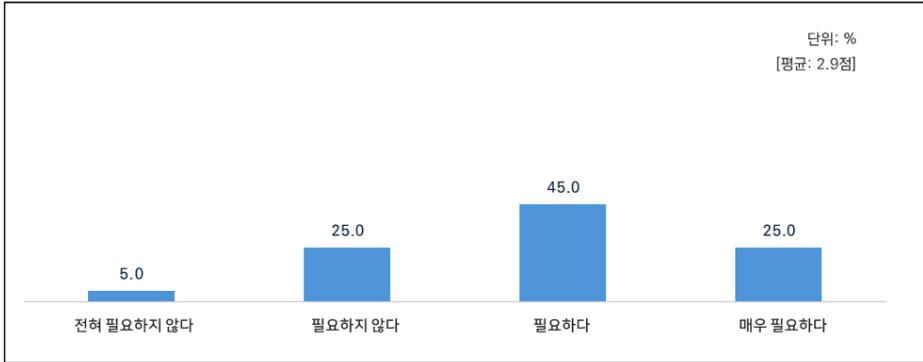


<표 3-20>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 1관 추가 가능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전체	(20)	-	45.0	30.0	25.0	45.0	55.0	2.8	
성별	남성	(10)	-	50.0	40.0	10.0	50.0	50.0	2.6
	여성	(10)	-	40.0	20.0	40.0	40.0	60.0	3.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75.0	0.0	25.0	75.0	25.0	2.5
	교수/연구자	(8)	-	50.0	50.0	0.0	50.0	50.0	2.5
	공공기관 종사자	(7)	-	14.3	28.6	57.1	14.3	85.7	3.4
	기타	(1)	-	100.0	0.0	0.0	100.0	0.0	2.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2년~5년 미만	(1)	-	0.0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	50.0	50.0	0.0	50.0	50.0	2.5
	10년 이상	(15)	-	53.3	26.7	20.0	53.3	46.7	2.7
연령	30대	(6)	-	33.3	16.7	50.0	33.3	66.7	3.2
	40대	(8)	-	50.0	37.5	12.5	50.0	50.0	2.6
	50대	(5)	-	60.0	20.0	20.0	60.0	40.0	2.6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75.0	12.5	12.5	75.0	25.0	2.4
	충청	(6)	-	33.3	16.7	50.0	33.3	66.7	3.2
	전라	(2)	-	0.0	100.0	0.0	0.0	100.0	3.0
	경상	(3)	-	0.0	66.7	33.3	0.0	100.0	3.3
	제주	(1)	-	100.0	0.0	0.0	100.0	0.0	2.0

〈그림 3-21〉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 가능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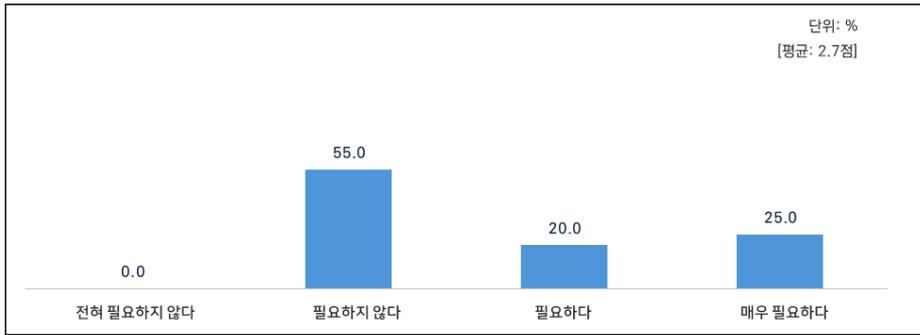


〈표 3-21〉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 가능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전체	(20)	5.0	25.0	45.0	25.0	30.0	70.0	2.9	
성별	남성	(10)	0.0	50.0	20.0	30.0	50.0	50.0	2.8
	여성	(10)	10.0	0.0	70.0	20.0	10.0	90.0	3.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0.0	25.0	25.0	50.0	25.0	75.0	3.3
	교수/연구자	(8)	0.0	37.5	50.0	12.5	37.5	62.5	2.8
	공공기관 종사자	(7)	0.0	14.3	57.1	28.6	14.3	85.7	3.1
	기타	(1)	100.0	0.0	0.0	0.0	100.0	0.0	1.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0.0	0.0	50.0	50.0	0.0	100.0	3.5
	2년~5년 미만	(1)	0.0	0.0	100.0	0.0	0.0	100.0	3.0
	5년~10년 미만	(2)	0.0	50.0	50.0	0.0	50.0	50.0	2.5
	10년 이상	(15)	6.7	26.7	40.0	26.7	33.3	66.7	2.9
연령	30대	(6)	16.7	0.0	33.3	50.0	16.7	83.3	3.2
	40대	(8)	0.0	25.0	62.5	12.5	25.0	75.0	2.9
	50대	(5)	0.0	60.0	20.0	20.0	60.0	40.0	2.6
	60대 이상	(1)	0.0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12.5	25.0	37.5	25.0	37.5	62.5	2.8
	충청	(6)	0.0	33.3	50.0	16.7	33.3	66.7	2.8
	전라	(2)	0.0	0.0	100.0	0.0	0.0	100.0	3.0
	경상	(3)	0.0	0.0	33.3	66.7	0.0	100.0	3.7
	제주	(1)	0.0	100.0	0.0	0.0	100.0	0.0	2.0

[그림 3-22]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당 1관 건립 가능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표 3-22>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당 1관 건립 가능 항목에 관한 개선 필요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전체	(20)	-	55.0	20.0	25.0	55.0	45.0	2.7	
성별	남성	(10)	-	50.0	20.0	30.0	50.0	50.0	2.8
	여성	(10)	-	60.0	20.0	20.0	60.0	40.0	2.6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50.0	0.0	50.0	50.0	50.0	3.0
	교수/연구자	(8)	-	62.5	25.0	12.5	62.5	37.5	2.5
	공공기관 종사자	(7)	-	42.9	28.6	28.6	42.9	57.1	2.9
	기타	(1)	-	100.0	0.0	0.0	100.0	0.0	2.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50.0	0.0	50.0	50.0	50.0	3.0
	2년~5년 미만	(1)	-	0.0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	50.0	50.0	0.0	50.0	50.0	2.5
	10년 이상	(15)	-	60.0	20.0	20.0	60.0	40.0	2.6
연령	30대	(6)	-	33.3	16.7	50.0	33.3	66.7	3.2
	40대	(8)	-	50.0	25.0	25.0	50.0	50.0	2.8
	50대	(5)	-	80.0	20.0	0.0	80.0	20.0	2.2
	60대 이상	(1)	-	100.0	0.0	0.0	100.0	0.0	2.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62.5	12.5	25.0	62.5	37.5	2.6
	충청	(6)	-	50.0	33.3	16.7	50.0	50.0	2.7
	전라	(2)	-	100.0	0.0	0.0	100.0	0.0	2.0
	경상	(3)	-	0.0	33.3	66.7	0.0	100.0	3.7
	제주	(1)	-	100.0	0.0	0.0	100.0	0.0	2.0

## 2.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지표 개발 및 분석

### 가.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정의

본 연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접근성' 지표를 활용하여 시설 입지의 적절성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성 지표는 단순히 거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시설의 효용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인구규모를 의미하는 인구밀도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지표에 인구 요소를 가중치로 포함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로 명명되었으며, 특정 집계구의 인구가 해당 반경 내의 문화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집계구 중심점에서 반경 3.7km 또는 9.7km 내에 위치한 문화시설의 개수를 기준으로 접근성을 등급화하고, 이 등급에 집계구의 인구밀도를 등급화한 값을 곱하여 새로운 지표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집계구 중심에서 특정 반경 내 도달 가능한 시설의 수를 기준으로 접근성 등급을 산정하였다. 인구밀도의 경우 국내 소단위 행정구역 분류기준과 분석대상지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표 3-23과 같이 등급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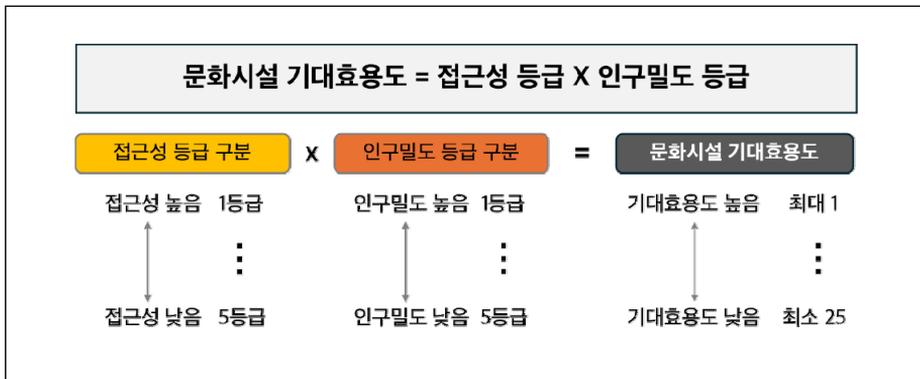
〈표 3-23〉 인구밀도에 따른 등급 정의

등급 구분	범위	등급 정의
1	3000명/km <sup>2</sup> 초과	인구밀도가 평균 수준으로 안정적인 지역
2	1000명/km <sup>2</sup> 초과 3000명/km <sup>2</sup> 이하	인구밀도가 낮아 인구유출 위험이 있는 지역
3	500명/km <sup>2</sup> 초과 1000명/km <sup>2</sup> 이하	전형적 농촌지역의 밀도로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한 지역
4	100명/km <sup>2</sup> 초과 500명/km <sup>2</sup> 이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
5	100명/km <sup>2</sup> 이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지표는 접근성 등급과 인구밀도 등급에 기반하여 산출되므로, 해당 등급의 수치에 비례 한다(그림 3-23). 접근성 5개 등급과 인구밀도 5개 등급 간의 연산에 따라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는 최저 1부터 최고 25까지의 값을 가진다. 지표 값이

낮을수록 더 높은 등급, 즉 1등급에 가까운 등급 간의 연산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집계구의 인구가 문화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지표 값이 높을수록 낮은 등급, 즉 5등급에 가까운 등급 간의 연산을 의미하며, 이는 시설 이용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 지표를 통해 특정 집계구 내 인구의 문화시설 접근성과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3-23]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정의 및 산정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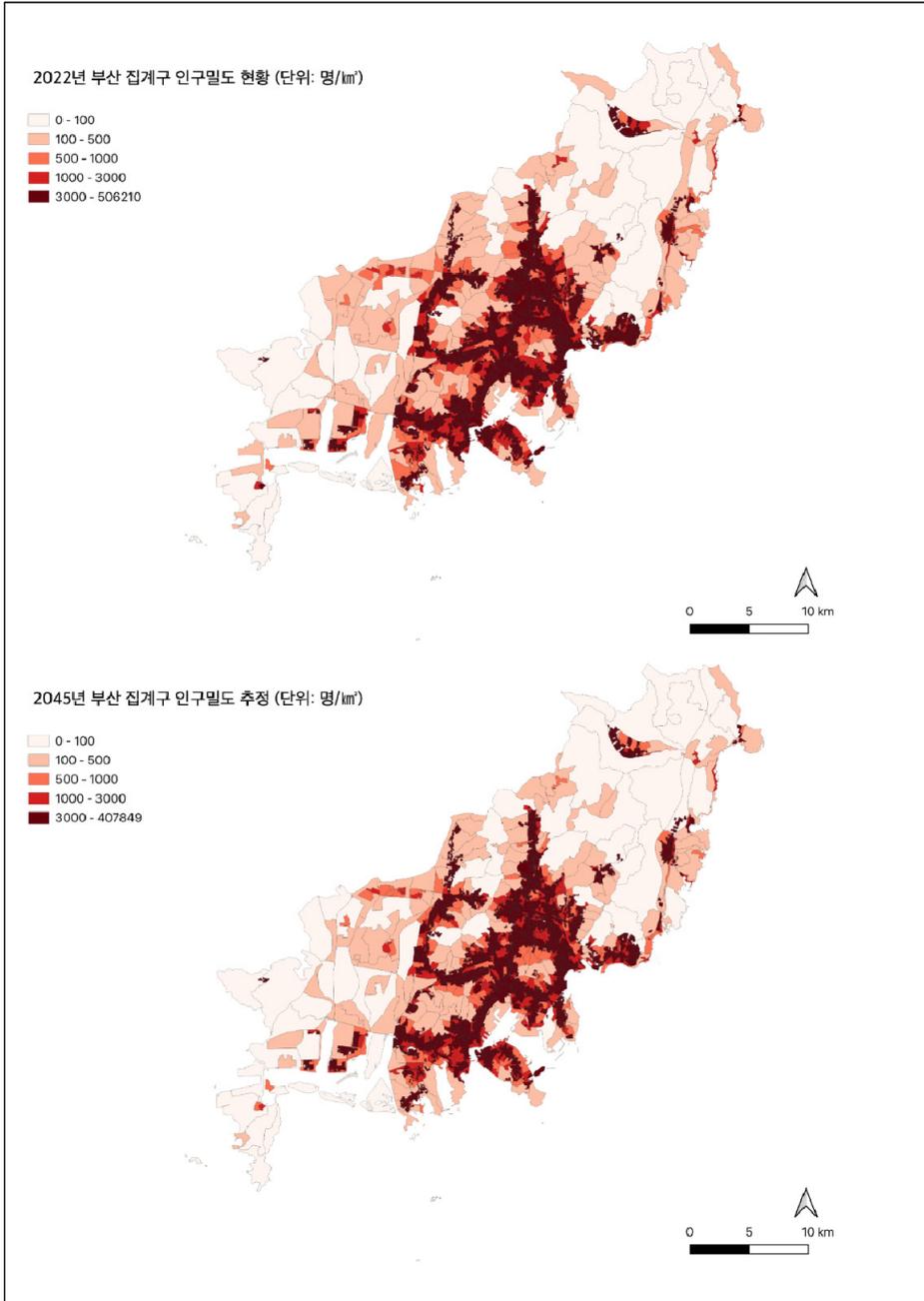
## 나. 대상지별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분석

### 1) 대상지 인구밀도 등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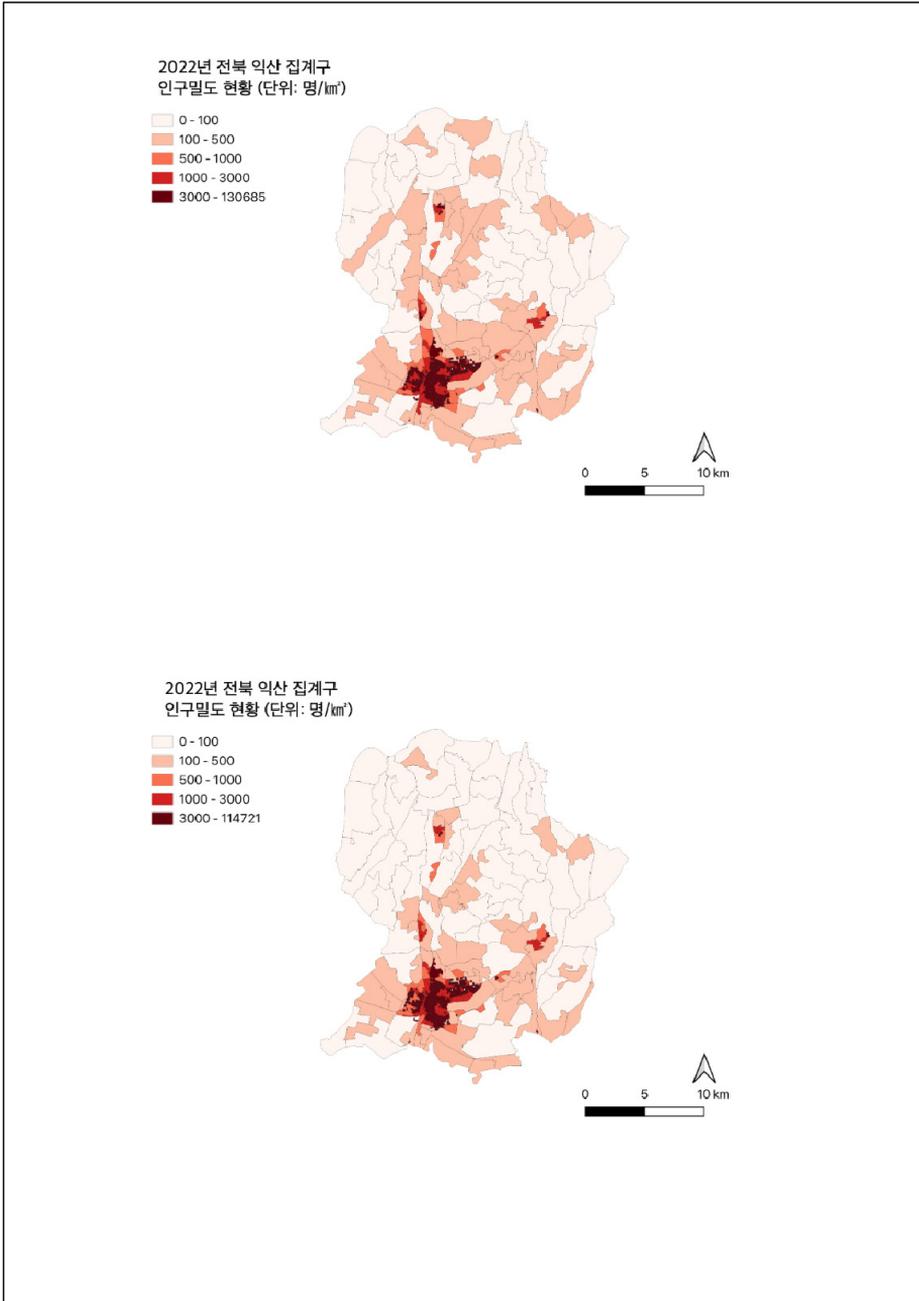
본 절에서는 2022년 기준 문화시설 분포에 맞춰 2022년 인구밀도를 고려한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현황과 2045년 변화된 인구밀도를 반영한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추정값을 산출하였다. 두 수치를 비교하여 2022년 대비 2045년 기대효용도 변화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인구밀도 등급화 기준에 따라 2022년, 2045년 부산광역시와 전북 익산의 인구밀도 등급 분포는 그림 3-24, 3-25와 같다.

두 지역 모두 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라 집계구의 인구밀도 또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지역 전반에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2045년에 해당 시가지 인근 집계구 인구밀도가 크게 준 것을 알 수 있다. 익산의 경우 단핵 중심지 구조로 도심 외곽 지역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 대부분이나, 2045년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가 100명/㎢ 이하로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4] 2022년, 2045년 부산광역시 집계구 인구밀도



[그림 3-25] 2022년, 2045년 전북 익산시 집계구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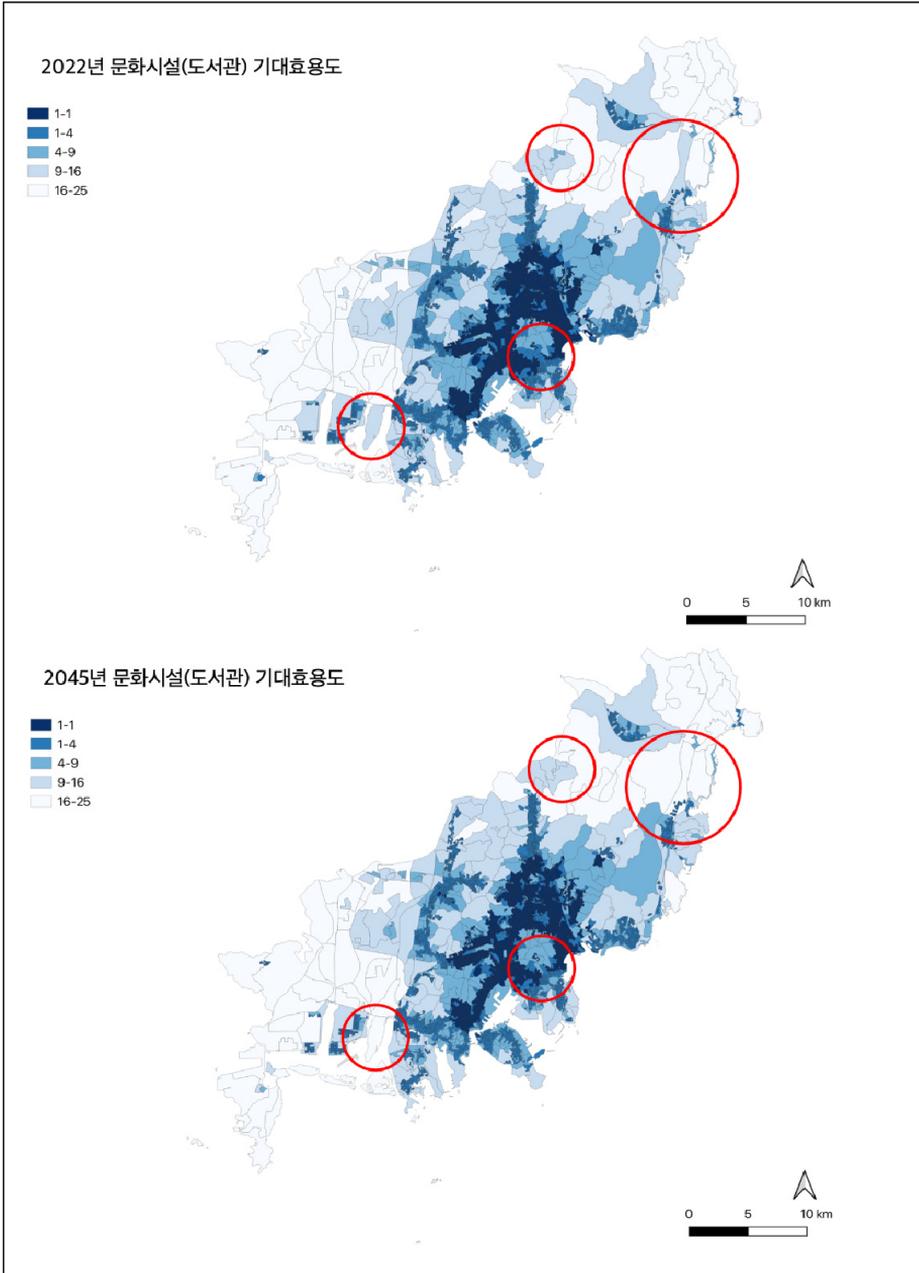
## 2) 2022년 기준 문화시설 분포에 따른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추정

### ①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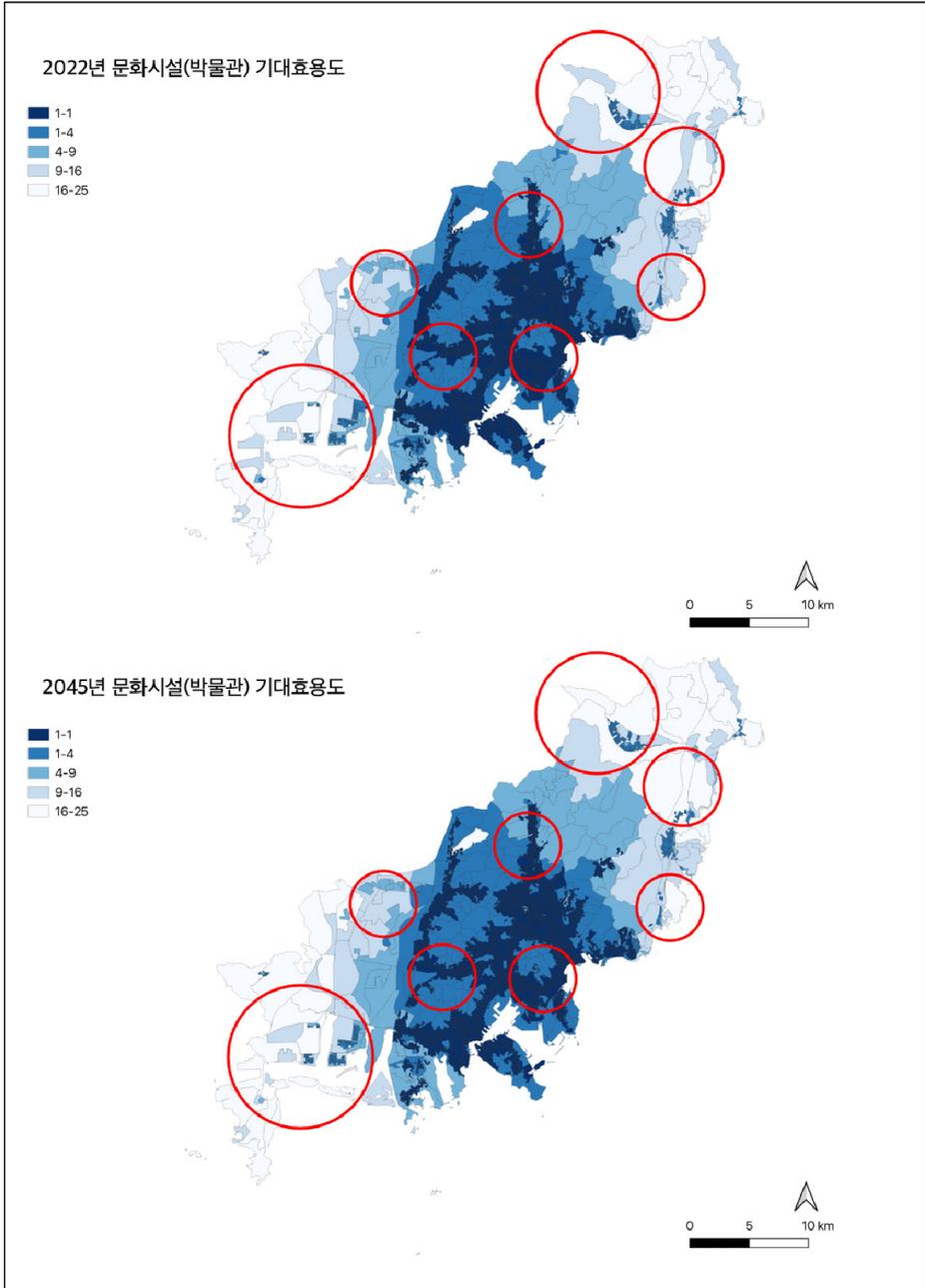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시설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 분포해있기 때문에, 집계구별 기대효용도 또한 인구밀도 등급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의 경우 중심부 보다 외곽의 일부지역에서 2022년 대비 2045년 기대효용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의 경우 타 문화시설 대비 접근성 높은 지역이 면적이 가장 많았고, 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집계구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기대효용도 또한 중심지의 시가지 지역을 따라 높은 수치를 가지는 집계구가 밀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45년에 들어서 인구밀도 감소의 영향으로 중심부 일부지역의 기대효용도가 감소하고 외곽의 다수 지역에서는 기대효용도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미술관의 경우 또한 지역 중앙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며, 2045년에는 이러한 양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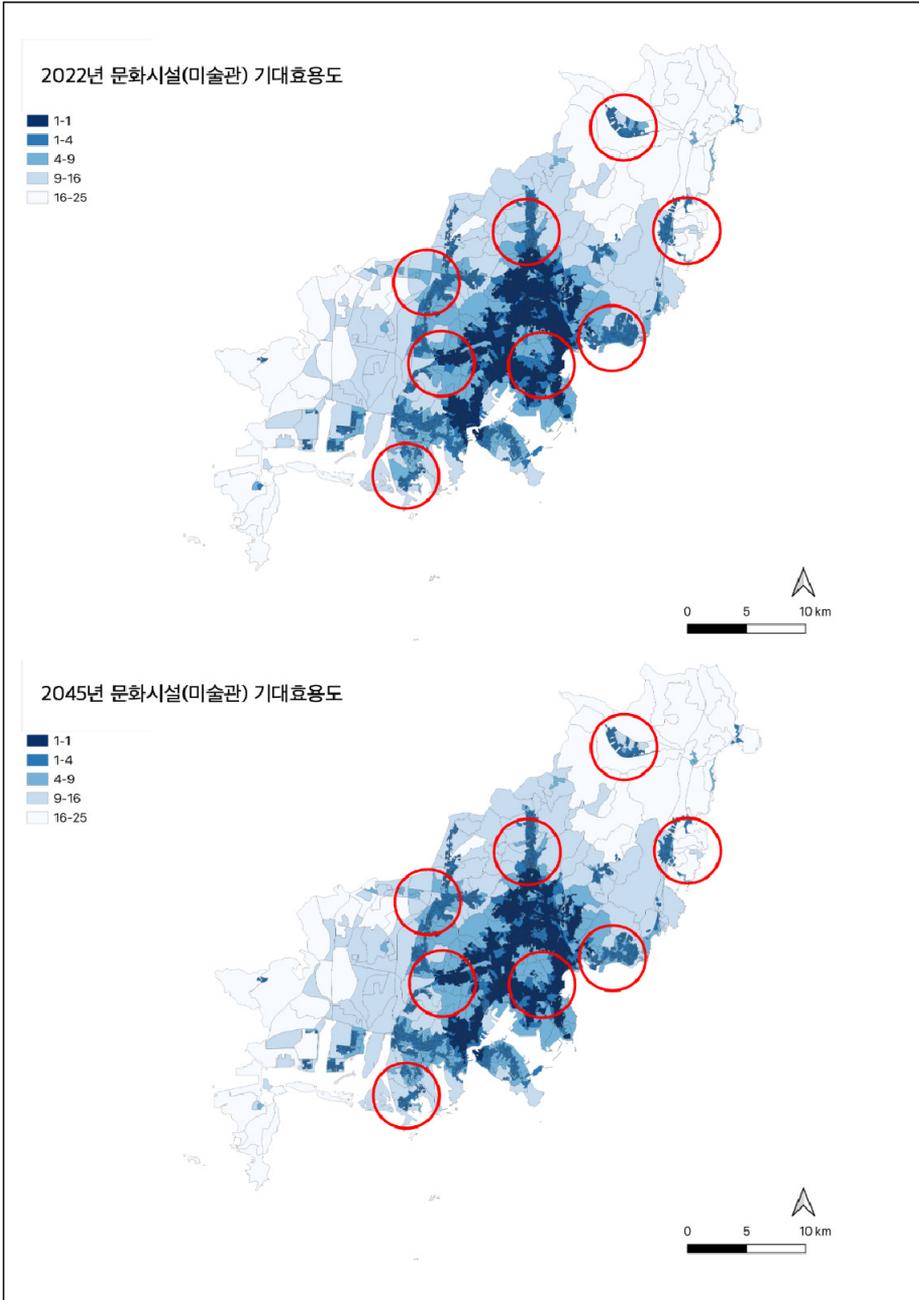
[그림 3-26] 2022년, 2045년 부산광역시 문화시설(도서관) 기대효용도  
 (붉은색 ○: 기대효용도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지역 표기)



[그림 3-27] 2022년, 2045년 부산광역시 문화시설(박물관) 기대효용도  
 (붉은색 ○: 기대효용도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지역 표기)



[그림 3-28] 2022년, 2045년 부산광역시 문화시설(미술관) 기대효용도  
 (붉은색 ○: 기대효용도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지역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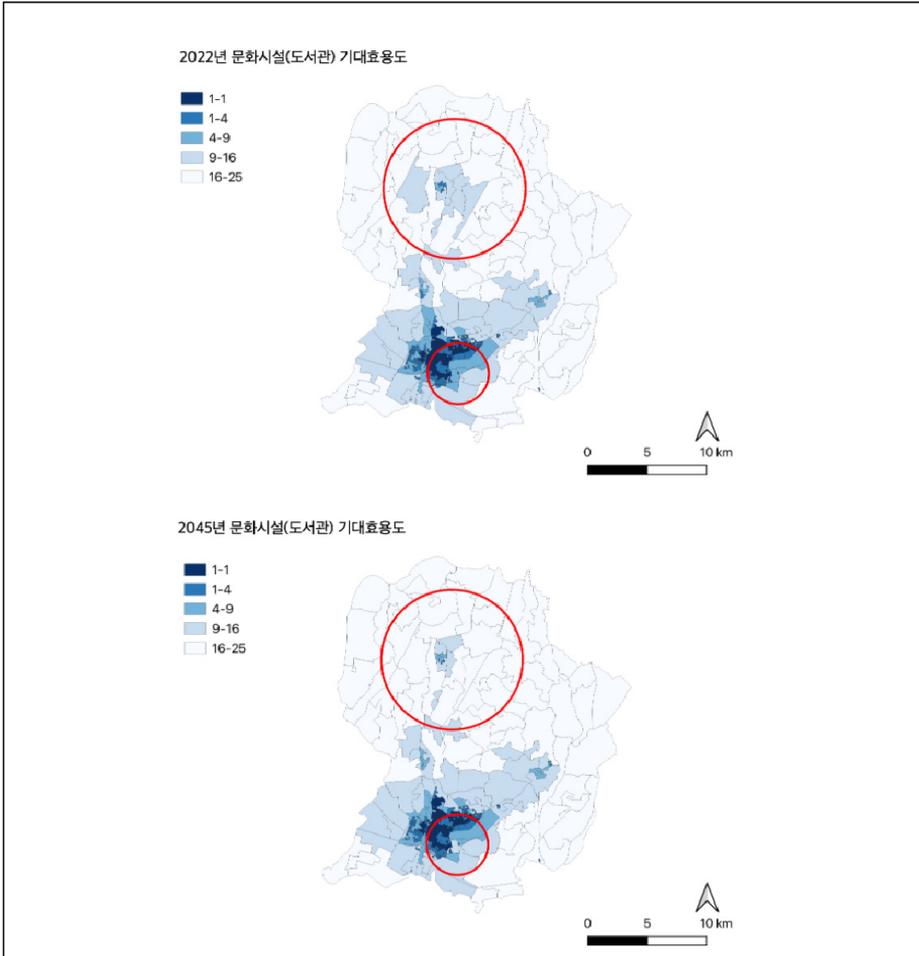


## ② 전북 익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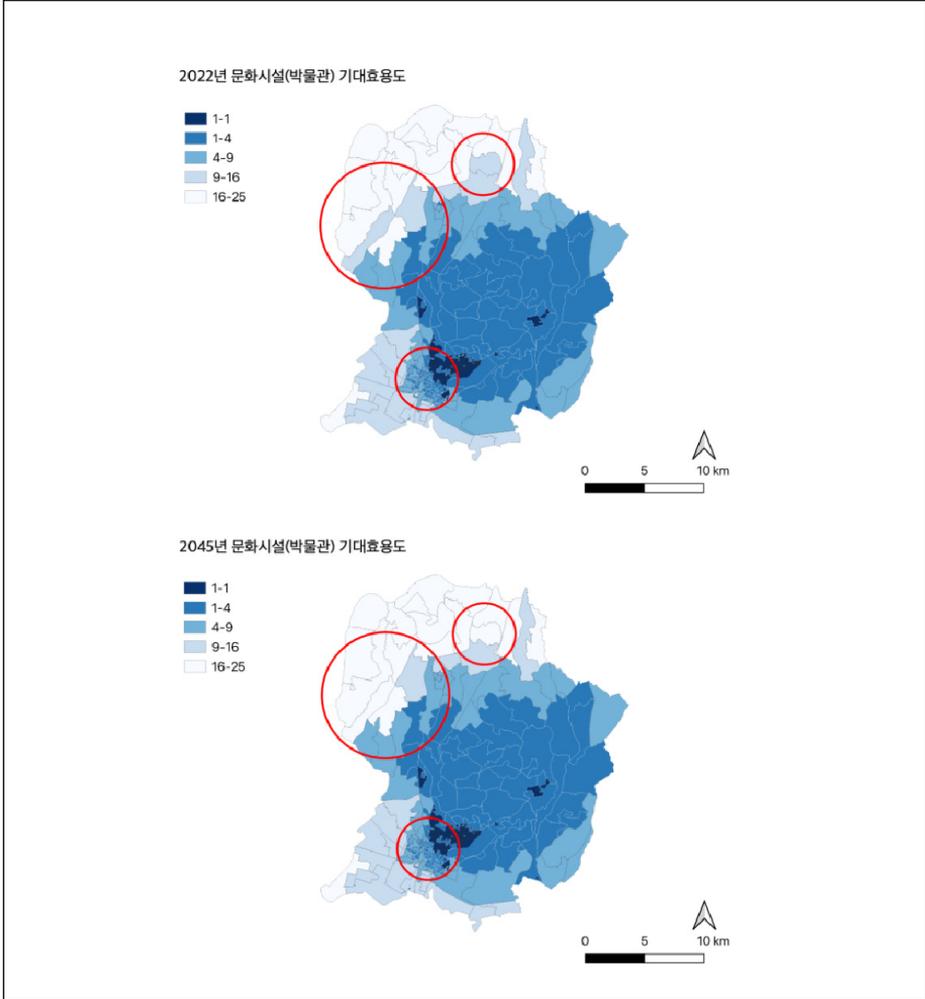
전북 익산시의 경우 단핵구조로 남측에 위치한 도심의 높은 인구밀도를 중심으로 기대효용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역 지자체인 부산과 비교하여 지역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인구밀도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기대효용도가 낮은 집계가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필연적인 격차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의 경우 시설 접근성과 인구밀도 모두 도심을 기준으로 높아지는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도심의 기대효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대효용도가 16-25 수준으로 낮은 지역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2045년 더 심화되어 있다. 박물관의 경우 도심을 포함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 익산시 전반에 넓게 분포해있어 인구밀도가 낮은 외곽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기대효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45년에는 인구밀도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술관의 경우 개체수가 2개소로 매우 적고 모두 도심 내 단일 지역에 근접해 있어, 해당 인근 집계를 제외하고는 9-16, 16-25 이하로 지표 수치가 낮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밀도가 낮아지는 2045년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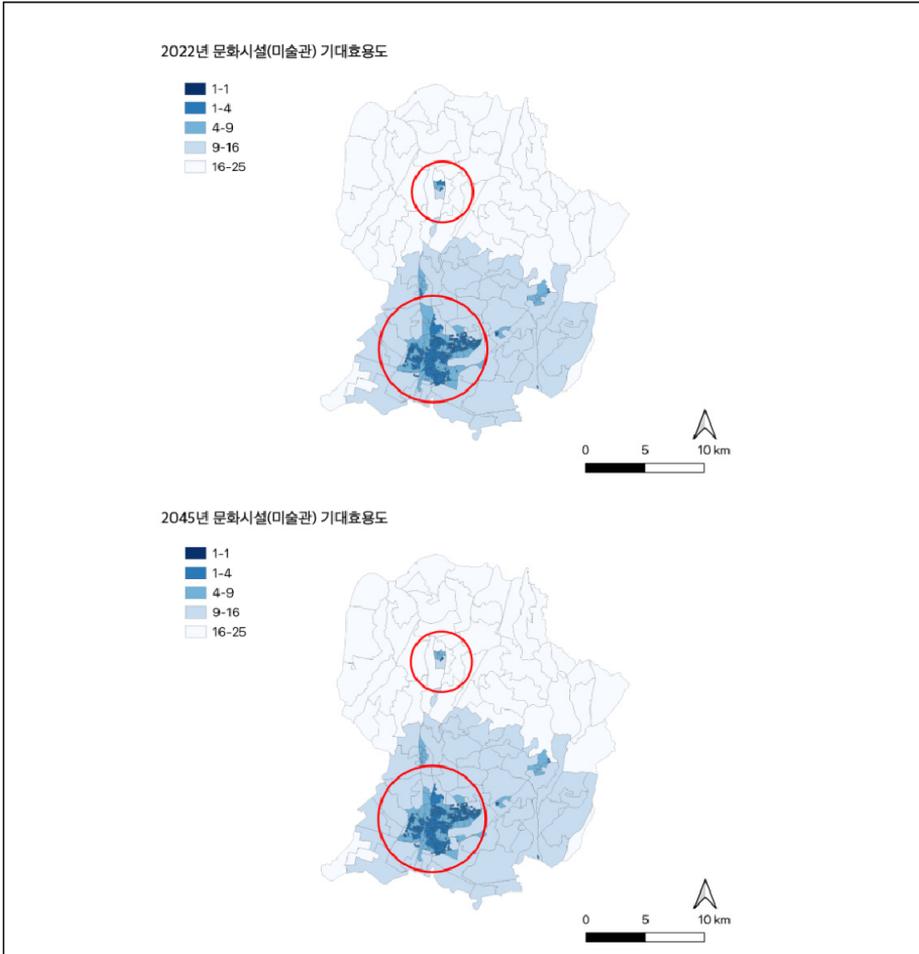
[그림 3-29] 2022년, 2045년 전북 익산시 문화시설(도서관) 기대효용도  
 (붉은색 ○: 기대효용도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지역 표기)



[그림 3-30] 2022년, 2045년 전북 익산시 문화시설(박물관) 기대효용도  
 (붉은색 ○: 기대효용도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지역 표기)



[그림 3-31] 2022년, 2045년 전북 익산시 문화시설(미술관) 기대효용도  
 (붉은색 ○: 기대효용도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지역 표기)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제4장

## 인구위기 지역의 문화시설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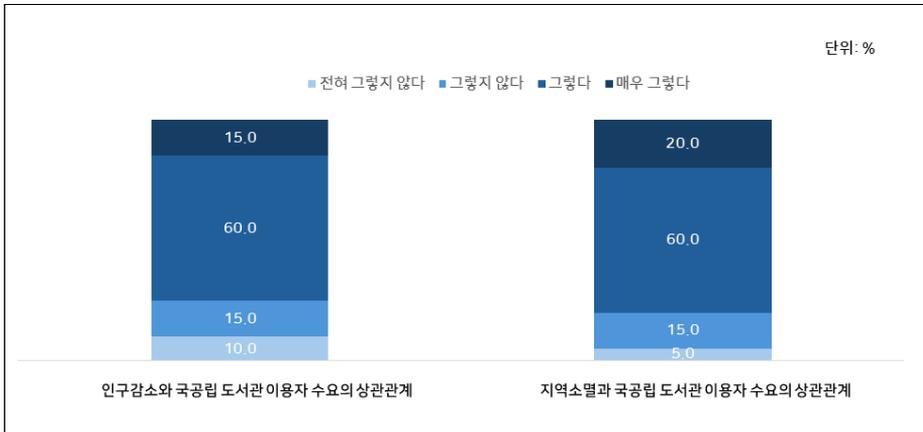


# 제1절 타 시설 연계 방안의 타당성

## 1. 인구위기와 문화시설 이용자 수요의 상관관계 분석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1, 2차를 통해 인구위기의 대표적 키워드인 인구감소, 지역 소멸과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이용자 수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여부를 확인하였다. 1차 조사 결과 각 평균점수는 2.7~3.1점의 분포도로서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해당 응답에 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차 조사 결과 각 평균점수는 3.1~3.2점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4-1] 인구위기와 국공립 도서관 이용자 수요의 상관관계 1차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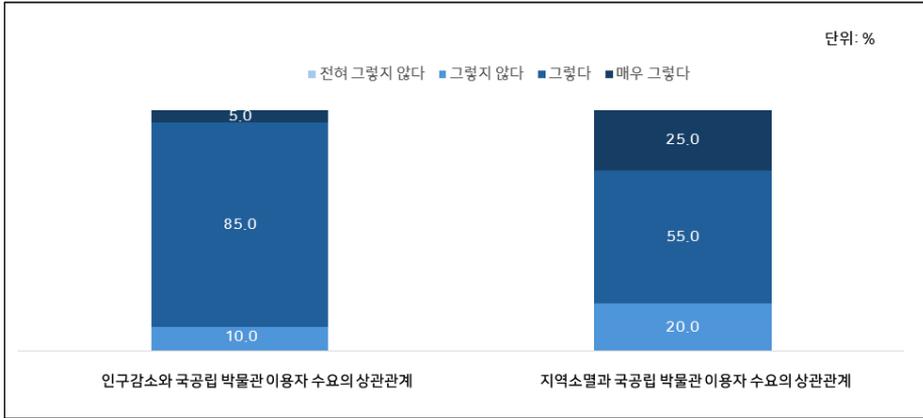


〈표 4-1〉 인구위기와 국·공립 도서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종합 결과		평균 (4점)	
						낮음	높음		
전체	(20)	-	-	80.0	20.0	-	100.0	3.2	
성별	남성	(10)	-	-	70.0	30.0	-	100.0	3.3
	여성	(10)	-	-	90.0	10.0	-	100.0	3.1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	75.0	25.0	-	100.0	3.3
	교수/연구자	(8)	-	-	75.0	25.0	-	100.0	3.3
	공공기관 종사자	(7)	-	-	85.7	14.3	-	100.0	3.1
	기타	(1)	-	-	100.0	0.0	-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	100.0	0.0	-	100.0	3.0
	2년~5년 미만	(1)	-	-	100.0	0.0	-	100.0	3.0
	5년~10년 미만	(2)	-	-	50.0	50.0	-	100.0	3.5
	10년 이상	(15)	-	-	80.0	20.0	-	100.0	3.2
연령	30대	(6)	-	-	100.0	0.0	-	100.0	3.0
	40대	(8)	-	-	75.0	25.0	-	100.0	3.3
	50대	(5)	-	-	60.0	40.0	-	100.0	3.4
	60대 이상	(1)	-	-	100.0	0.0	-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	100.0	0.0	-	100.0	3.0
	충청	(6)	-	-	66.7	33.3	-	100.0	3.3
	전라	(2)	-	-	100.0	0.0	-	100.0	3.0
	경상	(3)	-	-	66.7	33.3	-	100.0	3.3
	제주	(1)	-	-	0.0	100.0	-	100.0	4.0

[그림 4-2] 인구위기와 국·공립 박물관 이용자 수요의 상관관계 1차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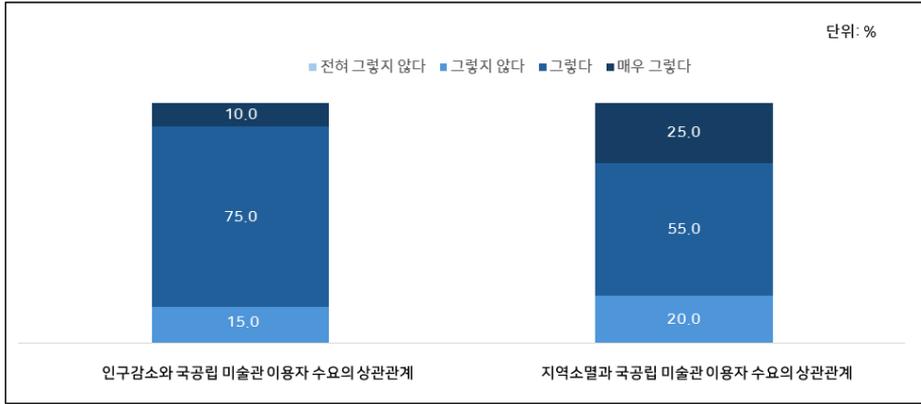


<표 4-2> 인구위기와 국·공립 박물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종합 결과		평균 (4점)	
						낮음	높음		
전체	(20)	-	5.0	70.0	25.0	5.0	95.0	3.2	
성별	남성	(10)	-	0.0	70.0	30.0	0.0	100.0	3.3
	여성	(10)	-	10.0	70.0	20.0	10.0	90.0	3.1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25.0	50.0	25.0	25.0	75.0	3.0
	교수/연구자	(8)	-	0.0	75.0	25.0	0.0	100.0	3.3
	공공기관 종사자	(7)	-	0.0	71.4	28.6	0.0	100.0	3.3
	기타	(1)	-	0.0	100.0	0.0	0.0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2년~5년 미만	(1)	-	0.0	100.0	0.0	0.0	100.0	3.0
	5년~10년 미만	(2)	-	0.0	100.0	0.0	0.0	100.0	3.0
	10년 이상	(15)	-	6.7	66.7	26.7	6.7	93.3	3.2
연령	30대	(6)	-	0.0	66.7	33.3	0.0	100.0	3.3
	40대	(8)	-	12.5	75.0	12.5	12.5	87.5	3.0
	50대	(5)	-	0.0	60.0	40.0	0.0	100.0	3.4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12.5	75.0	12.5	12.5	87.5	3.0
	충청	(6)	-	0.0	66.7	33.3	0.0	100.0	3.3
	전라	(2)	-	0.0	100.0	0.0	0.0	100.0	3.0
	경상	(3)	-	0.0	33.3	66.7	0.0	100.0	3.7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그림 4-3] 인구위기와 국·공립 미술관 이용자 수요의 상관관계 1차 조사 결과



<표 4-3> 인구위기와 국·공립 미술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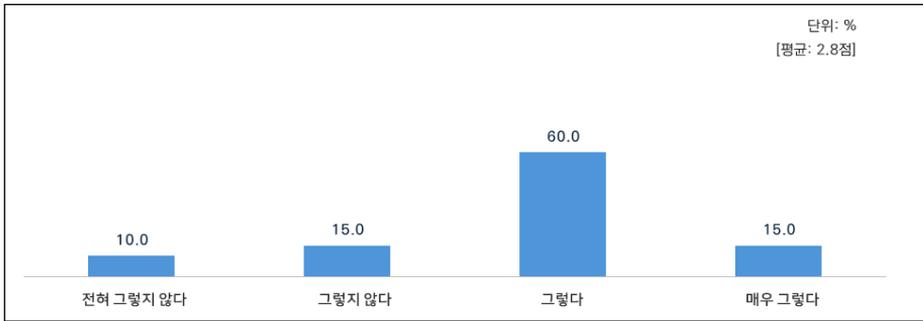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종합 결과		평균 (4점)	
						낮음	높음		
전체	(20)	-	5.0	80.0	15.0	5.0	95.0	3.1	
성별	남성	(10)	-	0.0	80.0	20.0	0.0	100.0	3.2
	여성	(10)	-	10.0	80.0	10.0	10.0	90.0	3.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25.0	75.0	0.0	25.0	75.0	2.8
	교수/연구자	(8)	-	0.0	75.0	25.0	0.0	100.0	3.3
	공공기관 종사자	(7)	-	0.0	85.7	14.3	0.0	100.0	3.1
	기타	(1)	-	0.0	100.0	0.0	0.0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2년~5년 미만	(1)	-	0.0	100.0	0.0	0.0	100.0	3.0
	5년~10년 미만	(2)	-	0.0	100.0	0.0	0.0	100.0	3.0
	10년 이상	(15)	-	6.7	80.0	13.3	6.7	93.3	3.1
연령	30대	(6)	-	0.0	83.3	16.7	0.0	100.0	3.2
	40대	(8)	-	12.5	75.0	12.5	12.5	87.5	3.0
	50대	(5)	-	0.0	80.0	20.0	0.0	100.0	3.2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12.5	87.5	0.0	12.5	87.5	2.9
	충청	(6)	-	0.0	83.3	16.7	0.0	100.0	3.2
	전라	(2)	-	0.0	100.0	0.0	0.0	100.0	3.0
	경상	(3)	-	0.0	33.3	66.7	0.0	100.0	3.7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 가. 인구감소와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이용자 수요

인구감소와 국·공립 도서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에 있어 1차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평균점수로 환산 시 2.8점이 다. 국·공립 박물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의 경우 응답자의 90% 및 평균점수 3.0점, 국·공립 미술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의 경우 응답자의 85% 및 평균점수 3.0점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그림 4-4] 인구감소와 국·공립 도서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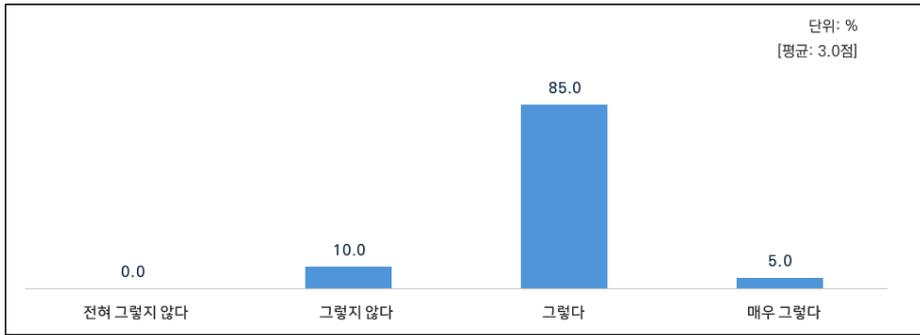


<표 4-4> 인구감소와 국·공립 도서관의 이용자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0)	10.0	15.0	60.0	15.0	25.0	75.0	2.8	
성별	남성	(10)	10.0	10.0	70.0	10.0	20.0	80.0	2.8
	여성	(10)	10.0	20.0	50.0	20.0	30.0	70.0	2.8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0.0	0.0	100.0	0.0	0.0	100.0	3.0
	교수/연구자	(8)	12.5	25.0	50.0	12.5	37.5	62.5	2.6
	공공기관 종사자	(7)	14.3	14.3	57.1	14.3	28.6	71.4	2.7
	기타	(1)	0.0	0.0	0.0	100.0	0.0	100.0	4.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50.0	0.0	50.0	0.0	50.0	50.0	2.0
	2년~5년 미만	(1)	0.0	0.0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0.0	0.0	100.0	0.0	0.0	100.0	3.0
	10년 이상	(15)	6.7	20.0	60.0	13.3	26.7	73.3	2.8
연령	30대	(6)	16.7	16.7	50.0	16.7	33.3	66.7	2.7
	40대	(8)	0.0	12.5	62.5	25.0	12.5	87.5	3.1
	50대	(5)	20.0	20.0	60.0	0.0	40.0	60.0	2.4
	60대 이상	(1)	0.0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0.0	12.5	75.0	12.5	12.5	87.5	3.0
	충청	(6)	16.7	33.3	33.3	16.7	50.0	50.0	2.5
	전라	(2)	0.0	0.0	50.0	50.0	0.0	100.0	3.5
	경상	(3)	33.3	0.0	66.7	0.0	33.3	66.7	2.3
	제주	(1)	0.0	0.0	100.0	0.0	0.0	100.0	3.0

[그림 4-5] 인구감소와 국·공립 박물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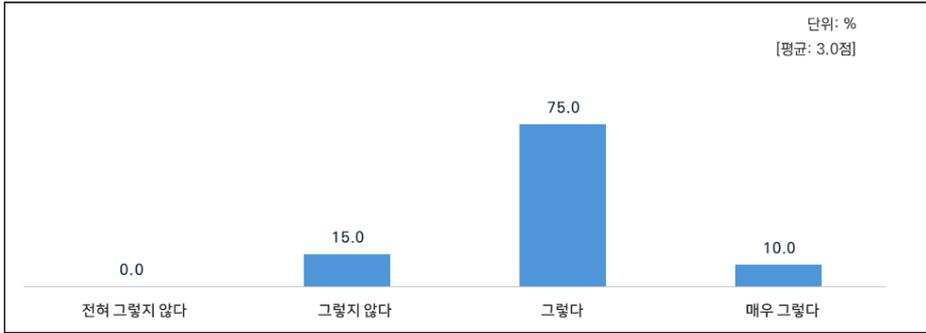


<표 4-5> 인구감소와 국·공립 박물관의 이용자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0)	-	10.0	85.0	5.0	10.0	90.0	3.0	
성별	남성	(10)	-	10.0	90.0	0.0	10.0	90.0	2.9
	여성	(10)	-	10.0	80.0	10.0	10.0	90.0	3.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0.0	100.0	0.0	0.0	100.0	3.0
	교수/연구자	(8)	-	12.5	87.5	0.0	12.5	87.5	2.9
	공공기관 종사자	(7)	-	14.3	71.4	14.3	14.3	85.7	3.0
	기타	(1)	-	0.0	100.0	0.0	0.0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0.0	100.0	0.0	0.0	100.0	3.0
	2년~5년 미만	(1)	-	0.0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	0.0	100.0	0.0	0.0	100.0	3.0
	10년 이상	(15)	-	13.3	86.7	0.0	13.3	86.7	2.9
연령	30대	(6)	-	16.7	83.3	0.0	16.7	83.3	2.8
	40대	(8)	-	0.0	87.5	12.5	0.0	100.0	3.1
	50대	(5)	-	20.0	80.0	0.0	20.0	80.0	2.8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0.0	100.0	0.0	0.0	100.0	3.0
	충청	(6)	-	33.3	50.0	16.7	33.3	66.7	2.8
	전라	(2)	-	0.0	100.0	0.0	0.0	100.0	3.0
	경상	(3)	-	0.0	100.0	0.0	0.0	100.0	3.0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그림 4-6] 인구감소와 국·공립 미술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



<표 4-6> 인구감소와 국·공립 미술관의 이용자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0)	-	15.0	75.0	10.0	15.0	85.0	3.0	
성별	남성	(10)	-	10.0	90.0	0.0	10.0	90.0	2.9
	여성	(10)	-	20.0	60.0	20.0	20.0	80.0	3.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0.0	100.0	0.0	0.0	100.0	3.0
	교수/연구자	(8)	-	12.5	87.5	0.0	12.5	87.5	2.9
	공공기관 종사자	(7)	-	28.6	57.1	14.3	28.6	71.4	2.9
	기타	(1)	-	0.0	0.0	100.0	0.0	100.0	4.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0.0	100.0	0.0	0.0	100.0	3.0
	2년~5년 미만	(1)	-	0.0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	0.0	100.0	0.0	0.0	100.0	3.0
	10년 이상	(15)	-	20.0	73.3	6.7	20.0	80.0	2.9
연령	30대	(6)	-	16.7	66.7	16.7	16.7	83.3	3.0
	40대	(8)	-	0.0	87.5	12.5	0.0	100.0	3.1
	50대	(5)	-	40.0	60.0	0.0	40.0	60.0	2.6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0.0	87.5	12.5	0.0	100.0	3.1
	충청	(6)	-	50.0	33.3	16.7	50.0	50.0	2.7
	전라	(2)	-	0.0	100.0	0.0	0.0	100.0	3.0
	경상	(3)	-	0.0	100.0	0.0	0.0	100.0	3.0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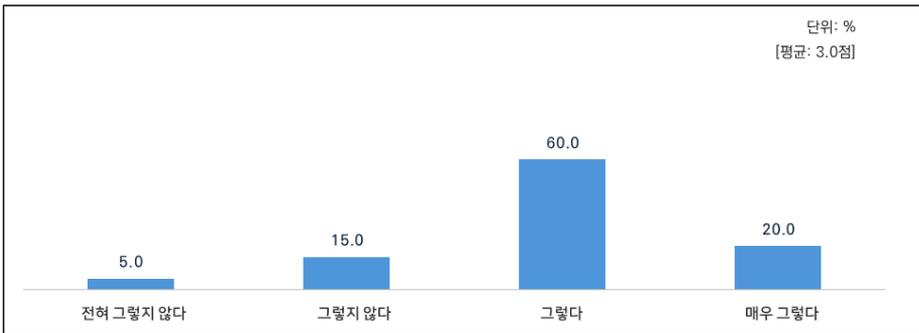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관련 정책 개발 시 어떤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추가의견을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의 인구 및 연령별 분포 조사에 따라 거주하는 세대에 맞춘 시설의 규모와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별 문화시설의 특정 용도보다는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복합용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정책 개발 시 어떤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추가의견을 확인한 결과,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인구 및 생활인구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점과 지역공동체 중심 또는 지역거점 시설로서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문화활동, 사회적 교류와 관련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지역소멸과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이용자 수요**

지역소멸과 국·공립 도서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에 있어 1차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평균점수로 환산 시 3.0점이다. 국·공립 박물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의 경우 응답자의 80% 및 평균점수 3.1점, 국·공립 미술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의 경우 응답자의 80% 및 평균점수 3.1점으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그림 4-7] 지역소멸과 국·공립 도서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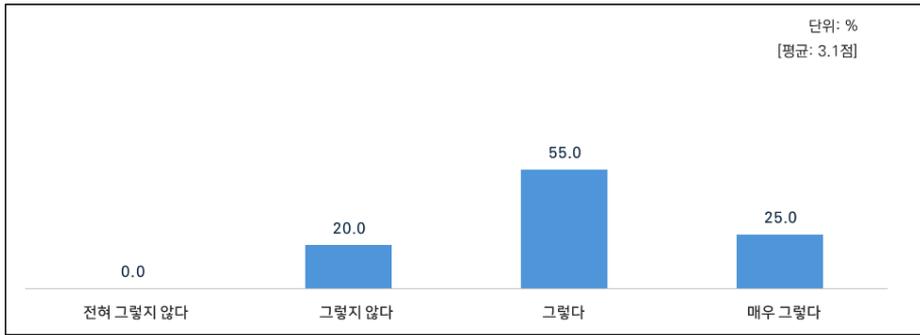


〈표 4-7〉 지역소멸과 국·공립 도서관의 이용자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0)	5.0	15.0	60.0	20.0	20.0	80.0	3.0	
성별	남성	(10)	10.0	0.0	70.0	20.0	10.0	90.0	3.0
	여성	(10)	0.0	30.0	50.0	20.0	30.0	70.0	2.9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0.0	0.0	100.0	0.0	0.0	100.0	3.0
	교수/연구자	(8)	12.5	12.5	50.0	25.0	25.0	75.0	2.9
	공공기관 종사자	(7)	0.0	28.6	57.1	14.3	28.6	71.4	2.9
	기타	(1)	0.0	0.0	0.0	100.0	0.0	100.0	4.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0.0	50.0	50.0	0.0	50.0	50.0	2.5
	2년~5년 미만	(1)	0.0	0.0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0.0	0.0	100.0	0.0	0.0	100.0	3.0
	10년 이상	(15)	6.7	13.3	60.0	20.0	20.0	80.0	2.9
연령	30대	(6)	0.0	33.3	50.0	16.7	33.3	66.7	2.8
	40대	(8)	0.0	12.5	50.0	37.5	12.5	87.5	3.3
	50대	(5)	20.0	0.0	80.0	0.0	20.0	80.0	2.6
	60대 이상	(1)	0.0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0.0	12.5	75.0	12.5	12.5	87.5	3.0
	충청	(6)	16.7	16.7	50.0	16.7	33.3	66.7	2.7
	전라	(2)	0.0	0.0	50.0	50.0	0.0	100.0	3.5
	경상	(3)	0.0	33.3	33.3	33.3	33.3	66.7	3.0
	제주	(1)	0.0	0.0	100.0	0.0	0.0	100.0	3.0

[그림 4-8] 지역소멸과 국·공립 박물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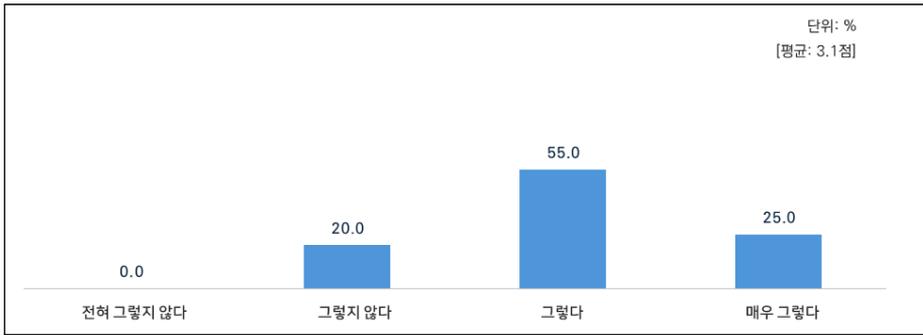


<표 4-8> 지역소멸과 국·공립 박물관의 이용자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0)	-	20.0	55.0	25.0	20.0	80.0	3.1	
성별	남성	(10)	-	20.0	60.0	20.0	20.0	80.0	3.0
	여성	(10)	-	20.0	50.0	30.0	20.0	80.0	3.1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25.0	75.0	0.0	25.0	75.0	2.8
	교수/연구자	(8)	-	25.0	37.5	37.5	25.0	75.0	3.1
	공공기관 종사자	(7)	-	14.3	71.4	14.3	14.3	85.7	3.0
	기타	(1)	-	0.0	0.0	100.0	0.0	100.0	4.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50.0	50.0	0.0	50.0	50.0	2.5
	2년~5년 미만	(1)	-	0.0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10년 이상	(15)	-	20.0	60.0	20.0	20.0	80.0	3.0
연령	30대	(6)	-	33.3	33.3	33.3	33.3	66.7	3.0
	40대	(8)	-	12.5	50.0	37.5	12.5	87.5	3.3
	50대	(5)	-	20.0	80.0	0.0	20.0	80.0	2.8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25.0	62.5	12.5	25.0	75.0	2.9
	충청	(6)	-	16.7	66.7	16.7	16.7	83.3	3.0
	전라	(2)	-	0.0	50.0	50.0	0.0	100.0	3.5
	경상	(3)	-	33.3	0.0	66.7	33.3	66.7	3.3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그림 4-9] 지역소멸과 국·공립 미술관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여부



〈표 4-9〉 지역소멸과 국·공립 미술관의 이용자 수요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0)	-	20.0	55.0	25.0	20.0	80.0	3.1	
성별	남성	(10)	-	20.0	60.0	20.0	20.0	80.0	3.0
	여성	(10)	-	20.0	50.0	30.0	20.0	80.0	3.1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25.0	75.0	0.0	25.0	75.0	2.8
	교수/연구자	(8)	-	25.0	37.5	37.5	25.0	75.0	3.1
	공공기관 종사자	(7)	-	14.3	71.4	14.3	14.3	85.7	3.0
	기타	(1)	-	0.0	0.0	100.0	0.0	100.0	4.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0.0	100.0	0.0	0.0	100.0	3.0
	2년~5년 미만	(1)	-	0.0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10년 이상	(15)	-	26.7	53.3	20.0	26.7	73.3	2.9
연령	30대	(6)	-	16.7	50.0	33.3	16.7	83.3	3.2
	40대	(8)	-	12.5	50.0	37.5	12.5	87.5	3.3
	50대	(5)	-	40.0	60.0	0.0	40.0	60.0	2.6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25.0	62.5	12.5	25.0	75.0	2.9
	충청	(6)	-	33.3	50.0	16.7	33.3	66.7	2.8
	전라	(2)	-	0.0	50.0	50.0	0.0	100.0	3.5
	경상	(3)	-	0.0	33.3	66.7	0.0	100.0	3.7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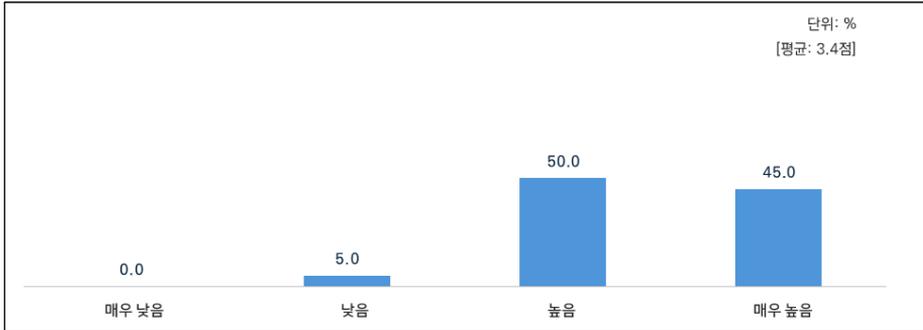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관련 정책 개발 시 어떤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추가의견을 확인한 결과,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내 문화시설 건립 최소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중심의 특화 브랜드와 연계한 정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지역문화시설이 단순히 거주민만을 위한 시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등 타지역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립되어야 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병원, 쇼핑몰, 대중교통 관련 인프라와 접목한 복합 문화센터의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언급되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정책 개발 시 어떤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추가의견을 확인한 결과, 서울 및 수도권 내 관련시설과 동일한 서비스 내용이 수반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지역의 정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경제적 부가가치 확보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연계함으로써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2. 문화시설과 타 시설 간 연계 방안의 적절성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1, 2차를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1차 조사 결과 각 평균점수는 3.5~3.7점의 분포도로써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되었고, 해당 응답에 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차 조사 결과 각 평균점수는 3.2~3.4점의 분포도로써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4-10] 국·공립 도서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관련  
1차 조사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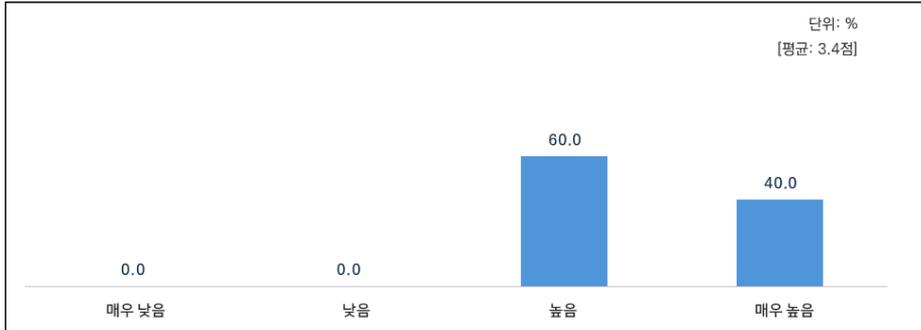


<표 4-10> 국·공립 도서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종합 결과		평균 (4점)	
						낮음	높음		
전체	(20)	-	5.0	50.0	45.0	5.0	95.0	3.4	
성별	남성	(10)	-	10.0	40.0	50.0	10.0	90.0	3.4
	여성	(10)	-	0.0	60.0	40.0	0.0	100.0	3.4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0.0	75.0	25.0	0.0	100.0	3.3
	교수/연구자	(8)	-	12.5	12.5	75.0	12.5	87.5	3.6
	공공기관 종사자	(7)	-	0.0	71.4	28.6	0.0	100.0	3.3
	기타	(1)	-	0.0	100.0	0.0	0.0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2년~5년 미만	(1)	-	0.0	100.0	0.0	0.0	100.0	3.0
	5년~10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10년 이상	(15)	-	6.7	46.7	46.7	6.7	93.3	3.4
연령	30대	(6)	-	0.0	50.0	50.0	0.0	100.0	3.5
	40대	(8)	-	0.0	62.5	37.5	0.0	100.0	3.4
	50대	(5)	-	20.0	20.0	60.0	20.0	80.0	3.4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0.0	62.5	37.5	0.0	100.0	3.4
	충청	(6)	-	16.7	50.0	33.3	16.7	83.3	3.2
	전라	(2)	-	0.0	50.0	50.0	0.0	100.0	3.5
	경상	(3)	-	0.0	0.0	100.0	0.0	100.0	4.0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그림 4-11] 국·공립 박물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관련  
1차 조사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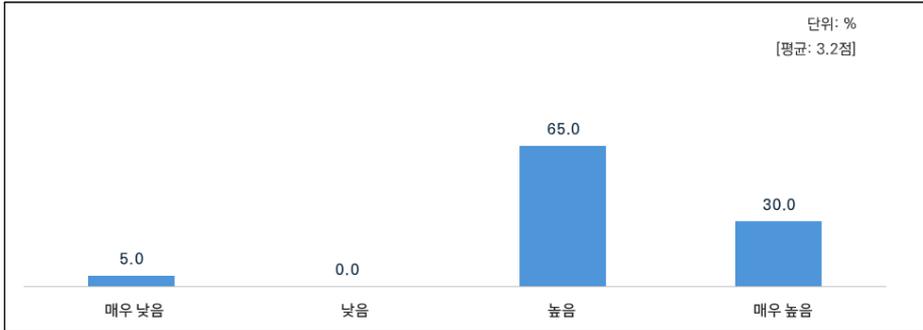


〈표 4-11〉 국·공립 박물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종합 결과		평균 (4점)	
						낮음	높음		
전체	(20)	-	-	60.0	40.0	-	100.0	3.4	
성별	남성	(10)	-	-	70.0	30.0	-	100.0	3.3
	여성	(10)	-	-	50.0	50.0	-	100.0	3.5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	75.0	25.0	-	100.0	3.3
	교수/연구자	(8)	-	-	50.0	50.0	-	100.0	3.5
	공공기관 종사자	(7)	-	-	57.1	42.9	-	100.0	3.4
	기타	(1)	-	-	100.0	0.0	-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	50.0	50.0	-	100.0	3.5
	2년~5년 미만	(1)	-	-	0.0	100.0	-	100.0	4.0
	5년~10년 미만	(2)	-	-	50.0	50.0	-	100.0	3.5
	10년 이상	(15)	-	-	66.7	33.3	-	100.0	3.3
연령	30대	(6)	-	-	50.0	50.0	-	100.0	3.5
	40대	(8)	-	-	50.0	50.0	-	100.0	3.5
	50대	(5)	-	-	80.0	20.0	-	100.0	3.2
	60대 이상	(1)	-	-	100.0	0.0	-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	75.0	25.0	-	100.0	3.3
	충청	(6)	-	-	66.7	33.3	-	100.0	3.3
	전라	(2)	-	-	50.0	50.0	-	100.0	3.5
	경상	(3)	-	-	0.0	100.0	-	100.0	4.0
	제주	(1)	-	-	100.0	0.0	-	100.0	3.0

[그림 4-12] 국·공립 미술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관련  
1차 조사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표 4-12〉 국·공립 미술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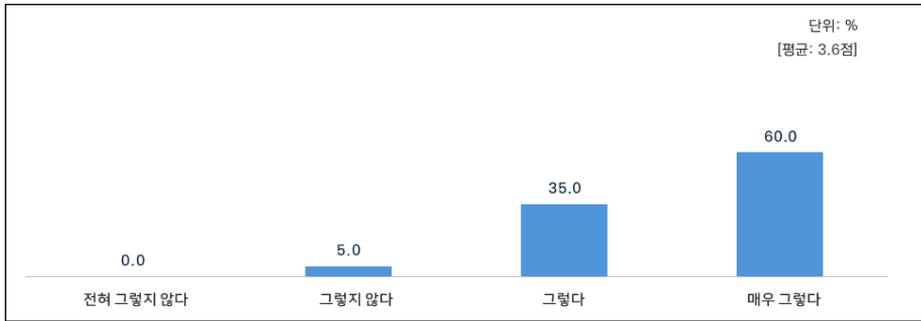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종합 결과		평균 (4점)	
						낮음	높음		
전체	(20)	5.0	-	65.0	30.0	5.0	95.0	3.2	
성별	남성	(10)	10.0	-	70.0	20.0	10.0	90.0	3.0
	여성	(10)	0.0	-	60.0	40.0	0.0	100.0	3.4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0.0	-	100.0	0.0	0.0	100.0	3.0
	교수/연구자	(8)	12.5	-	37.5	50.0	12.5	87.5	3.3
	공공기관 종사자	(7)	0.0	-	71.4	28.6	0.0	100.0	3.3
	기타	(1)	0.0	-	100.0	0.0	0.0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0.0	-	50.0	50.0	0.0	100.0	3.5
	2년~5년 미만	(1)	0.0	-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0.0	-	50.0	50.0	0.0	100.0	3.5
	10년 이상	(15)	6.7	-	73.3	20.0	6.7	93.3	3.1
연령	30대	(6)	0.0	-	66.7	33.3	0.0	100.0	3.3
	40대	(8)	0.0	-	50.0	50.0	0.0	100.0	3.5
	50대	(5)	20.0	-	80.0	0.0	20.0	80.0	2.6
	60대 이상	(1)	0.0	-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0.0	-	87.5	12.5	0.0	100.0	3.1
	충청	(6)	16.7	-	66.7	16.7	16.7	83.3	2.8
	전라	(2)	0.0	-	50.0	50.0	0.0	100.0	3.5
	경상	(3)	0.0	-	0.0	100.0	0.0	100.0	4.0
	제주	(1)	0.0	-	100.0	0.0	0.0	100.0	3.0

### 가.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 간 연계 방안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에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평균점수 3.6점으로써 해당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60%가 ‘매우 그렇다’, 35%가 ‘그렇다’로 응답한 반면, 타 시설 연계 방안에 부정적 의견인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은 5%에 머물렀다.

[그림 4-13] 국·공립 도서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표 4-13]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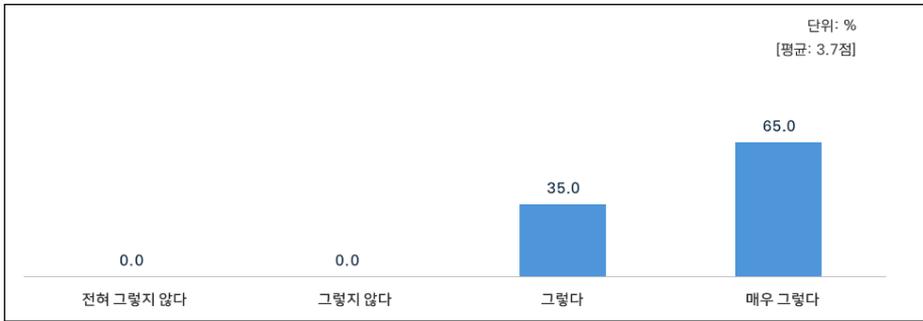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0)	-	5.0	35.0	60.0	5.0	95.0	3.6	
성별	남성	(10)	-	10.0	30.0	60.0	10.0	90.0	3.5
	여성	(10)	-	0.0	40.0	60.0	0.0	100.0	3.6
중사 형태	현장중사자	(4)	-	0.0	25.0	75.0	0.0	100.0	3.8
	교수/연구자	(8)	-	12.5	12.5	75.0	12.5	87.5	3.6
	공공기관 중사자	(7)	-	0.0	57.1	42.9	0.0	100.0	3.4
	기타	(1)	-	0.0	100.0	0.0	0.0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2년~5년 미만	(1)	-	0.0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10년 이상	(15)	-	6.7	33.3	60.0	6.7	93.3	3.5
연령	30대	(6)	-	0.0	16.7	83.3	0.0	100.0	3.8
	40대	(8)	-	0.0	37.5	62.5	0.0	100.0	3.6
	50대	(5)	-	20.0	40.0	40.0	20.0	80.0	3.2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0.0	37.5	62.5	0.0	100.0	3.6
	충청	(6)	-	16.7	33.3	50.0	16.7	83.3	3.3
	전라	(2)	-	0.0	50.0	50.0	0.0	100.0	3.5
	경상	(3)	-	0.0	0.0	100.0	0.0	100.0	4.0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 나.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 간 연계 방안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박물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에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평균점수 3.7점의 가장 높은 응답률로써 해당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65%가 '매우 그렇다', 35%가 '그렇다'로 응답한 반면, 타 시설 연계 방안에 부정적 의견은 전무하였다.

[그림 4-14] 국·공립 박물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표 4-14>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박물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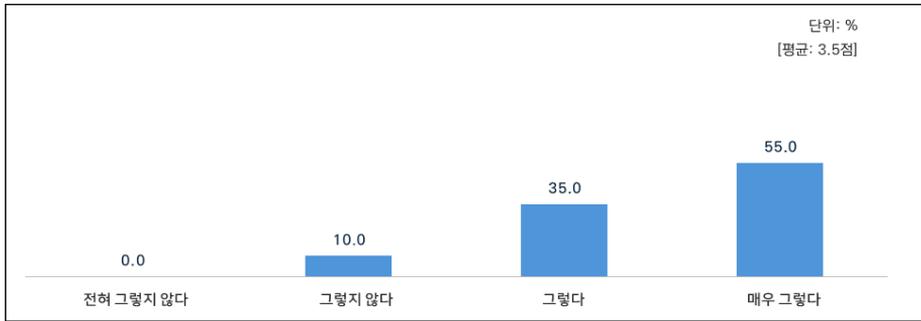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0)	-	-	35.0	65.0	-	100.0	3.7	
성별	남성	(10)	-	-	30.0	70.0	-	100.0	3.7
	여성	(10)	-	-	40.0	60.0	-	100.0	3.6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	25.0	75.0	-	100.0	3.8
	교수/연구자	(8)	-	-	12.5	87.5	-	100.0	3.9
	공공기관 종사자	(7)	-	-	57.1	42.9	-	100.0	3.4
	기타	(1)	-	-	100.0	0.0	-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	50.0	50.0	-	100.0	3.5
	2년~5년 미만	(1)	-	-	0.0	100.0	-	100.0	4.0
	5년~10년 미만	(2)	-	-	50.0	50.0	-	100.0	3.5
	10년 이상	(15)	-	-	33.3	66.7	-	100.0	3.7
연령	30대	(6)	-	-	16.7	83.3	-	100.0	3.8
	40대	(8)	-	-	37.5	62.5	-	100.0	3.6
	50대	(5)	-	-	40.0	60.0	-	100.0	3.6
	60대 이상	(1)	-	-	100.0	0.0	-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	25.0	75.0	-	100.0	3.8
	충청	(6)	-	-	50.0	50.0	-	100.0	3.5
	전라	(2)	-	-	50.0	50.0	-	100.0	3.5
	경상	(3)	-	-	0.0	100.0	-	100.0	4.0
	제주	(1)	-	-	100.0	0.0	-	100.0	3.0

#### 다.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 간 연계 방안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미술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에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평균점수 3.5점으로써 해당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5%가 '매우 그렇다', 35%가 '그렇다'로 응답한 반면, 타 시설 연계 방안에 부정적 의견인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은 10%로 도서관, 박물관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5] 국·공립 미술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표 4-15)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미술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0)	-	10.0	35.0	55.0	10.0	90.0	3.5	
성별	남성	(10)	-	0.0	30.0	70.0	0.0	100.0	3.7
	여성	(10)	-	20.0	40.0	40.0	20.0	80.0	3.2
중사 형태	현장중사자	(4)	-	0.0	25.0	75.0	0.0	100.0	3.8
	교수/연구자	(8)	-	12.5	12.5	75.0	12.5	87.5	3.6
	공공기관 중사자	(7)	-	14.3	57.1	28.6	14.3	85.7	3.1
	기타	(1)	-	0.0	100.0	0.0	0.0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2년~5년 미만	(1)	-	0.0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	50.0	50.0	0.0	50.0	50.0	2.5
	10년 이상	(15)	-	6.7	33.3	60.0	6.7	93.3	3.5
연령	30대	(6)	-	33.3	16.7	50.0	33.3	66.7	3.2
	40대	(8)	-	0.0	37.5	62.5	0.0	100.0	3.6
	50대	(5)	-	0.0	40.0	60.0	0.0	100.0	3.6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0.0	25.0	75.0	0.0	100.0	3.8
	충청	(6)	-	16.7	50.0	33.3	16.7	83.3	3.2
	전라	(2)	-	0.0	50.0	50.0	0.0	100.0	3.5
	경상	(3)	-	33.3	0.0	66.7	33.3	66.7	3.3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 제2절 시설 간 연계의 구체적 실행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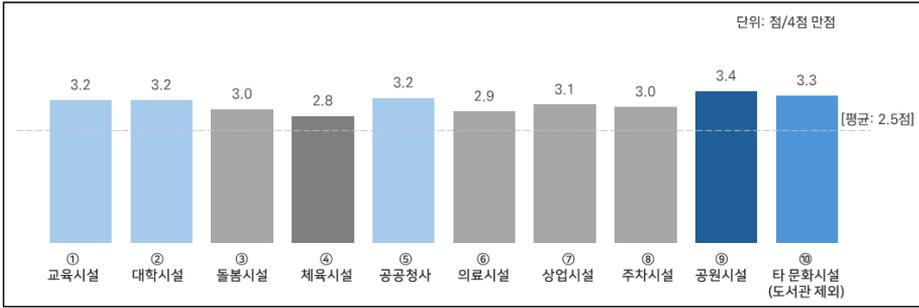
### 1. 문화시설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전략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1차를 통해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 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동시에 각 문화시설이 시설 복합화를 추진 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1~3순위까지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본 델파이조사에서 질문한 타 시설의 경우 ①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②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 ③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 ④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⑤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 ⑥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 ⑦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⑧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 ⑨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 ⑩타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제외)로 구분한다.

#### 가.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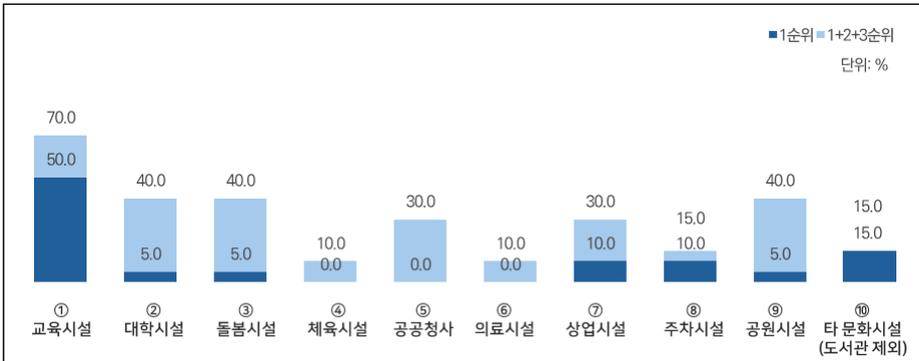
국·공립 도서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각 평균점수는 ①교육시설 3.2점, ②대학시설 3.2점, ③돌봄시설 3점, ④체육시설 2.8점, ⑤공공청사 3.2점, ⑥의료시설 2.9점, ⑦상업시설 3.1점, ⑧주차시설 3점, ⑨공원시설 3.4점, ⑩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 3.3점으로 도출되었고, 모든 항목의 시설이 중립의견의 평균점수인 2.5점 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그림 4-16]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국·공립 도서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1~3순위까지 확인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①교육시설(50%), ⑩타 문화시설(15%), ⑦상업시설, ⑧주차시설(이상 10%) 순이었고, 1~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①교육시설(70%), ②대학시설, ③돌봄시설, ⑨공원시설(이상 40%), ⑤공공청사(30%) 순이었다.

[그림 4-17] 국·공립 도서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표 4-16〉 국·공립 도서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1순위)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교육시설	대학시설	돌봄시설	상업시설	주차시설	공원시설	타 문화 시설(도서 관 제외)
전체		(20)	50.0	5.0	5.0	10.0	10.0	5.0	15.0
성별	남성	(10)	50.0	10.0	0.0	20.0	0.0	10.0	10.0
	여성	(10)	50.0	0.0	10.0	0.0	20.0	0.0	20.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50.0	0.0	0.0	25.0	0.0	0.0	25.0
	교수/연구자	(8)	50.0	0.0	0.0	12.5	0.0	12.5	25.0
	공공기관 종사자	(7)	57.1	14.3	14.3	0.0	14.3	0.0	0.0
	기타	(1)	0.0	0.0	0.0	0.0	100.0	0.0	0.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100.0	0.0	0.0	0.0	0.0	0.0	0.0
	2년~5년 미만	(1)	0.0	0.0	0.0	0.0	100.0	0.0	0.0
	5년~10년 미만	(2)	50.0	0.0	0.0	0.0	0.0	0.0	50.0
	10년 이상	(15)	46.7	6.7	6.7	13.3	6.7	6.7	13.3
연령	30대	(6)	50.0	0.0	0.0	16.7	16.7	0.0	16.7
	40대	(8)	25.0	12.5	12.5	12.5	12.5	0.0	25.0
	50대	(5)	80.0	0.0	0.0	0.0	0.0	20.0	0.0
	60대 이상	(1)	100.0	0.0	0.0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37.5	0.0	12.5	12.5	12.5	12.5	12.5
	충청	(6)	66.7	16.7	0.0	0.0	16.7	0.0	0.0
	전라	(2)	50.0	0.0	0.0	50.0	0.0	0.0	0.0
	경상	(3)	33.3	0.0	0.0	0.0	0.0	0.0	66.7
	제주	(1)	100.0	0.0	0.0	0.0	0.0	0.0	0.0

〈표 4-17〉 국·공립 도서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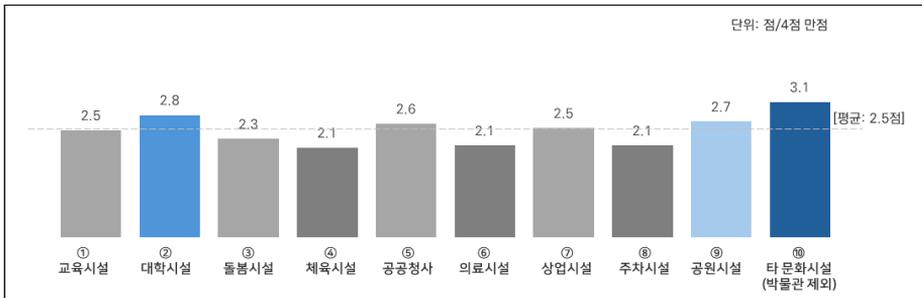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교육 시설	대학 시설	돌봄 시설	체육 시설	공공 청사	의료 시설	상업 시설	주차 시설	공원 시설	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
전체		(20)	70.0	40.0	40.0	10.0	30.0	10.0	30.0	15.0	40.0	15.0
성별	남성	(10)	60.0	60.0	30.0	10.0	40.0	10.0	40.0	0.0	40.0	10.0
	여성	(10)	80.0	20.0	50.0	10.0	20.0	10.0	20.0	30.0	40.0	20.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75.0	50.0	25.0	25.0	50.0	0.0	25.0	0.0	25.0	25.0
	교수/연구자	(8)	50.0	50.0	37.5	12.5	37.5	12.5	37.5	0.0	37.5	25.0
	공공기관 종사자	(7)	100.0	28.6	57.1	0.0	14.3	14.3	14.3	28.6	42.9	0.0
	기타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0.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100.0	50.0	100.0	0.0	0.0	50.0	0.0	0.0	0.0	0.0
	2년~5년 미만	(1)	10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5년~10년 미만	(2)	50.0	50.0	0.0	0.0	100.0	0.0	0.0	0.0	50.0	50.0
	10년 이상	(15)	66.7	40.0	40.0	13.3	26.7	6.7	33.3	13.3	46.7	13.3
연령	30대	(6)	50.0	33.3	33.3	0.0	33.3	0.0	33.3	33.3	66.7	16.7
	40대	(8)	75.0	37.5	37.5	25.0	25.0	0.0	25.0	12.5	37.5	25.0
	50대	(5)	80.0	60.0	40.0	0.0	40.0	20.0	40.0	0.0	20.0	0.0
	60대 이상	(1)	10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62.5	37.5	37.5	12.5	25.0	0.0	50.0	12.5	50.0	12.5
	충청	(6)	100.0	50.0	33.3	0.0	16.7	16.7	16.7	33.3	33.3	0.0
	전라	(2)	50.0	0.0	100.0	50.0	0.0	50.0	50.0	0.0	0.0	0.0
	경상	(3)	33.3	33.3	33.3	0.0	66.7	0.0	0.0	0.0	66.7	66.7
	제주	(1)	10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 나.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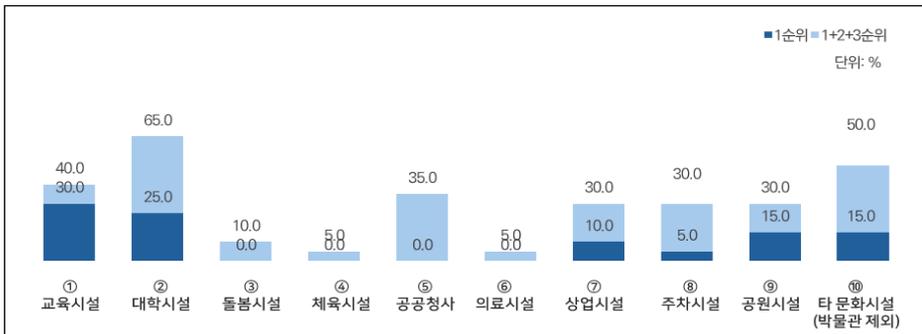
국·공립 박물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각 평균점수는 ①교육시설 2.5점, ②대학시설 2.8점, ③돌봄시설 2.3점, ④체육시설 2.1점, ⑤공공청사 2.6점, ⑥의료시설 2.1점, ⑦상업시설 2.5점, ⑧주차시설 2.1점, ⑨공원시설 2.7점, ⑩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 3.1점으로 도출되었고, 평균점수 2.5점 이상의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있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①교육시설, ②대학시설, ⑤공공청사, ⑨공원시설, ⑩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로 확인되었다.

[그림 4-18]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국·공립 박물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1~3순위까지 확인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①교육시설(30%), ②대학시설(25%), ⑨공원시설, ⑩타 문화시설(이상 15%) 순이었고, 1~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②대학시설(65%), ⑩타 문화시설(50%), ①교육시설(40%) 순이었다.

[그림 4-19] 국·공립 박물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표 4-18〉 국·공립 박물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1순위)

(n=20, 단위: %)

구분		사례수	교육시설	대학시설	상업시설	주차시설	공원시설	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
전체		(20)	30.0	25.0	10.0	5.0	15.0	15.0
성별	남성	(10)	30.0	30.0	20.0	0.0	10.0	10.0
	여성	(10)	30.0	20.0	0.0	10.0	20.0	20.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0.0	25.0	25.0	0.0	0.0	50.0
	교수/연구자	(8)	37.5	25.0	12.5	0.0	25.0	0.0
	공공기관 종사자	(7)	42.9	14.3	0.0	14.3	14.3	14.3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100.0	0.0	0.0	0.0	0.0	0.0
	2년~5년 미만	(1)	0.0	0.0	0.0	100.0	0.0	0.0
	5년~10년 미만	(2)	0.0	50.0	0.0	0.0	50.0	0.0
	10년 이상	(15)	26.7	26.7	13.3	0.0	13.3	20.0
연령	30대	(6)	16.7	16.7	16.7	0.0	33.3	16.7
	40대	(8)	12.5	37.5	12.5	12.5	0.0	25.0
	50대	(5)	60.0	20.0	0.0	0.0	20.0	0.0
	60대 이상	(1)	100.0	0.0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12.5	25.0	12.5	0.0	12.5	37.5
	충청	(6)	33.3	33.3	0.0	16.7	16.7	0.0
	전라	(2)	100.0	0.0	0.0	0.0	0.0	0.0
	경상	(3)	33.3	0.0	33.3	0.0	33.3	0.0
	제주	(1)	0.0	100.0	0.0	0.0	0.0	0.0

〈표 4-19〉 국·공립 박물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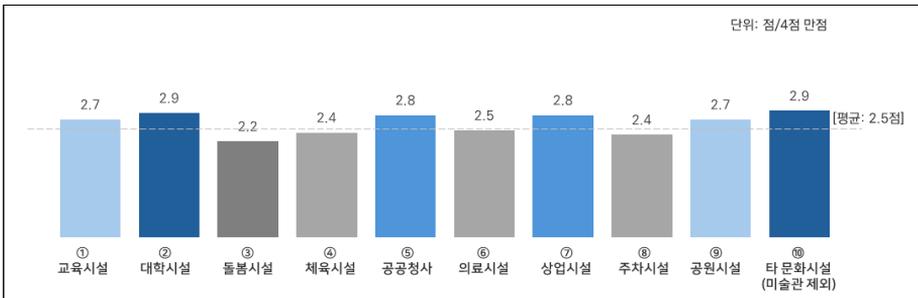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교육 시설	대학 시설	돌봄 시설	체육 시설	공공 청사	의료 시설	상업 시설	주차 시설	공원 시설	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
전체		(20)	40.0	65.0	10.0	5.0	35.0	5.0	30.0	30.0	30.0	50.0
성별	남성	(10)	40.0	70.0	0.0	0.0	50.0	10.0	50.0	10.0	20.0	50.0
	여성	(10)	40.0	60.0	20.0	10.0	20.0	0.0	10.0	50.0	40.0	50.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0.0	25.0	0.0	25.0	75.0	0.0	50.0	25.0	25.0	75.0
	교수/연구자	(8)	62.5	87.5	12.5	0.0	25.0	12.5	37.5	0.0	25.0	37.5
	공공기관 종사자	(7)	42.9	57.1	14.3	0.0	28.6	0.0	14.3	57.1	28.6	57.1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100.0	100.0	50.0	0.0	0.0	0.0	0.0	50.0	0.0	0.0
	2년~5년 미만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5년~10년 미만	(2)	0.0	100.0	0.0	0.0	50.0	0.0	0.0	0.0	50.0	100.0
	10년 이상	(15)	40.0	60.0	6.7	6.7	40.0	6.7	33.3	26.7	33.3	46.7
연령	30대	(6)	16.7	50.0	16.7	0.0	16.7	0.0	33.3	50.0	66.7	50.0
	40대	(8)	25.0	62.5	12.5	12.5	50.0	0.0	25.0	25.0	12.5	75.0
	50대	(5)	80.0	80.0	0.0	0.0	40.0	20.0	40.0	0.0	20.0	20.0
	60대 이상	(1)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0.0	0.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25.0	37.5	12.5	12.5	37.5	0.0	50.0	37.5	50.0	37.5
	충청	(6)	50.0	66.7	0.0	0.0	33.3	16.7	16.7	33.3	16.7	66.7
	전라	(2)	100.0	100.0	0.0	0.0	50.0	0.0	0.0	50.0	0.0	0.0
	경상	(3)	33.3	100.0	33.3	0.0	0.0	0.0	33.3	0.0	33.3	66.7
	제주	(1)	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 다.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국·공립 미술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각 평균점수는 ①교육시설 2.7점, ②대학시설 2.9점, ③돌봄시설 2.2점, ④체육시설 2.4점, ⑤공공청사 2.8점, ⑥의료시설 2.5점, ⑦상업시설 2.8점, ⑧주차시설 2.4점, ⑨공원시설 2.7점, ⑩타 문화시설(미술관 제외) 2.9점으로 도출되었고, 평균점수 2.5점 이상의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있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①교육시설, ②대학시설, ⑤공공청사, ⑦상업시설, ⑨공원시설, ⑩타 문화시설(미술관 제외)로 확인되었다.

[그림 4-20]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국·공립 미술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1~3순위까지 확인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⑩타 문화시설(25%), ①교육시설(20%), ②대학시설(15%) 순이었으며, 1~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⑩타 문화시설(55%), ②대학시설, ⑤공공청사(이상 50%), ⑦상업시설(40%) 순이었다.

[그림 4-21] 국·공립 미술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표 4-20〉 국·공립 미술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1순위)

(n=20, 단위: %)

구분		사례수	교육 시설	대학 시설	돌봄 시설	공공 청사	의료 시설	상업 시설	공원 시설	타 문화 시설 (미술관 제외)
전체		(20)	20.0	15.0	5.0	10.0	5.0	10.0	10.0	25.0
성별	남성	(10)	10.0	20.0	10.0	20.0	10.0	10.0	0.0	20.0
	여성	(10)	30.0	10.0	0.0	0.0	0.0	10.0	20.0	30.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0.0	25.0	0.0	25.0	25.0	0.0	0.0	25.0
	교수/연구자	(8)	12.5	12.5	12.5	12.5	0.0	12.5	0.0	37.5
	공공기관 종사자	(7)	42.9	14.3	0.0	0.0	0.0	14.3	14.3	14.3
	기타	(1)	0.0	0.0	0.0	0.0	0.0	0.0	100.0	0.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100.0	0.0	0.0	0.0	0.0	0.0	0.0	0.0
	2년~5년 미만	(1)	0.0	0.0	0.0	0.0	0.0	100.0	0.0	0.0
	5년~10년 미만	(2)	0.0	50.0	0.0	0.0	0.0	0.0	0.0	50.0
	10년 이상	(15)	13.3	13.3	6.7	13.3	6.7	6.7	13.3	26.7
연령	30대	(6)	16.7	0.0	0.0	16.7	16.7	0.0	33.3	16.7
	40대	(8)	0.0	37.5	12.5	0.0	0.0	25.0	0.0	25.0
	50대	(5)	40.0	0.0	0.0	20.0	0.0	0.0	0.0	40.0
	60대 이상	(1)	100.0	0.0	0.0	0.0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12.5	12.5	0.0	25.0	12.5	0.0	12.5	25.0
	충청	(6)	16.7	16.7	0.0	0.0	0.0	16.7	16.7	33.3
	전라	(2)	50.0	0.0	50.0	0.0	0.0	0.0	0.0	0.0
	경상	(3)	33.3	0.0	0.0	0.0	0.0	33.3	0.0	33.3
	제주	(1)	0.0	100.0	0.0	0.0	0.0	0.0	0.0	0.0

〈표 4-21〉 국·공립 미술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1+2+3순위)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교육 시설	대학 시설	돌봄 시설	체육 시설	공공 청사	의료 시설	상업 시설	주차 시설	공원 시설	타 문화시설(미술관 제외)
전체		(20)	35.0	50.0	20.0	10.0	50.0	10.0	40.0	5.0	25.0	55.0
성별	남성	(10)	30.0	60.0	10.0	10.0	60.0	20.0	40.0	10.0	10.0	50.0
	여성	(10)	40.0	40.0	30.0	10.0	40.0	0.0	40.0	0.0	40.0	60.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0.0	50.0	0.0	50.0	50.0	25.0	50.0	0.0	25.0	50.0
	교수/연구자	(8)	50.0	62.5	12.5	0.0	62.5	12.5	25.0	12.5	12.5	50.0
	공공기관 종사자	(7)	42.9	42.9	42.9	0.0	42.9	0.0	42.9	0.0	28.6	57.1
	기타	(1)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2년~5년 미만	(1)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5년~10년 미만	(2)	0.0	50.0	0.0	0.0	100.0	0.0	0.0	0.0	50.0	100.0
	10년 이상	(15)	33.3	46.7	13.3	13.3	46.7	13.3	46.7	6.7	26.7	53.3
연령	30대	(6)	16.7	16.7	16.7	16.7	33.3	16.7	66.7	0.0	66.7	50.0
	40대	(8)	12.5	62.5	12.5	12.5	62.5	12.5	37.5	0.0	12.5	75.0
	50대	(5)	80.0	60.0	20.0	0.0	60.0	0.0	20.0	20.0	0.0	40.0
	60대 이상	(1)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37.5	50.0	0.0	25.0	50.0	12.5	50.0	0.0	37.5	37.5
	충청	(6)	33.3	33.3	16.7	0.0	50.0	0.0	50.0	16.7	16.7	83.3
	전라	(2)	50.0	50.0	100.0	0.0	50.0	50.0	0.0	0.0	0.0	0.0
	경상	(3)	33.3	66.7	33.3	0.0	33.3	0.0	33.3	0.0	33.3	66.7
	제주	(1)	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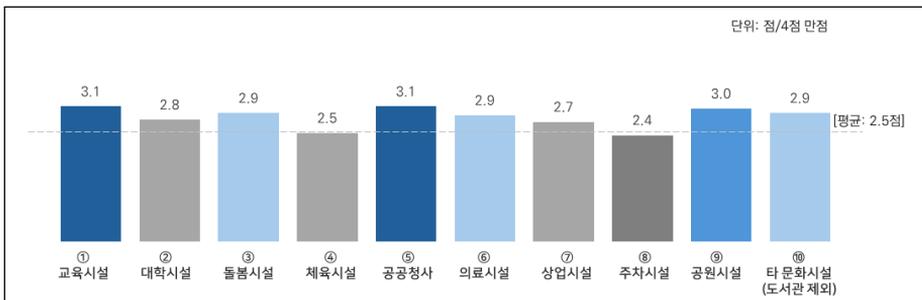
## 2. 문화시설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전략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1차를 통해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서비스가 타 시설 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동시에 각 문화시설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적용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1~3순위까지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본 델파이조사에서 질문한 타 시설은 앞서 조사한 문화시설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관련 내용과 일치한다.

### 가.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가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각 평균점수는 ①교육시설 3.1점, ②대학시설 2.8점, ③돌봄시설 2.9점, ④체육시설 2.5점, ⑤공공청사 3.1점, ⑥의료시설 2.9점, ⑦상업시설 2.7점, ⑧주차시설 2.4점, ⑨공원시설 3.0점, ⑩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 2.9점으로 도출되었고, 평균점수 2.5점 이상의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있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①교육시설, ②대학시설, ③돌봄시설, ⑤공공청사, ⑥의료시설, ⑦상업시설, ⑨공원시설, ⑩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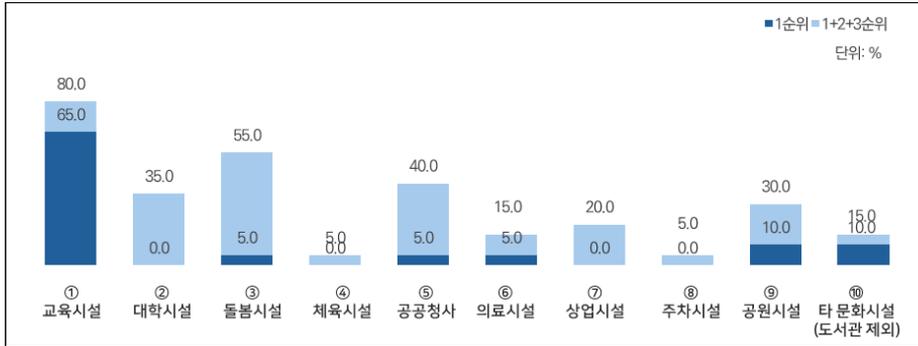
[그림 4-22]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가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1~3순위까지 확인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①교육시설(65%), ⑩타 문화시설, ⑨공원시설(이상 10%), ③돌봄시설, ⑥의료시설(이상 5%) 순이었고, 1~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①교육시설(80%), ③돌봄시설(55%), ⑤공

공청사(40%) 순이었다.

[그림 4-23]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을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표 4-22>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1순위)

(n=20, 단위: %)

구분		사례수	교육시설	돌봄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	공원시설	타 문화 시설 (도서관 제외)
전체		(20)	65.0	5.0	5.0	5.0	10.0	10.0
성별	남성	(10)	50.0	0.0	10.0	10.0	20.0	10.0
	여성	(10)	80.0	10.0	0.0	0.0	0.0	10.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50.0	0.0	25.0	0.0	0.0	25.0
	교수/연구자	(8)	50.0	0.0	0.0	12.5	25.0	12.5
	공공기관 종사자	(7)	85.7	14.3	0.0	0.0	0.0	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100.0	0.0	0.0	0.0	0.0	0.0
	2년~5년 미만	(1)	100.0	0.0	0.0	0.0	0.0	0.0
	5년~10년 미만	(2)	100.0	0.0	0.0	0.0	0.0	0.0
	10년 이상	(15)	53.3	6.7	6.7	6.7	13.3	13.3
연령	30대	(6)	83.3	0.0	16.7	0.0	0.0	0.0
	40대	(8)	50.0	12.5	0.0	0.0	12.5	25.0
	50대	(5)	60.0	0.0	0.0	20.0	20.0	0.0
	60대 이상	(1)	100.0	0.0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50.0	12.5	12.5	0.0	12.5	12.5
	충청	(6)	83.3	0.0	0.0	16.7	0.0	0.0
	전라	(2)	50.0	0.0	0.0	0.0	50.0	0.0
	경상	(3)	66.7	0.0	0.0	0.0	0.0	33.3
	제주	(1)	100.0	0.0	0.0	0.0	0.0	0.0

〈표 4-23〉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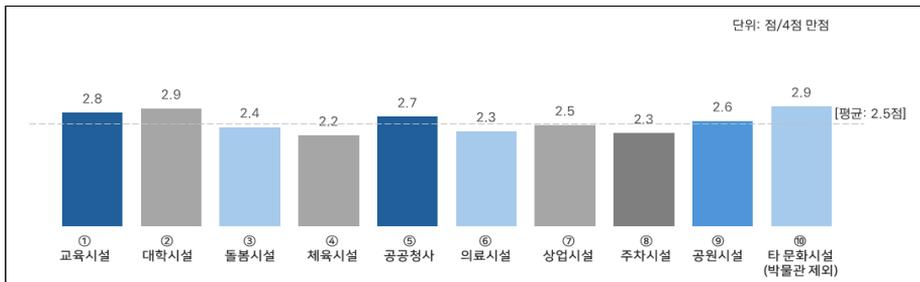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교육 시설	대학 시설	돌봄 시설	체육 시설	공공 청사	의료 시설	상업 시설	주차 시설	공원 시설	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
전체		(20)	80.0	35.0	55.0	5.0	40.0	15.0	20.0	5.0	30.0	15.0
성별	남성	(10)	60.0	50.0	30.0	10.0	40.0	30.0	40.0	0.0	30.0	10.0
	여성	(10)	100.0	20.0	80.0	0.0	40.0	0.0	0.0	10.0	30.0	20.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75.0	50.0	25.0	25.0	75.0	0.0	25.0	0.0	0.0	25.0
	교수/연구자	(8)	62.5	37.5	50.0	0.0	25.0	37.5	37.5	0.0	37.5	12.5
	공공기관 종사자	(7)	100.0	28.6	71.4	0.0	42.9	0.0	0.0	14.3	28.6	14.3
	기타	(1)	10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0.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100.0	50.0	100.0	0.0	50.0	0.0	0.0	0.0	0.0	0.0
	2년~5년 미만	(1)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5년~10년 미만	(2)	100.0	50.0	50.0	0.0	50.0	0.0	0.0	0.0	50.0	0.0
	10년 이상	(15)	73.3	33.3	53.3	6.7	33.3	20.0	26.7	0.0	33.3	20.0
연령	30대	(6)	83.3	33.3	83.3	16.7	16.7	0.0	16.7	0.0	50.0	0.0
	40대	(8)	75.0	37.5	37.5	0.0	37.5	12.5	25.0	12.5	25.0	37.5
	50대	(5)	80.0	40.0	40.0	0.0	60.0	40.0	20.0	0.0	20.0	0.0
	60대 이상	(1)	10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75.0	25.0	62.5	12.5	50.0	0.0	25.0	0.0	25.0	25.0
	충청	(6)	100.0	50.0	33.3	0.0	33.3	33.3	0.0	16.7	33.3	0.0
	전라	(2)	50.0	0.0	50.0	0.0	50.0	50.0	50.0	0.0	50.0	0.0
	경상	(3)	66.7	33.3	100.0	0.0	0.0	0.0	33.3	0.0	33.3	33.3
	제주	(1)	10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 나.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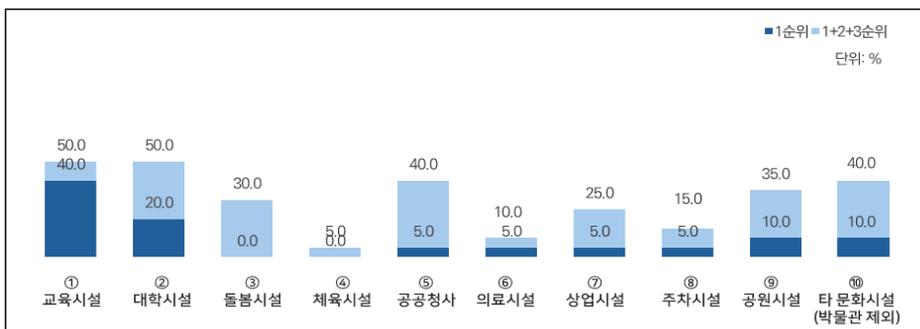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가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각 평균점수는 ①교육시설 2.8점, ②대학시설 2.9점, ③돌봄시설 2.4점, ④체육시설 2.2점, ⑤공공청사 2.7점, ⑥의료시설 2.3점, ⑦상업시설 2.5점, ⑧주차시설 2.3점, ⑨공원시설 2.6점, ⑩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 2.9점으로 도출되었고, 평균점수 2.5점 이상의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있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①교육시설, ②대학시설, ⑤공공청사, ⑨공원시설, ⑩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로 확인되었다.

[그림 4-24]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가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1~3순위까지 확인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①교육시설(40%), ②대학시설(20%), ⑨공원시설, ⑩타 문화시설(이상 10%) 순이었고, 1~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①교육시설, ②대학시설(이상 50%), ⑤공공청사, ⑩타 문화시설(이상 40%), ⑨공원시설(35%) 순이었다.

[그림 4-25]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을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표 4-24〉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1순위)

(n=20, 단위: %)

구분		사례수	교육 시설	대학 시설	공공 청사	의료 시설	상업 시설	주차 시설	공원 시설	타 문화 시설(박물관 제외)
전체		(20)	40.0	20.0	5.0	5.0	5.0	5.0	10.0	10.0
성별	남성	(10)	30.0	30.0	10.0	10.0	10.0	0.0	10.0	0.0
	여성	(10)	50.0	10.0	0.0	0.0	0.0	10.0	10.0	20.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0.0	25.0	25.0	25.0	0.0	0.0	0.0	25.0
	교수/연구자	(8)	37.5	25.0	0.0	0.0	12.5	0.0	25.0	0.0
	공공기관 종사자	(7)	57.1	14.3	0.0	0.0	0.0	14.3	0.0	14.3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100.0	0.0	0.0	0.0	0.0	0.0	0.0	0.0
	2년~5년 미만	(1)	0.0	0.0	0.0	0.0	0.0	100.0	0.0	0.0
	5년~10년 미만	(2)	0.0	50.0	0.0	0.0	0.0	0.0	50.0	0.0
	10년 이상	(15)	40.0	20.0	6.7	6.7	6.7	0.0	6.7	13.3
연령	30대	(6)	50.0	0.0	16.7	16.7	0.0	0.0	16.7	0.0
	40대	(8)	12.5	37.5	0.0	0.0	12.5	12.5	0.0	25.0
	50대	(5)	60.0	20.0	0.0	0.0	0.0	0.0	20.0	0.0
	60대 이상	(1)	100.0	0.0	0.0	0.0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25.0	12.5	12.5	12.5	0.0	0.0	12.5	25.0
	충청	(6)	50.0	33.3	0.0	0.0	0.0	16.7	0.0	0.0
	전라	(2)	100.0	0.0	0.0	0.0	0.0	0.0	0.0	0.0
	경상	(3)	33.3	0.0	0.0	0.0	33.3	0.0	33.3	0.0
	제주	(1)	0.0	100.0	0.0	0.0	0.0	0.0	0.0	0.0

〈표 4-25〉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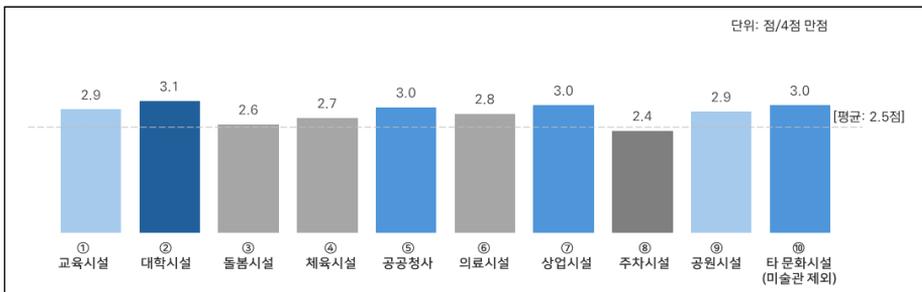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교육 시설	대학 시설	돌봄 시설	체육 시설	공공 청사	의료 시설	상업 시설	주차 시설	공원 시설	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
전체		(20)	50.0	50.0	30.0	5.0	40.0	10.0	25.0	15.0	35.0	40.0
성별	남성	(10)	30.0	60.0	0.0	0.0	70.0	20.0	40.0	10.0	30.0	40.0
	여성	(10)	70.0	40.0	60.0	10.0	10.0	0.0	10.0	20.0	40.0	40.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0.0	50.0	0.0	25.0	50.0	25.0	50.0	25.0	25.0	50.0
	교수/연구자	(8)	62.5	62.5	25.0	0.0	50.0	12.5	25.0	0.0	37.5	25.0
	공공기관 종사자	(7)	57.1	42.9	57.1	0.0	28.6	0.0	14.3	28.6	28.6	42.9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100.0	50.0	100.0	0.0	0.0	0.0	0.0	50.0	0.0	0.0
	2년~5년 미만	(1)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5년~10년 미만	(2)	50.0	50.0	50.0	0.0	50.0	0.0	0.0	0.0	50.0	50.0
	10년 이상	(15)	46.7	53.3	20.0	6.7	46.7	13.3	33.3	6.7	33.3	40.0
연령	30대	(6)	66.7	33.3	50.0	0.0	16.7	16.7	33.3	16.7	50.0	16.7
	40대	(8)	25.0	62.5	12.5	12.5	37.5	0.0	25.0	12.5	37.5	75.0
	50대	(5)	60.0	60.0	20.0	0.0	80.0	20.0	20.0	0.0	20.0	20.0
	60대 이상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37.5	37.5	12.5	12.5	37.5	12.5	50.0	12.5	50.0	37.5
	충청	(6)	50.0	66.7	33.3	0.0	50.0	16.7	0.0	16.7	16.7	50.0
	전라	(2)	100.0	0.0	50.0	0.0	50.0	0.0	0.0	50.0	50.0	0.0
	경상	(3)	66.7	66.7	66.7	0.0	0.0	0.0	33.3	0.0	33.3	33.3
	제주	(1)	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 다.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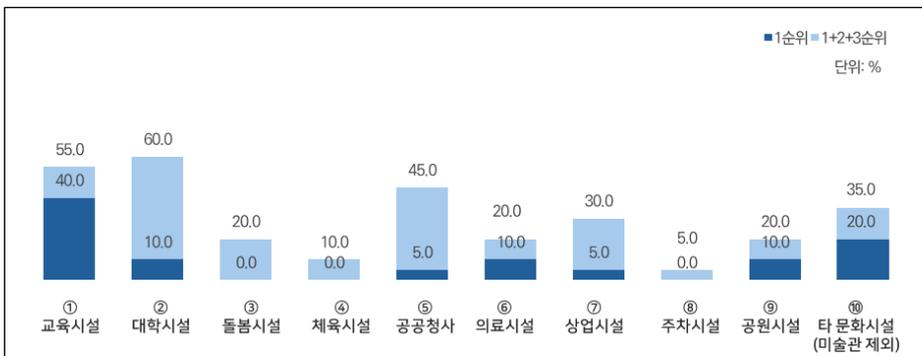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가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각 평균점수는 ①교육시설 2.9점, ②대학시설 3.1점, ③돌봄시설 2.6점, ④체육시설 2.7점, ⑤공공청사 3점, ⑥의료시설 2.8점, ⑦상업시설 3점, ⑧주차시설 2.4점, ⑨공원시설 2.9점, ⑩타 문화시설(미술관 제외) 3점으로 도출되었고, ⑧주차시설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시설이 중립의견의 평균점수인 2.5점 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그림 4-26]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가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1~3순위까지 확인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①교육시설(40%), ⑩타 문화시설(20%), ②대학시설, ⑥의료시설, ⑨공원시설(이상 10%) 순이었고, 1~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타 시설은 ②대학시설(60%), ①교육시설(55%), ⑤공공청사(45%) 순이었다.

[그림 4-27]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을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표 4-26〉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1순위)

(n=20, 단위: %)

구분		사례수	교육 시설	대학 시설	공공 청사	의료 시설	상업 시설	공원 시설	타 문화 시설(미술관 제외)
전체		(20)	40.0	10.0	5.0	10.0	5.0	10.0	20.0
성별	남성	(10)	30.0	10.0	10.0	10.0	10.0	10.0	20.0
	여성	(10)	50.0	10.0	0.0	10.0	0.0	10.0	20.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25.0	0.0	25.0	25.0	0.0	0.0	25.0
	교수/연구자	(8)	25.0	12.5	0.0	0.0	12.5	25.0	25.0
	공공기관 종사자	(7)	57.1	14.3	0.0	14.3	0.0	0.0	14.3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100.0	0.0	0.0	0.0	0.0	0.0	0.0
	2년~5년 미만	(1)	0.0	0.0	0.0	100.0	0.0	0.0	0.0
	5년~10년 미만	(2)	50.0	0.0	0.0	0.0	0.0	50.0	0.0
	10년 이상	(15)	33.3	13.3	6.7	6.7	6.7	6.7	26.7
연령	30대	(6)	50.0	0.0	16.7	16.7	0.0	16.7	0.0
	40대	(8)	25.0	25.0	0.0	12.5	12.5	0.0	25.0
	50대	(5)	40.0	0.0	0.0	0.0	0.0	20.0	40.0
	60대 이상	(1)	100.0	0.0	0.0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25.0	12.5	12.5	12.5	0.0	12.5	25.0
	충청	(6)	33.3	16.7	0.0	16.7	0.0	0.0	33.3
	전라	(2)	100.0	0.0	0.0	0.0	0.0	0.0	0.0
	경상	(3)	33.3	0.0	0.0	0.0	33.3	33.3	0.0
	제주	(1)	100.0	0.0	0.0	0.0	0.0	0.0	0.0

〈표 4-27〉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1+2+3순위)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교육 시설	대학 시설	돌봄 시설	체육 시설	공공 청사	의료 시설	상업 시설	주차 시설	공원 시설	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
전체		(20)	55.0	60.0	20.0	10.0	45.0	20.0	30.0	5.0	20.0	35.0
성별	남성	(10)	40.0	60.0	0.0	10.0	50.0	30.0	40.0	10.0	20.0	40.0
	여성	(10)	70.0	60.0	40.0	10.0	40.0	10.0	20.0	0.0	20.0	30.0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25.0	75.0	0.0	50.0	50.0	25.0	25.0	0.0	25.0	25.0
	교수/연구자	(8)	62.5	50.0	0.0	0.0	37.5	25.0	37.5	12.5	25.0	50.0
	공공기관 종사자	(7)	57.1	57.1	42.9	0.0	57.1	14.3	28.6	0.0	14.3	28.6
	기타	(1)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100.0	50.0	100.0	0.0	50.0	0.0	0.0	0.0	0.0	0.0
	2년~5년 미만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0.0	0.0	0.0
	5년~10년 미만	(2)	100.0	50.0	0.0	0.0	50.0	0.0	0.0	0.0	50.0	50.0
	10년 이상	(15)	46.7	66.7	13.3	13.3	40.0	20.0	33.3	6.7	20.0	40.0
연령	30대	(6)	66.7	66.7	50.0	16.7	16.7	16.7	16.7	0.0	33.3	16.7
	40대	(8)	37.5	62.5	0.0	12.5	62.5	25.0	37.5	0.0	12.5	50.0
	50대	(5)	60.0	60.0	0.0	0.0	40.0	20.0	40.0	20.0	20.0	40.0
	60대 이상	(1)	10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37.5	62.5	12.5	25.0	37.5	25.0	37.5	0.0	37.5	25.0
	충청	(6)	50.0	66.7	16.7	0.0	50.0	16.7	33.3	16.7	0.0	50.0
	전라	(2)	100.0	0.0	50.0	0.0	100.0	50.0	0.0	0.0	0.0	0.0
	경상	(3)	66.7	66.7	33.3	0.0	0.0	0.0	33.3	0.0	33.3	66.7
	제주	(1)	10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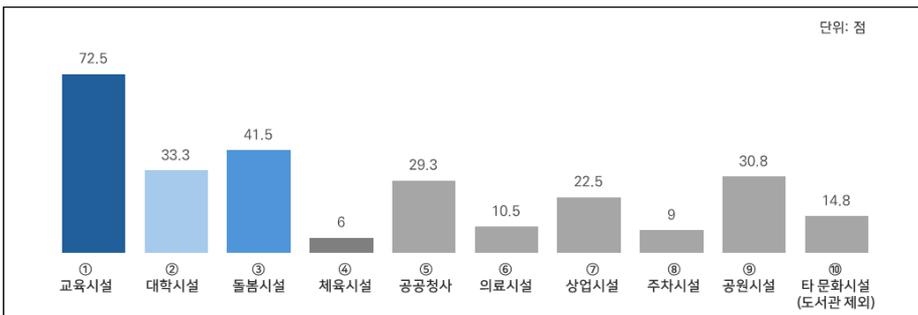
### 3. 문화시설과 타 시설 간 연계 방안의 우선순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1차를 통해 확인한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 하는 것과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서비스가 타 시설 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에 적합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각 응답자가 선택한 타 시설의 1~3순위에 가중치를 각각 2.5점(1순위), 2.25점(2순위), 2점(3순위)로 적용함으로써 시설 복합화 50점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 50점으로 산정하였고, 총 합계 점수 100점으로 최종 평가함으로써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1~10순위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를 델파이조사 2차를 통해 전체 응답자들로부터 동의 정도를 재차 확인하였다.

#### 가.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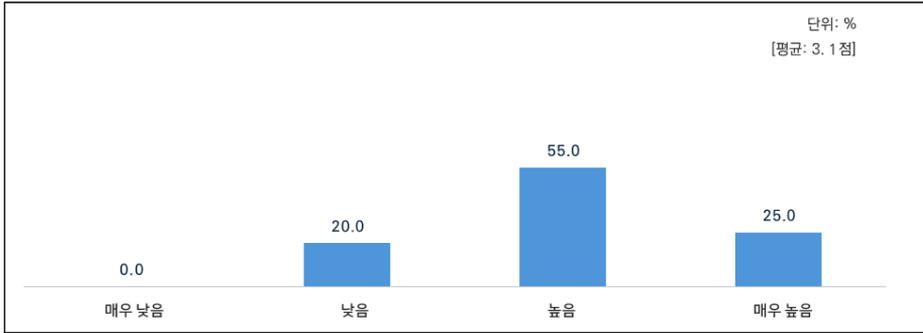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1차를 통해 확인한 국·공립 도서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는 ①교육시설 72.5점, ③돌봄시설 41.5점, ②대학시설 33.3점, ⑨공원시설 30.8점, ⑤공공청사 29.3점, ⑦상업시설 22.6점, ⑩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 14.8 점, ⑥의료시설 10.5점, ⑧주차시설 9점, ④체육시설 6점 순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4-28]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의 우선순위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1차를 통해 확인한 국·공립 도서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차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가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었고, 이에 대한 평균점수는 3.1점이다.

[그림 4-29]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



<표 4-28>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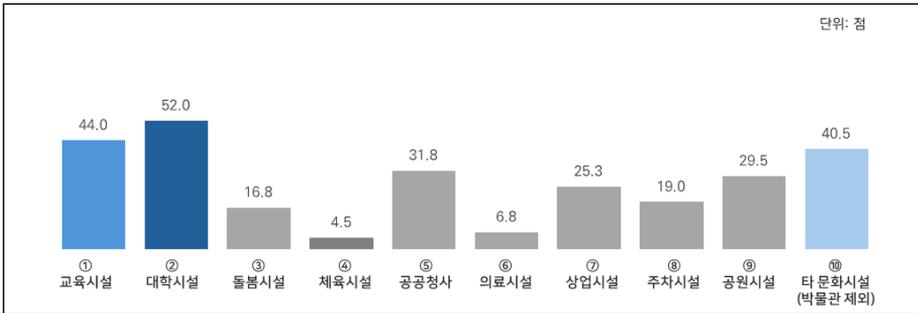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종합 결과		평균 (4점)	
						낮음	높음		
전체	(20)	-	20.0	55.0	25.0	20.0	80.0	3.1	
성별	남성	(10)	-	20.0	60.0	20.0	20.0	80.0	3.0
	여성	(10)	-	20.0	50.0	30.0	20.0	80.0	3.1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50.0	50.0	0.0	50.0	50.0	2.5
	교수/연구자	(8)	-	12.5	50.0	37.5	12.5	87.5	3.3
	공공기관 종사자	(7)	-	0.0	71.4	28.6	0.0	100.0	3.3
	기타	(1)	-	100.0	0.0	0.0	100.0	0.0	2.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2년~5년 미만	(1)	-	0.0	100.0	0.0	0.0	100.0	3.0
	5년~10년 미만	(2)	-	0.0	100.0	0.0	0.0	100.0	3.0
	10년 이상	(15)	-	26.7	46.7	26.7	26.7	73.3	3.0
연령	30대	(6)	-	33.3	50.0	16.7	33.3	66.7	2.8
	40대	(8)	-	25.0	50.0	25.0	25.0	75.0	3.0
	50대	(5)	-	0.0	60.0	40.0	0.0	100.0	3.4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37.5	50.0	12.5	37.5	62.5	2.8
	충청	(6)	-	0.0	66.7	33.3	0.0	100.0	3.3
	전라	(2)	-	50.0	50.0	0.0	50.0	50.0	2.5
	경상	(3)	-	0.0	33.3	66.7	0.0	100.0	3.7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 나.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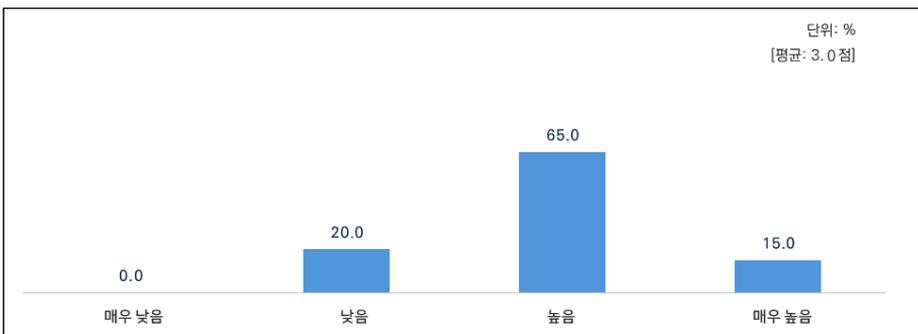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1차를 통해 확인한 국·공립 박물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는 ②대학시설 52점, ①교육시설 44점, ⑩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 40.5점, ⑤공공청사 31.8점, ⑨공원시설 29.5점, ⑦상업시설 25.3점, ⑧주차시설 19점, ③돌봄시설 16.8점, ⑦상업시설 6.8점, ④체육시설 4.5점 순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4-30]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의 우선순위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1차를 통해 확인한 국·공립 박물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차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가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었고, 이에 대한 평균점수는 2.9점이다.

[그림 4-31]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



〈표 4-29〉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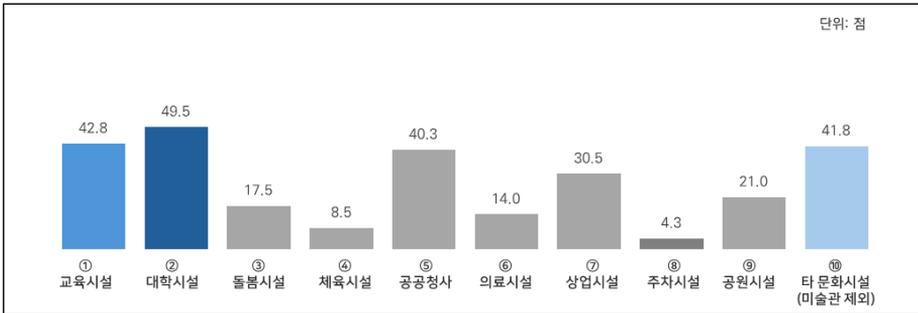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종합 결과		평균 (4점)	
						낮음	높음		
전체	(20)	-	20.0	65.0	15.0	20.0	80.0	3.0	
성별	남성	(10)	-	30.0	70.0	0.0	30.0	70.0	2.7
	여성	(10)	-	10.0	60.0	30.0	10.0	90.0	3.2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50.0	50.0	0.0	50.0	50.0	2.5
	교수/연구자	(8)	-	12.5	75.0	12.5	12.5	87.5	3.0
	공공기관 종사자	(7)	-	0.0	71.4	28.6	0.0	100.0	3.3
	기타	(1)	-	100.0	0.0	0.0	100.0	0.0	2.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2년~5년 미만	(1)	-	0.0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	0.0	100.0	0.0	0.0	100.0	3.0
	10년 이상	(15)	-	26.7	66.7	6.7	26.7	73.3	2.8
연령	30대	(6)	-	50.0	33.3	16.7	50.0	50.0	2.7
	40대	(8)	-	0.0	75.0	25.0	0.0	100.0	3.3
	50대	(5)	-	20.0	80.0	0.0	20.0	80.0	2.8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37.5	50.0	12.5	37.5	62.5	2.8
	충청	(6)	-	16.7	66.7	16.7	16.7	83.3	3.0
	전라	(2)	-	0.0	100.0	0.0	0.0	100.0	3.0
	경상	(3)	-	0.0	66.7	33.3	0.0	100.0	3.3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 다.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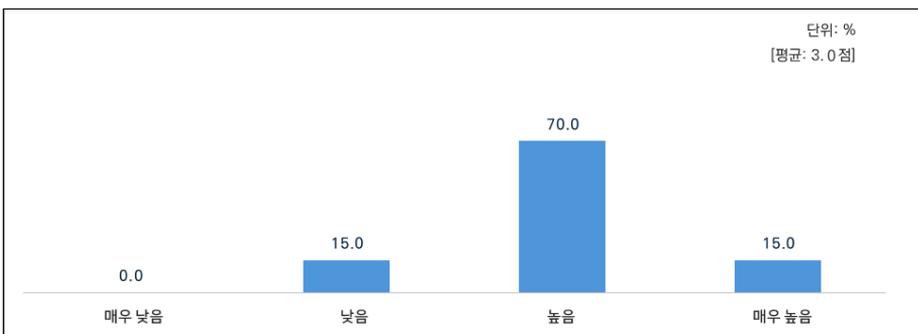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1차를 통해 확인한 국·공립 미술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는 ②대학시설 49.5점, ①교육시설 42.8점, ⑩타 문화시설(미술관 제외) 41.8점, ⑤공공청사 40.3점, ⑦상업시설 30.5점, ⑨공원시설 21.0점, ③돌봄시설 17.5점, ⑥의료시설 14.0점, ④체육시설 8.5점, ⑧주차시설 4.3점 순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4-32]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의 우선순위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1차를 통해 확인한 국·공립 미술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차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가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었고, 이에 대한 평균점수는 3점이다.

[그림 4-33]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



〈표 4-30〉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우선순위 결과에 관한 동의 정도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종합 결과		평균 (4점)	
						낮음	높음		
전체	(20)	-	15.0	70.0	15.0	15.0	85.0	3.0	
성별	남성	(10)	-	30.0	70.0	0.0	30.0	70.0	2.7
	여성	(10)	-	0.0	70.0	30.0	0.0	100.0	3.3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50.0	50.0	0.0	50.0	50.0	2.5
	교수/연구자	(8)	-	12.5	75.0	12.5	12.5	87.5	3.0
	공공기관 종사자	(7)	-	0.0	71.4	28.6	0.0	100.0	3.3
	기타	(1)	-	0.0	100.0	0.0	0.0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2년~5년 미만	(1)	-	0.0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	0.0	100.0	0.0	0.0	100.0	3.0
	10년 이상	(15)	-	20.0	73.3	6.7	20.0	80.0	2.9
연령	30대	(6)	-	33.3	50.0	16.7	33.3	66.7	2.8
	40대	(8)	-	0.0	75.0	25.0	0.0	100.0	3.3
	50대	(5)	-	20.0	80.0	0.0	20.0	80.0	2.8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25.0	62.5	12.5	25.0	75.0	2.9
	충청	(6)	-	16.7	66.7	16.7	16.7	83.3	3.0
	전라	(2)	-	0.0	100.0	0.0	0.0	100.0	3.0
	경상	(3)	-	0.0	66.7	33.3	0.0	100.0	3.3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 제3절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변화 분석

---

### 1.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입지특성 분석

#### 가. 시설 간 연계 방안 및 분석 방법

앞서 진행된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결과,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시설들의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 우선순위는 각 시설의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시설 간의 연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마련되었다.

이제 이러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각 시설 간 연계 방안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대상지별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도서관과 연계하기에 가장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들 시설 간의 복합화 및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박물관과 미술관은 각각 대학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각 문화시설별로 우선순위 시설을 연계했을 때, 집계구별 시설 접근성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연계가 문화시설 기대효용도의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문화시설을 얼마나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였다. 이는 최종적으로 향후 문화정책 수립 및 시설 배치 전략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나.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대상지 문화시설 접근성 변화 분석

### 1) 분석 개요

앞서 문화시설별 특성에 따라 도달 가능 거리를 설정하고, 해당 거리 내에 포함되는 시설의 개수를 기반으로 접근성 지표를 산출하였다. 본 절에서는 시설 간 우선순위 연계 방안<sup>33)</sup>에 따라 접근가능 시설의 범위를 확장하여 집계구별 접근성을 재산정하고자 하였다. 이전 분석과 동일하게 도서관의 경우 집계구 중심에서 3.7km로 반경을 설정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9.3km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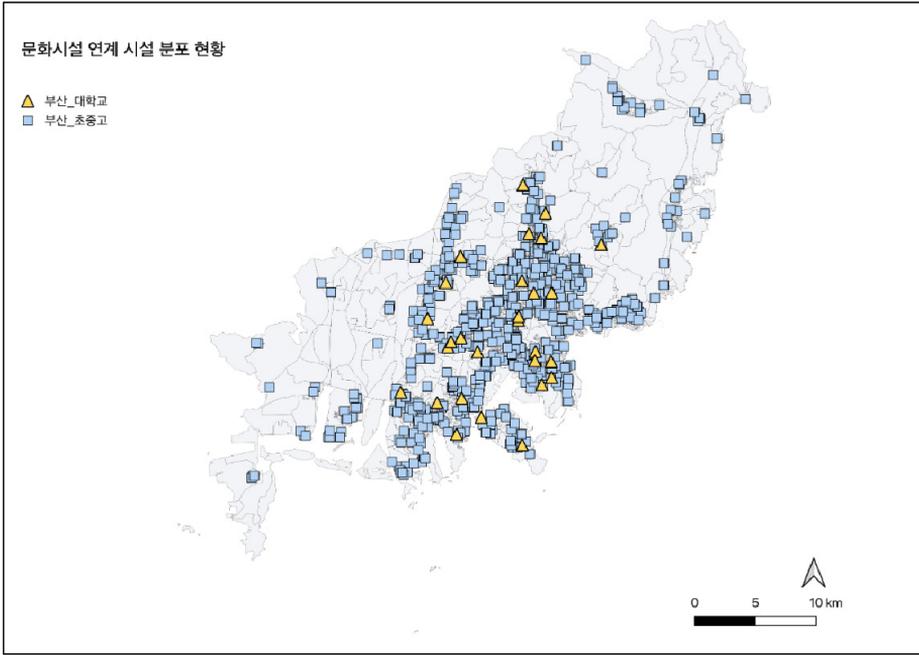
문화시설별 연계되는 시설로 도서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교육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은 대학시설<sup>33)</sup>로 설정하였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대상지별 시설들의 현황은 표 4-31 및 그림 4-34, 35와 같다.

〈표 4-31〉 문화시설 및 각 시설별 연계방안 1순위 시설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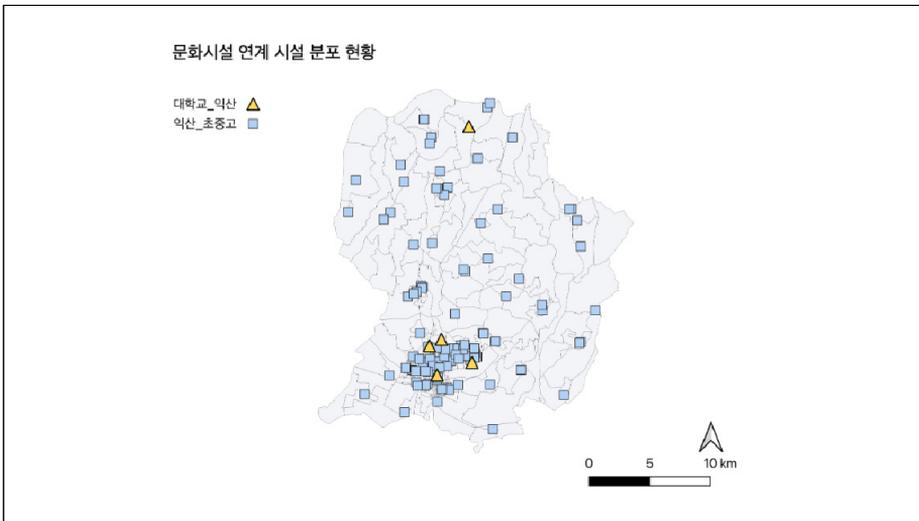
구분	도서관 연계 (개수)		박물관 및 미술관 연계 (개수)		
	도서관	교육시설 (초중고)	박물관	미술관	대학시설 (대학 및 대학원)
부산광역시	51	758	33	9	29
전북 익산	9	121	9	2	5

33) 대학시설의 경우 대학교와 대학원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동일한 입지의 시설인 경우 하나의 시설로 간주함

[그림 4-34] 부산광역시 내 연계시설(교육시설 및 대학시설) 분포 현황



[그림 4-35] 전북 익산시 내 연계시설(교육시설 및 대학시설)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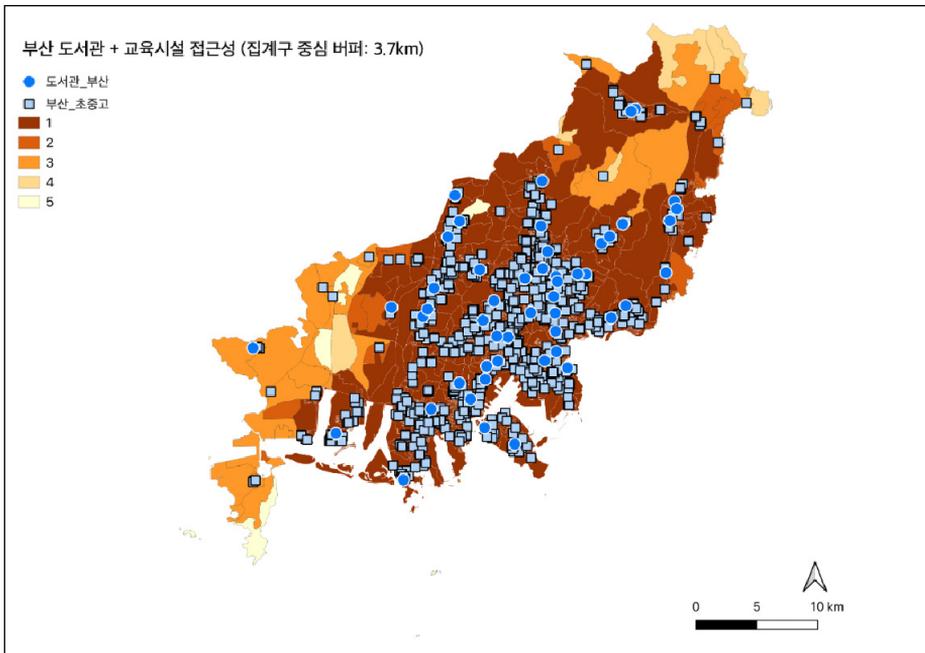


## 2)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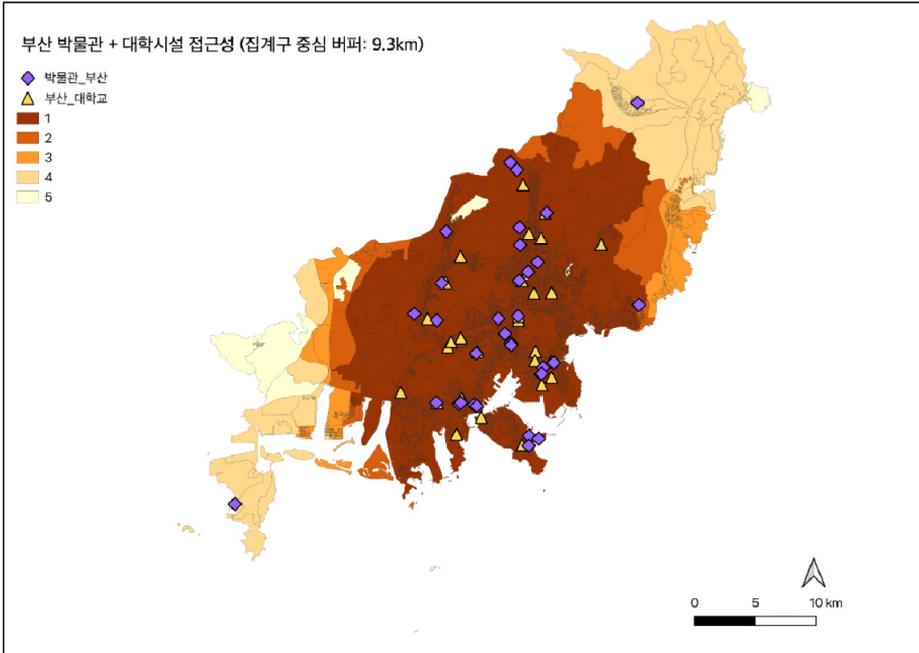
부산광역시 각 집계구 중심점에서 반경 3.7km 이내에 위치한 도서관 및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의 개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접근성 등급을 구분하였다. 부산시 내 도서관은 총 51개, 교육시설은 총 758개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시설은 생활권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부산시 전 지역에 걸쳐 균등한 분포를 보인다. 이에 따라 도서관과 교육시설 간의 연계는 부산시 전반에 걸쳐 시설 접근성 등급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박물관 및 미술관과 대학시설의 연계 또한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학시설은 교육시설에 비해 개체 수는 적지만, 9.3km 반경 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학시설이 박물관 및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의 중앙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에, 서측과 동측 말단 지역의 접근성 등급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설 연계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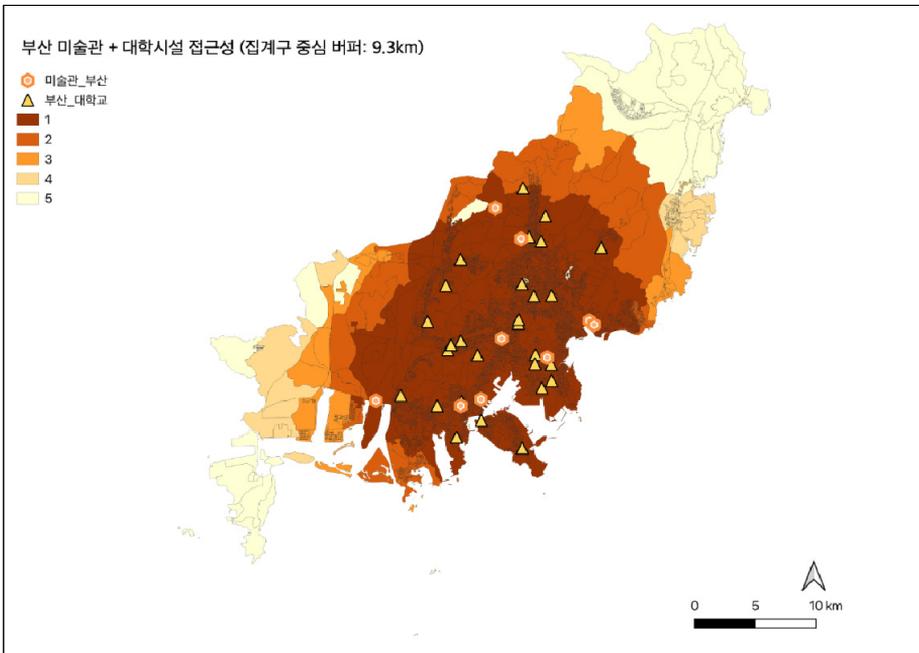
[그림 4-36] 부산광역시 도서관과 교육시설 연계에 따른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그림 4-37] 부산광역시 박물관과 대학시설 연계에 따른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그림 4-38] 부산광역시 미술관과 대학시설 연계에 따른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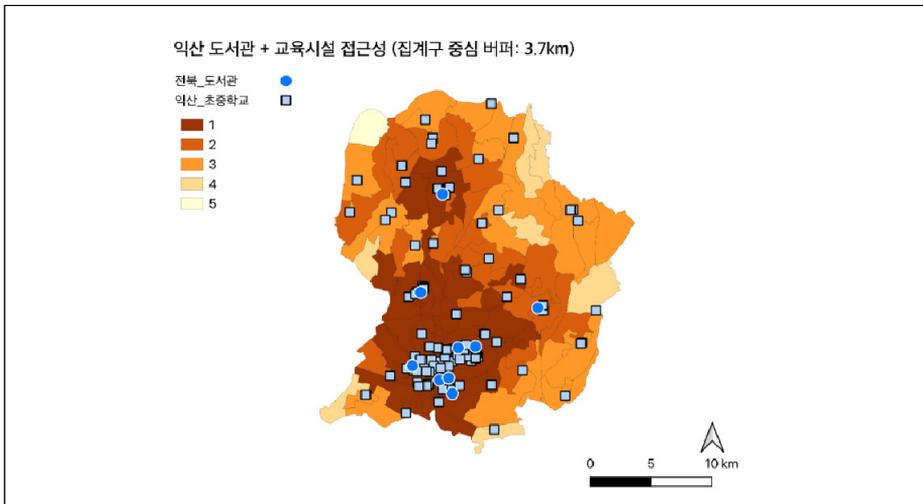


### 3) 전북 익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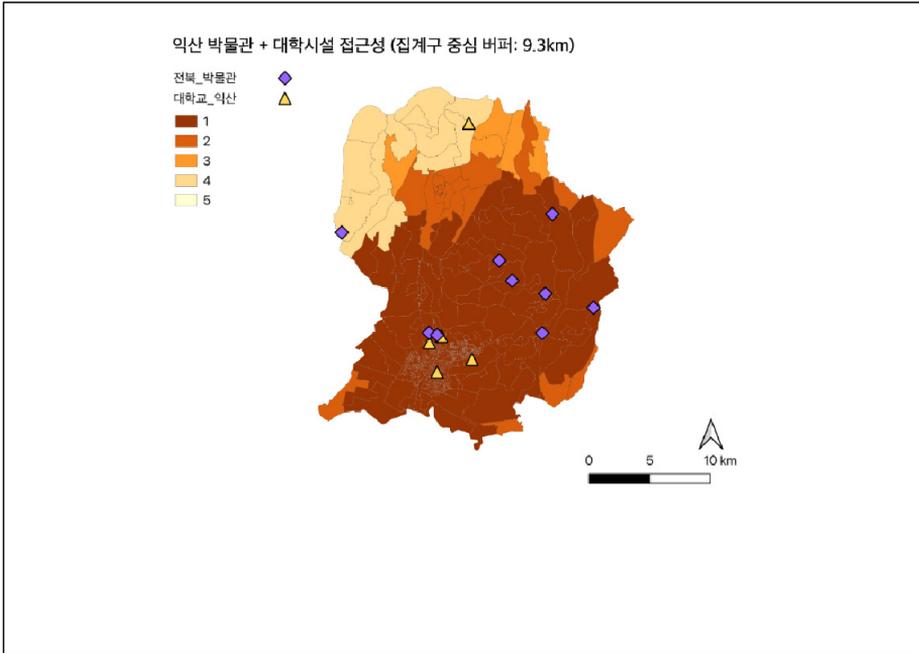
전북 익산시에서도 도서관과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의 연계를 통해 시설 접근성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특히 익산시는 남측 중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생활권별로 분포된 교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과 대학시설의 연계 또한 집계구별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나, 익산시 내 대학시설이 5개소로 제한적이고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어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그러나 북측에 위치한 단일 대학시설만으로도 해당 지역 내 9.3km 반경에서 방문 가능한 문화시설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같은 시설의 경우 개체수가 적더라도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러한 시설의 복합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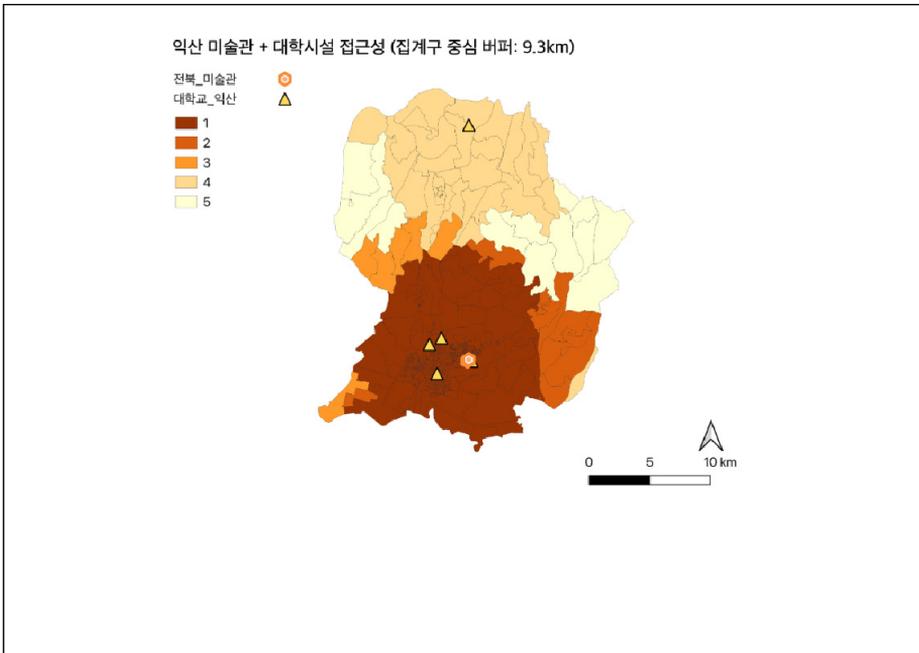
[그림 4-39] 전북 익산시 도서관과 교육시설 연계에 따른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그림 4-40] 전북 익산시 박물관과 대학시설 연계에 따른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그림 4-41] 전북 익산시 미술관과 대학시설 연계에 따른 집계구별 접근성 등급



## 2.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추정

### 가. 분석 개요

앞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성과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지표인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를 개발하였다. 본 분석은 시설 간 연계 방안을 적용하여 개선된 접근성 등급을 바탕으로 2045년 인구감소 상황에서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를 예측하는 것이다. 인구밀도의 감소가 예상되는 미래에 비효율적 시설 확장이 아닌 기존 시설과의 연계, 활용을 통해서도 문화시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 나. 2045년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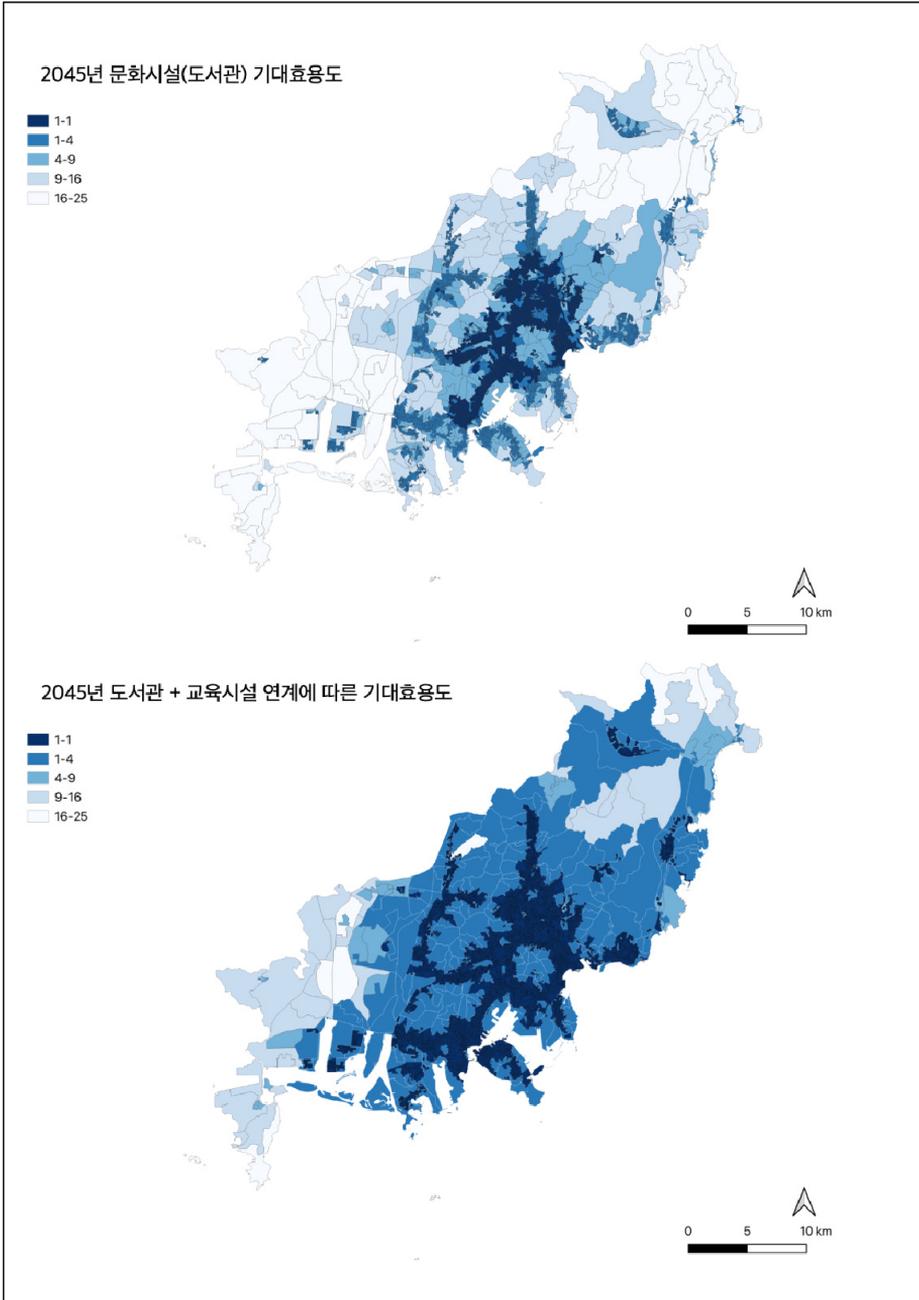
#### 1) 부산광역시

앞서 부산광역시의 분석 결과, 지역 전역에 인구밀도가 높은 시가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문화시설 기대효용도의 산정에 있어 인구밀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2045년 예상 인구감소에 따라 외곽 지역의 기대효용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시설 간 연계를 통해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의 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킨 결과, 문화시설 기대효용도가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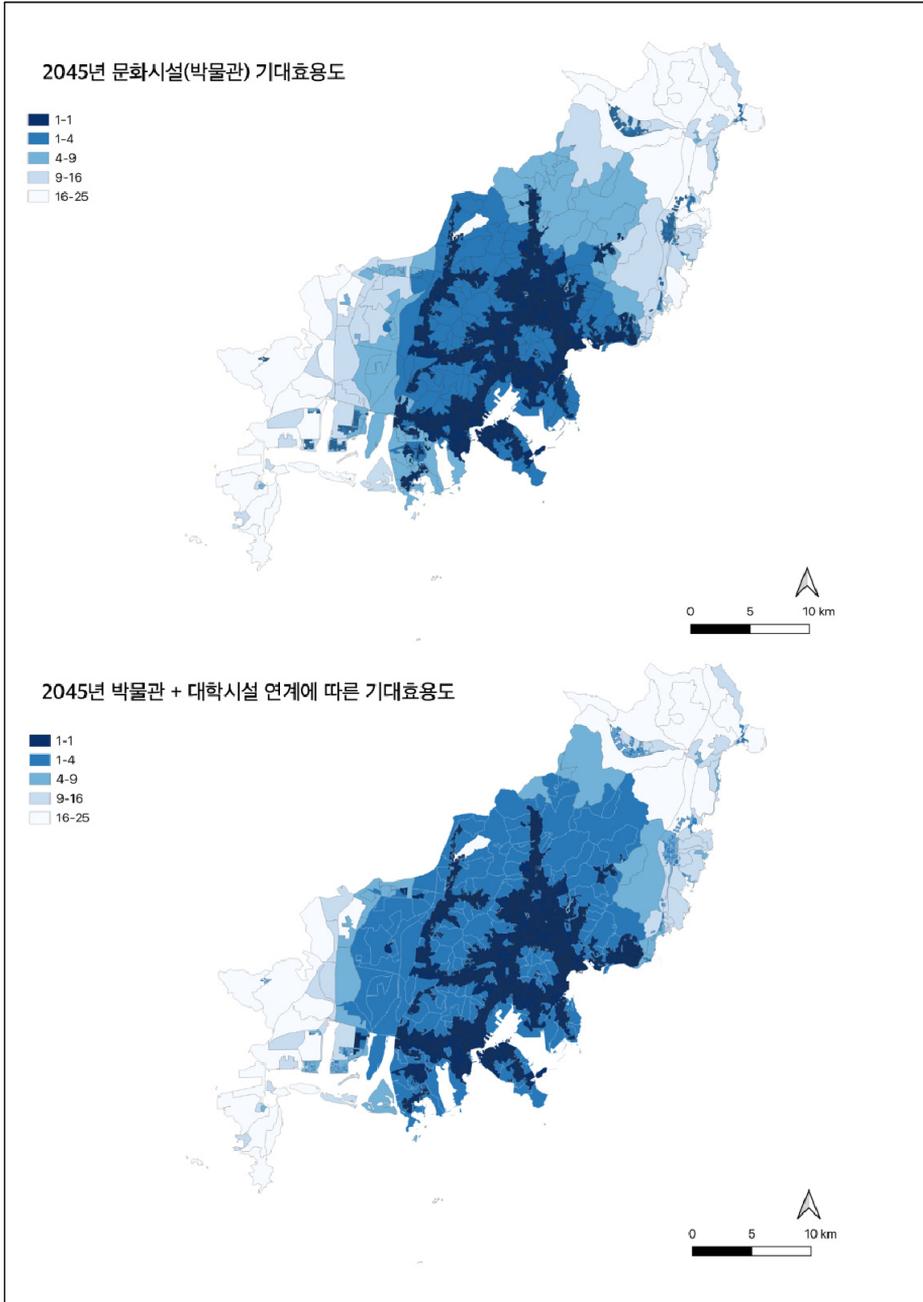
도서관의 경우 생활권별로 위치한 교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기대효용도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곽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대효용도 수치가 낮게 나타났으나, 도서관과 교육시설의 연계 전략은 지역 내 전반적으로 기대효용도의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에도 대학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기대효용도가 상승하는 지역이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학시설을 포함한 접근성 개선 효과가 주로 도심부에 집중되어 있어 외곽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인구감소로 인해 시설 이용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문화시설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 도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특히, 신축 또는 개축보다는 시설 연계를 통한 효율적 방안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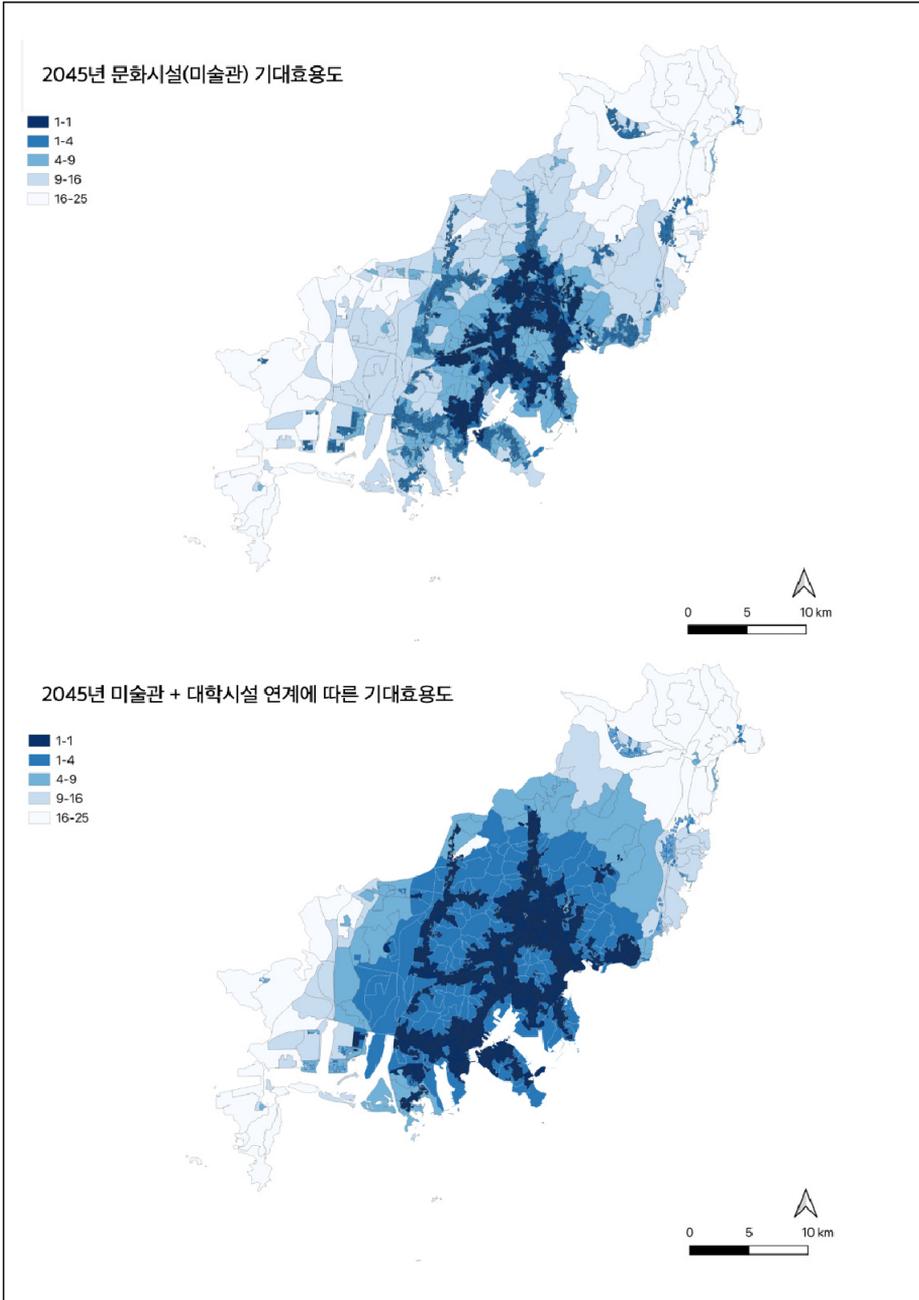
[그림 4-42] 2045년 시설 연계 전/후 부산광역시 문화시설(도서관) 기대효용도  
 (위) 시설 연계 전, (아래) 시설 연계 후(도서관+교육시설)



[그림 4-43] 2045년 시설 연계 전/후 부산광역시 문화시설(박물관) 기대효용도  
 (위) 시설 연계 전, (아래) 시설 연계 후(박물관+대학시설)



[그림 4-44] 2045년 시설 연계 전/후 부산광역시 문화시설(미술관) 기대효용도  
 (위) 시설 연계 전, (아래) 시설 연계 후(미술관+대학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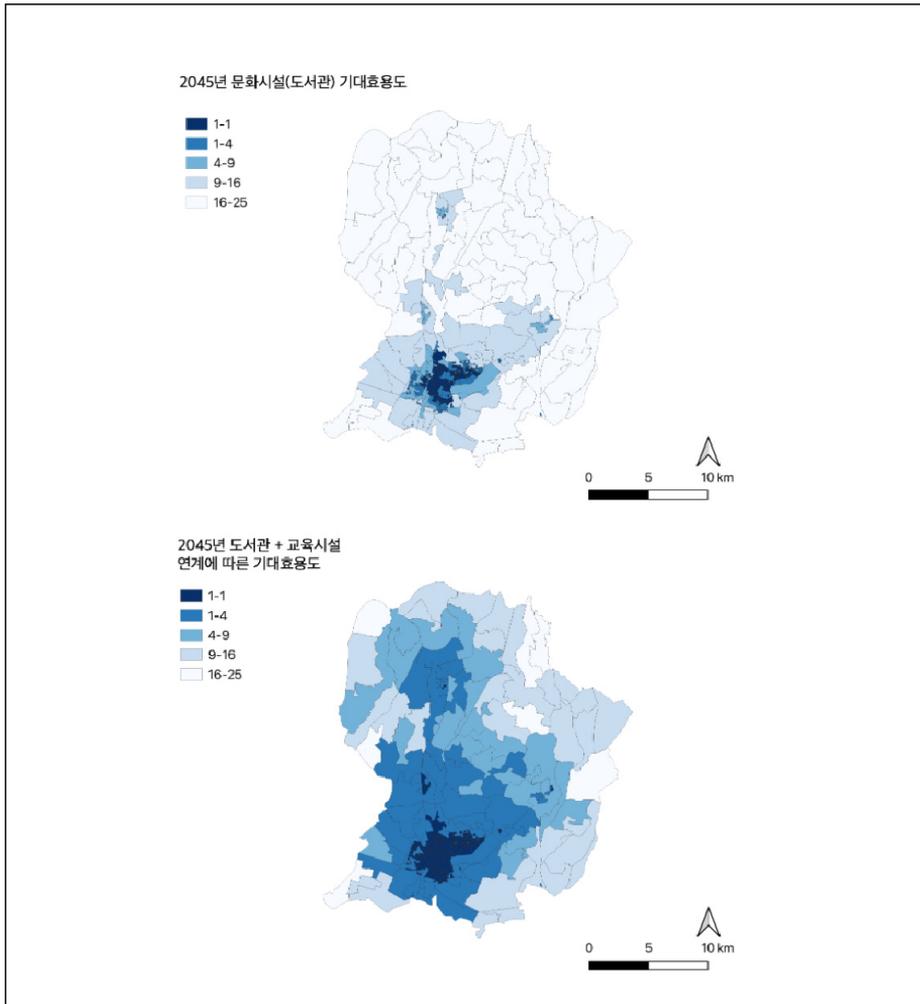
## 2) 전북 익산시

앞서 전북 익산시의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인 부산과 비교할 때 지역 전반에서 문화시설 기대효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45년 예상 인구감소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설 간 연계를 통해 익산시의 문화시설 기대효용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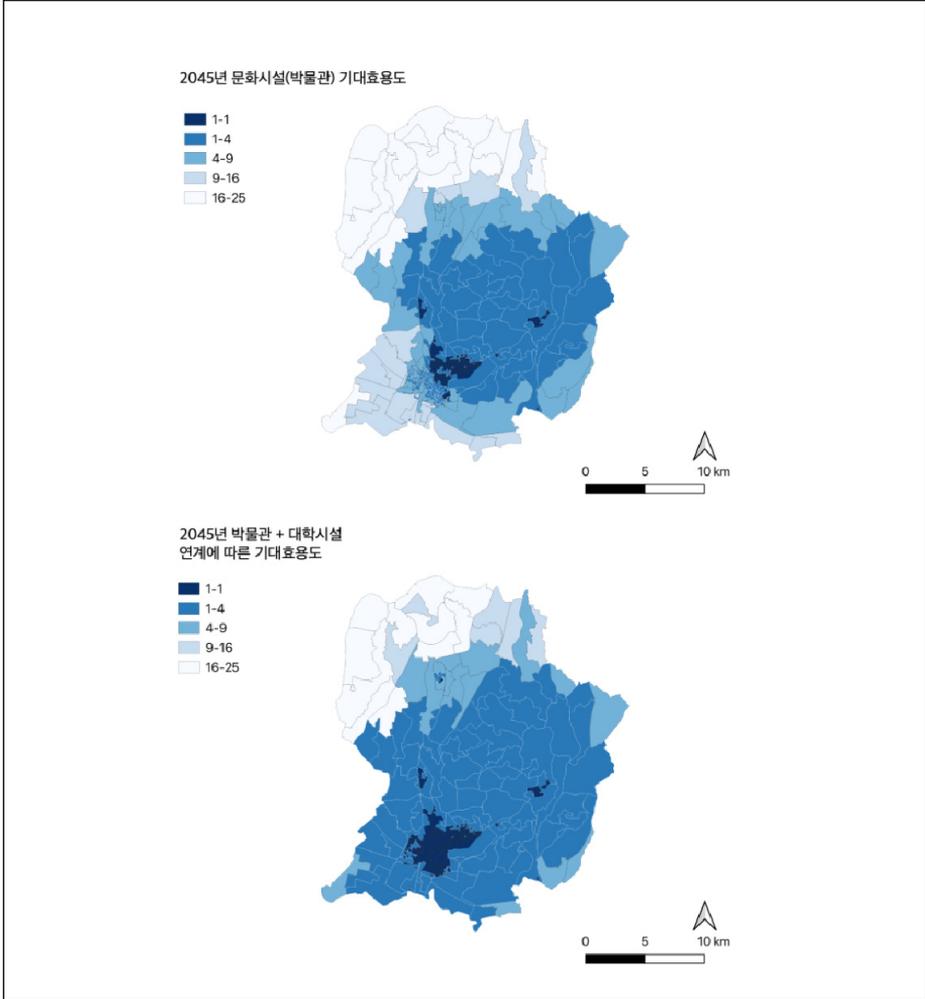
도서관의 경우, 부산과 마찬가지로 생활권별로 분포한 교육시설과의 연계가 지역 곳곳에서 기대효용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연계 가능한 대학시설의 수가 제한적이고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실제 분석 결과에서는 기대효용도가 기준 등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북측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대효용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전북 익산시와 같은 지역 규모가 작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소수의 시설만으로도 지역 전반의 기대효용도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방 소도시 및 기초지자체에서, 지역 면적이 한정된 상황에서도 적은 수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복합화하고 활용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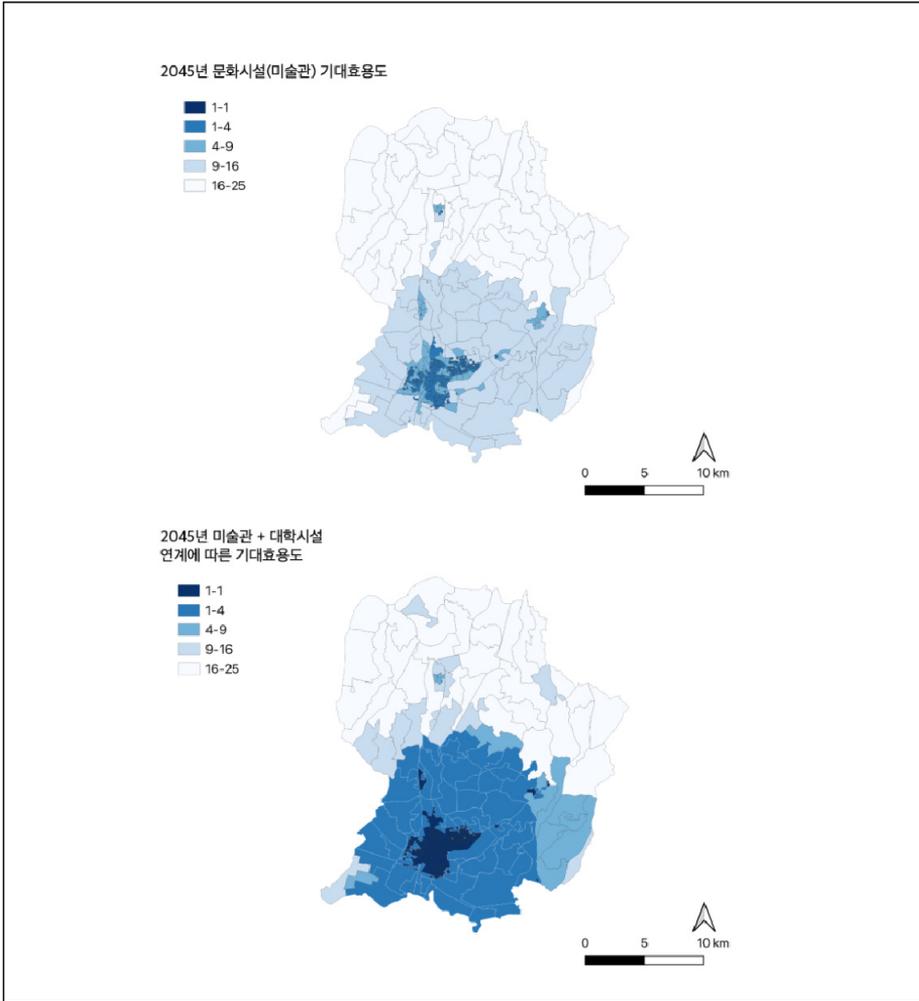
[그림 4-45] 2045년 시설 연계 전/후 전북 익산시 문화시설(도서관) 기대효용도  
 (위) 시설 연계 전, (아래) 시설 연계 후(도서관+교육시설)



[그림 4-46] 2045년 시설 연계 전/후 전북 익산시 문화시설(박물관) 기대효용도  
 (위) 시설 연계 전, (아래) 시설 연계 후(박물관+대학시설)



[그림 4-47] 2045년 시설 연계 전/후 전북 익산시 문화시설(미술관) 기대효용도  
 (위) 시설 연계 전, (아래) 시설 연계 후(미술관+대학시설)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제5장

## 인구위기에 대응한 문화시설 입지지표 및 타 시설 연계 방안



# 제1절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 1. 문화시설 입지특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전북 익산시를 대상으로 2022년 인구분포 현황 및 2045년 인구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문화시설의 공간적 분포와 접근성을 분석하였고, 지역별 문화시설의 접근성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두 지역은 각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서, 인구감소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화시설의 배치와 접근성에서 몇 가지 유사성과 차별성을 보였다.

광역지자체인 부산광역시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존재하며, 특히 박물관과 도서관이 특정 지역에 군집화 되어 있기에 높은 접근성을 보였다. 이는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한편,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는 접근성 격차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군집화는 문화시설의 집적 효과를 통해 지역의 장소성을 강화할 수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전북 익산시는 기초지자체로서 부산에 비해 문화시설의 개체수가 적고, 분포도 또한 균등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낮은 접근성을 보였다. 특히 미술관의 경우, 도심 외곽으로 갈수록 시설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문화시설의 공간적 배치에서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두 지역 간 공통점은 인구감소와 그로 인한 문화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는 문화시설 이용률 저하와 시설 유지 및 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지역 간 접근성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도서관의 경우 생활인프라로서 각 도시 내 생활권 마다 고르게 입지해야한다는 조성 기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접근성이 낮게 측정된 외곽 지역 거주민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의

성격이 단순 도서대여 및 제공이 아닌 도서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나아갈 필요성이 제기된다<sup>34)</sup>.

박물관의 경우 거점시설로서 지역 내 고르게 입지할 필요성이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미래에 요구되는 박물관의 기능은 단순히 유물의 수집, 보관, 전시라는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따라서 기존 박물관의 형태 및 기능을 넘어 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기회 제공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미술관 또한 박물관과 같은 거점시설에 속하나 기존 수장고에 저장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일방적 전시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회적 역할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sup>35)</sup>.

종합적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두 개 대상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부산광역시와 같은 광역지자체는 문화시설의 군집화를 활용하되,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시설 분포 조정이나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전북 익산시와 같은 기초지자체는 문화시설의 양적 확충과 균형 잡힌 배치를 통해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접근성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문화예술 정책 수립 시 지역 간 문화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야별 전문가 FGI를 통해 확인한 결과, 문화시설의 입지는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접근성도 중요한 지표이지만, 지역 내 각 시설별 방문객의 관람빈도나 만족도 조사를 통한 결과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은 전 국민의 지식 정보 격차 해소이고, 특히 지식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박물관·미술관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수장품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는 각 시설별 방문객의 관람빈도 및 만족도에 연 관될 수 있기에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통해 문화시설 입지를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화시설 입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개발이 정책적으로 요구되고,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는 정책 수립 시 여러 지표의 분석결과를 동시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34) 이성신 외 (2018),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작은 도서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35) 정다애·박지영 (2024), '지역 공공자원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역할과 지속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 연구, 32(2).

## 2.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지표 및 활용의 필요성

본 연구는 인구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문화시설 입지지표로써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를 개발하고, 이를 부산광역시와 전북 익산시를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두 지역 간의 문화시설 활용 가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지표는 기존의 단순한 접근성 지표와 달리 인구밀도를 가중치로 포함하여 문화시설의 실질적 이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고, 미래 사회에 있어 인구변화에 민감한 문화시설 배치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분석 결과, 두 지역 모두 집계구 간 기대효용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으며,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외곽지역에서의 시설 접근성과 기대효용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인구밀도와 문화시설 접근성이 기대효용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두 지역 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부산과 익산은 문화시설 기대효용도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산은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심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높은 기대효용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전북 익산시는 단핵구조의 도시로 남측 도심지에 집중된 인구밀도를 중심으로 기대효용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기대효용도가 낮은 집계구가 도시 내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지방 소도시에서의 문화시설 분포 및 배치가 도심지에 한정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도서관과 미술관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2045년을 전망한 분석에서는 인구밀도의 감소로 인해 두 지역 모두 외곽지역에서의 기대효용도가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산은 도심지의 범위가 넓기에 이러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익산과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외곽지역에서의 기대효용도 감소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지방 소도시에서 인구감소와 그로 인한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하락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내포한다. 부산의 경우 문화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도심지와 외곽지역 간 기대효용도 격차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익산과 같은 기초지자체는 신규전립 등 시설의 양적 확충과 함께 인구밀도의 접근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시설 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외곽지역에서의 기대효용도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시설조성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문화시설 입지지표 개발을 통해 인구위기에 따른 문화시설 이용 수준 변화를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문화시설 입지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활용됨으로써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 간 문화서비스 불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는 인구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문화시설 입지지표이고 집계구를 중심으로 인구밀도와 함께 분석할 수 있기에 기존 접근성 지표 보다 진보한 연구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표는 대상지 내 집계구 기준 정주인구의 밀도를 기반으로 분석되기에 도서관과 같은 생활문화시설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박물관·미술관과 같은 거점문화 시설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 FGI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대효용도의 분석 기준인 집계구는 GIS 분석에 있어 행정구역 또는 격자형 영역 보다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기에 적합할 것이나, 정주인구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각 시설에 따라 가중치 차등 적용을 통해 결과 값의 보정이 합리적일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과 같은 거점문화시설의 경우 생활인구 등으로 인구밀도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겠으나, 지역에 따라 관련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지표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미술관의 경우 관광인구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지인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구감소가 확인되는 인구위기 지역이기는 하나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이다. 따라서 도시 내 주민 중심의 이용도와 외부지역의 방문객 중심의 이용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제활동인구 등으로 세분화한 인구지수와 도시 내 시가화 면적 또한 문화시설 기대효용도와 동시에 분석될 필요가 있다.

## 제2절 문화시설과 타 시설 간 연계방안

---

### 1. 향후 문화시설 이용자 수요의 다변화 가능성

본 연구의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2차에서 향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별 이용자 수요가 기존 문화시설 서비스를 넘어 다변화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94.7~100%가 다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평균점수로 환산 시 3.4~3.5점에 해당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전통적인 서비스 모델을 넘어 점차 다양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 FGI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각 문화시설은 디지털 및 가상 현실 기술의 통합을 통해 문서, 예술품, 유물 등을 보존하고,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특성과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지식전달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지속가능성 측면에 있어 공공예산의 활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축 및 운영 과정에서의 환경적 측면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용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방안을 넘어 이용자의 경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점차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표 5-1〉 향후 도서관 이용자 수요가 기존 도서관 서비스를 넘어 다변화 될 가능성 여부

(n=19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19)	-	5.3	42.1	52.6	5.3	94.7	3.5	
성별	남성	(9)	-	11.1	33.3	55.6	11.1	88.9	3.4
	여성	(10)	-	0.0	50.0	50.0	0.0	100.0	3.5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0.0	75.0	25.0	0.0	100.0	3.3
	교수/연구자	(7)	-	14.3	0.0	85.7	14.3	85.7	3.7
	공공기관 종사자	(7)	-	0.0	57.1	42.9	0.0	100.0	3.4
	기타	(1)	-	0.0	100.0	0.0	0.0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2년~5년 미만	(1)	-	0.0	0.0	100.0	0.0	100.0	4.0
	5년~10년 미만	(2)	-	0.0	50.0	50.0	0.0	100.0	3.5
	10년 이상	(14)	-	7.1	42.9	50.0	7.1	92.9	3.4
연령	30대	(6)	-	0.0	50.0	50.0	0.0	100.0	3.5
	40대	(8)	-	0.0	50.0	50.0	0.0	100.0	3.5
	50대	(4)	-	25.0	0.0	75.0	25.0	75.0	3.5
	60대 이상	(1)	-	0.0	100.0	0.0	0.0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12.5	50.0	37.5	12.5	87.5	3.3
	충청	(5)	-	0.0	40.0	60.0	0.0	100.0	3.6
	전라	(2)	-	0.0	50.0	50.0	0.0	100.0	3.5
	경상	(3)	-	0.0	0.0	100.0	0.0	100.0	4.0
	제주	(1)	-	0.0	100.0	0.0	0.0	100.0	3.0

〈표 5-2〉 향후 박물관 이용자 수요가 기존 박물관 서비스를 넘어 다변화 될 가능성 여부

(n=20,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20)	-	-	60.0	40.0	-	100.0	3.4	
성별	남성	(10)	-	-	60.0	40.0	-	100.0	3.4
	여성	(10)	-	-	60.0	40.0	-	100.0	3.4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	75.0	25.0	-	100.0	3.3
	교수/연구자	(8)	-	-	37.5	62.5	-	100.0	3.6
	공공기관 종사자	(7)	-	-	71.4	28.6	-	100.0	3.3
	기타	(1)	-	-	100.0	0.0	-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	50.0	50.0	-	100.0	3.5
	2년~5년 미만	(1)	-	-	0.0	100.0	-	100.0	4.0
	5년~10년 미만	(2)	-	-	50.0	50.0	-	100.0	3.5
	10년 이상	(15)	-	-	66.7	33.3	-	100.0	3.3
연령	30대	(6)	-	-	50.0	50.0	-	100.0	3.5
	40대	(8)	-	-	50.0	50.0	-	100.0	3.5
	50대	(5)	-	-	80.0	20.0	-	100.0	3.2
	60대 이상	(1)	-	-	100.0	0.0	-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	75.0	25.0	-	100.0	3.3
	충청	(6)	-	-	66.7	33.3	-	100.0	3.3
	전라	(2)	-	-	50.0	50.0	-	100.0	3.5
	경상	(3)	-	-	0.0	100.0	-	100.0	4.0
	제주	(1)	-	-	100.0	0.0	-	100.0	3.0

〈표 5-3〉 향후 미술관 이용자 수요가 기존 미술관 서비스를 넘어 다변화 될 가능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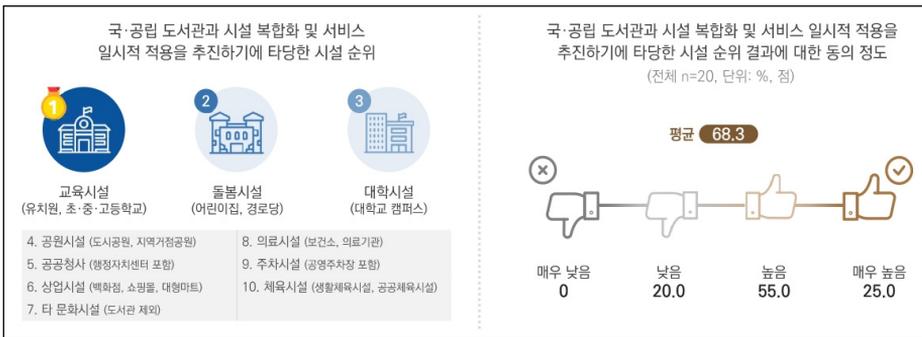
(n=19,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결과		평균 (4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19)	-	-	63.2	36.8	-	100.0	3.4	
성별	남성	(9)	-	-	66.7	33.3	-	100.0	3.3
	여성	(10)	-	-	60.0	40.0	-	100.0	3.4
종사 형태	현장종사자	(4)	-	-	100.0	0.0	-	100.0	3.0
	교수/연구자	(7)	-	-	28.6	71.4	-	100.0	3.7
	공공기관 종사자	(7)	-	-	71.4	28.6	-	100.0	3.3
	기타	(1)	-	-	100.0	0.0	-	100.0	3.0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	(2)	-	-	50.0	50.0	-	100.0	3.5
	2년~5년 미만	(1)	-	-	0.0	100.0	-	100.0	4.0
	5년~10년 미만	(2)	-	-	50.0	50.0	-	100.0	3.5
	10년 이상	(14)	-	-	71.4	28.6	-	100.0	3.3
연령	30대	(6)	-	-	66.7	33.3	-	100.0	3.3
	40대	(8)	-	-	50.0	50.0	-	100.0	3.5
	50대	(4)	-	-	75.0	25.0	-	100.0	3.3
	60대 이상	(1)	-	-	100.0	0.0	-	100.0	3.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	(8)	-	-	87.5	12.5	-	100.0	3.1
	충청	(5)	-	-	60.0	40.0	-	100.0	3.4
	전라	(2)	-	-	50.0	50.0	-	100.0	3.5
	경상	(3)	-	-	0.0	100.0	-	100.0	4.0
	제주	(1)	-	-	100.0	0.0	-	10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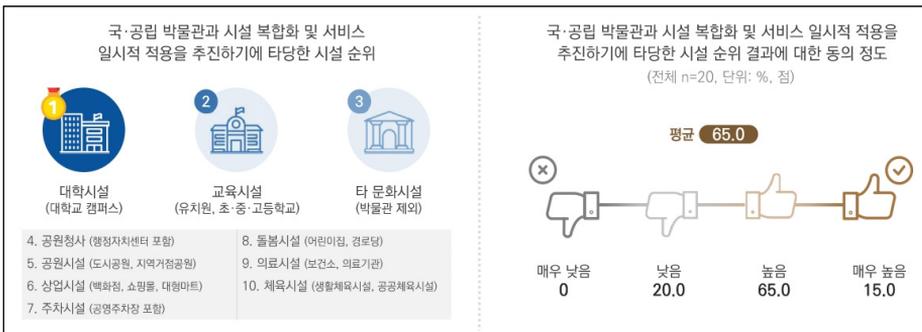
## 2. 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 전략

문화재정 축소 등 재정긴축의 이슈 안에서 지역별 문화시설의 필요 및 활성화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검토가 요구되고, 이는 기존 시설 현황, 문화적 특수성, 필수시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대상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타 시설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시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각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재차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국·공립 도서관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박물관·미술관은 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대학시설과 연계하기에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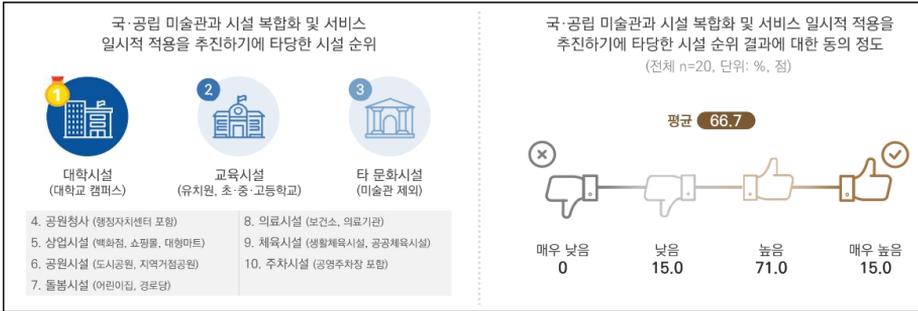
[그림 5-1] 국·공립 도서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 순위



[그림 5-2] 국·공립 박물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 순위



[그림 5-3] 국·공립 미술관과 연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 순위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타 시설 연계방안은 크게 문화시설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와 문화시설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으로 구분된다. 두 방안은 모두 공간활용의 관점에서 유사하나 복합용도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적용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 FGI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앞선 델파이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문화시설의 타 시설 연계방안은 적극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로이 시설 건립을 통해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의 이슈에 있어 기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인구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설 복합화의 경우 각 문화시설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함으로써 대상 시설을 선정해야할 것이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각 시설의 고유 역할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할 것이다. 또한 시설 운영에 있어 안전성과 연계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서로 다른 운영주체의 관점에서 사전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문화시설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시설 복합화의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도서관의 경우 지역의 거점 도서관, 단위 도서관, 분관, 작은 도서관 등 각 시설의 지향점이 상이할 것이기에 각 상황에 맞는 복합화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문화시설 서비스의 타 시설 내 일시적 적용의 경우 현 시점 보건소나 의료시설과 같은 생활SOC시설에 찾아가는 서비스의 형태로 다수 진행 중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각 문화시설의 홍보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일시적 적용이 자칫 각 시설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소 특정형의 적용방안 강구를 통해 타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세부계획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 3. 시설 간 연계에 따른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개선 효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문화시설 간 연계 전략 적용 전후의 분석 결과는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지수를 통해 문화시설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시설 간 연계 전략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이 교육시설 및 대학시설과 복합화 될 때 지역 주민들의 시설 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부산광역시외의 경우 도서관과 교육시설 간의 연계가 지역 전역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고, 그 결과 기대효용도 지수도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외곽지역에서의 문화시설 접근성 지표가 크게 향상되어 기대효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대학시설과 박물관 및 미술관 간의 연계는 도심부에 집중된 접근성 개선에 그쳐, 외곽지역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시 외곽지역의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도서관과 교육시설 간의 연계가 지역 전반의 기대효용도를 크게 개선하였으며, 이는 남측 도심지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의 접근성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다만, 박물관과 미술관의 대학시설과의 연계는 제한적이었고, 도심지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낮은 접근성 등급과 기대효용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시설만으로도 기초지자체인 익산시에서 기대효용도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자면 시설 간 연계를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미래 인구밀도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기대효용도 지수는 수치적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시설 간 연계 전략이 기존 문화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가 ‘사람이 없어도 물리적 거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분석의 핵심은, 인구밀도가 낮아지는 지역에서는 접근성 문제와 인구 감소로 인해 기대효용도 수치가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 연계’라는 전략을 통해 시설의 물리적, 기능적 확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2045년을 대비한 중장기적 문화시설 배치 전략에서는 신규 시설 건립보다는 기존 시설의 복합화와 연계를 통한 접근성 및 기대효용도 개선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 분석 결과는 향후 지역 간 문화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4〉 문화시설 연계 전, 후 2022년, 2045년의 지역별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변화량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 간 연계 전 기대효용도 지역 전체 평균값 <sup>*</sup>		'22년 대비 '45년 변화량 <sup>**</sup>	시설 간 연계 후 기대효용도 지역 전체 평균값 <sup>*</sup>	시설 연계 전 대비 후 '45년 변화량 <sup>**</sup>
		2022	2045		2045	
부산	도서관	3.302	3.361	1.8%	1.339	-60.2%
	박물관	1.863	1.897	1.8%	1.625	-14.3%
	미술관	3.256	3.315	1.8%	1.773	-46.5%
익산	도서관	5.949	6.093	2.4%	2.743	-55.0%
	박물관	3.622	3.711	2.5%	2.35	-36.7%
	미술관	6.138	6.284	2.4%	3.208	-48.9%

\* 문화시설 기대효용도 값은 낮을 수록 기대효용도가 좋은 지역임을 의미함

\*\* 변화량이 음수 일 경우 개선되었음을 의미함

이와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 FGI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문화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한 접근성 지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각 시설별 방문객의 관람 빈도와 만족도 같은 타 지표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인구위기 상황에서 문화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문화시설 입지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문화시설 기대효용도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활용됨으로써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 간 문화서비스 불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현미·김준래(2014),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 운영실태 진단」, 건축공간연구원.
- 강현미·김준래(2023),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의 운영실태 진단: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 고준호·심진섭(2012), 「P-median Model을 활용한 서울시 전기택시 배터리 교환소 최적입지 선정」,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66, 657-662.
- 구형수(2018), 「생활인프라 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2019),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 김기홍(2023), 「대한민국 소멸보고서」.
- 김성원(2024), 「독일의 학교시설 복합화 및 개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 김면 외(2022),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라도삼·이정현(2023), 「서울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과 확충방안」, 서울연구원.
- 민지은·박신의(2023), 「프랑스 지역문화 거점공간의 문화예술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실천: ‘미크로-폴리 (Micro-Folie)’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7(2), 35-62.
- 박보라 외(2013), 「휴리스틱 P-median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전거주차장 최적입지 선정」,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3(5), 1989-1998.
- 산업연구원(2022),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안영웅 외(2020), 「대전시 소방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3), 560-571.
- 양혜원(2015),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익근(2021), 「중소도시 브랜딩 전략」.
- 이보경 외(2022),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 국토연구원.

- 이성신 외(2018),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작은 도서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77-97.
- 이해빈 외(2023), 「공공데이터 기반 공유주차장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최대 커버리지 문제 (MCLP) 해결 기법」.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6(2), 275-287.
- 정다애·박지영(2024), 「지역 공공자원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역할과 지속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2(2), 459-481.
- 정소양 외(2023),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정현숙(2021), 「인구위기국가 일본」.
- 함윤주 외(2019), 「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안전부(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 [해외문헌]

- Aring, J.(2014), Integration hoch zwei - Bildungslandschaften und Stadtentwicklung verknüpfen. In: Forum Wohnen und Stadtentwicklung(FWS), Verbandszeitschrift des Bundesverbands Wohnen und Stadtentwicklung (vhw), Heft 3, Mai-Juni 2014, S. 115-120.
-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BBSR(2017). 「Zwischenevaluierung des Städtebauförderungsprogramms Soziale Stadt」.
- Church, R. & Reville, C.(1974), 「The Maximal Covering Location Problem」.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32, 101-118.
- Ébersold, S.(2017), 「L'École inclusive, face à l'impératif d'accessibilité」, 『Éducation Et Sociétés』, 2(40), 89-103.
- Hakimi, S. L.(1964), 「Optimum Locations of Switching Centers and the Absolute Centers and Medians of a Graph」. 『Operations Research』, 12(3), 450-459.
- Mayor of London(2019), 「Cultural Infrastructure Plan」.
- Sacco, M., & Jamar, D.(2014), La médiation culturelle dans les Centres culturels Bruxellois: Pratiques, représentations et perspectives (Rapport de recherche). Bruxelles: Conteration des Centres culturels bruxellois.
- Teitz, M. B.(1968), 「Toward a Theory of Urban Public Facility Location」. 『Papers in Regional Science』, 21(1), 35-51.

- Toregas, C., Swain, R., ReVelle, C., & Bergman, L.(1971), 「The Location of Emergency Service Facilities」. 『Operations Research』, 19(6), 1363-1373.
- 生活文化スポーツ局(2022), 「都立文化施設運営指針」.



---

# ABSTRACT

## **Prediction the Role Change of Regional Cultural Facilities from Population Crisis and Corresponding Strategies**

Kim, Youn Jin

Lee, Hee Jae

This study is a comprehensive endeavor, aiming to analyze and propose the current status and efficient functional changes and location strategies of cultural facilities in response to South Korea's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crisis. It employs a range of research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and case analys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analysis, Delphi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FGI), to develop new locational indicators for cultural facilities and an expected utility evaluation model that actively responds to the population crisis.

South Korea is currently experiencing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and a rapid ageing process, with population decline particularly pronounced in non-capital regions. Such demographic changes not only negatively impact the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rates of cultural facilities but also suggest the need for a reassessment of their functional aspects. The study focuses on regions with severe population decline, analyzing cultural facilities' status and exploring appropriate location and function adjustments.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functional changes and locational strategies for cultural facilities in response to the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crisis. In particular, they emphasize the need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of cultural facilities beyond mere maintenance through

complex integration with various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Additionally, the study proposes ways to expand cultural facility services to meet diverse community cultural needs and mitigate cultural disparities between regions.

Furthermore, the study introduces a new indicator, 'Expected Utility of Cultural Facilities,' to develop locational and functional change strategies for cultural facilities. This indicator considers the accessibility, population density,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facilities to optimize the placement and functionality of cultural facilities in each region. The study explores linkage strategies between cultural facilities and other facilities to enhance accessibility and increase utilization rates in population crisis regions, proposing measures to increase the expected utility of cultural facilitie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offers promising ways to reconfigure the location and function of cultural facilities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s population crisis. By doing so, it can bridge cultural disparities between regions and enhance the cultural inclusiveness of communities. The findings carry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at both national and local levels and can serve as crucial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cultural facility policy formulation.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bolster cultural facilities, not just as venues for cultural activities, but as indispensable social resources in the face of population crises.

### **Keywords**

cultural facility, regional facility, population crisis, corresponding strategy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부록

설문지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전문가 설문조사(1차)**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 관광 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본 정책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을 통해 얻어진 모든 정보는 통계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주관기관	조사기관
 <b>한국문화관광연구원</b> <small>Korea Culture &amp; Tourism Institute</small> <b>연구담당자</b> 김연진 연구위원 02)2669-9834 이희재 부연구위원 02)2669-8423	 <b>코리아리서치센터</b> <b>담당연구원</b> 최지은 책임 02)3415-5188 이현진 선임 02)6009-2727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art 1** **현행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설치 및 공급 기준 개선 의견**

※ 다음은 **현행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아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구분	설치 및 공급 기준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8, 매 5년 마다 수립)에 의해 설치</li> <li>- 2028년까지 1,400관(3.7만 명 당 1개관)을 건립할 것을 목표로 함</li> <li>-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반영</li> <li>- 도서관 입지: 인구밀집지역 및 도보 12~20분(반경 1~1.5km) 접근 규정</li> </ul>
박물관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2005~11, 2004년 수립)에 근거</li> <li>- 박물관·미술관: 인구 5만 명 당 1개관(OECD 평균 3.7만 명 당 1개관)</li> <li>-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 1관 추가 가능하고 대도시 인구기준으로 건립 허용</li> <li>-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 (인구 50% 증가 시 1개소 추가건립 가능)</li> <li>-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당 1관 건립 (인구 50% 증가 시 1개소 추가건립 가능)</li> </ul>

Q1. 현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Q2. 다음 항목 중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현행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설치 및 공급 기준의 주요 사항	개선 필요 정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1	(도서관) 2028년까지 1,400관 (3.7만 명 당 1개관) 건립 목표	①	②	③	④
2	(도서관)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반영	①	②	③	④
3	(도서관) 인구밀집지역 및 도보 12~20분 (반경 1~1.5km) 접근 규정	①	②	③	④
4	(박물관·미술관) 인구 5만 명 당 1개관	①	②	③	④
5	(박물관·미술관)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 1관 추가 가능	①	②	③	④
6	(박물관·미술관)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	①	②	③	④
7	(박물관·미술관)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당 1관 건립	①	②	③	④

**Q2-1-1. [Q2 개선 필요 정도 ① 응답한 주요사항만 해당]**

Q2에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Q2-1-2. [Q2 개선 필요 정도 ② 응답한 주요사항만 해당]**

Q2에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Q2-1-3. [Q2 개선 필요 정도 ③ 응답한 주요사항만 해당]**

Q2에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 “필요하다”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Q2-1-4. [Q2 개선 필요 정도 ④ 라고 응답한 주요사항만 해당]**

Q2에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Q2-2. [전체 응답]**

새로운 설치 및 공급 기준을 개발한다면,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제언 부탁드립니다.

Part 2 인구위기에 대응한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설치 및 공급 정책 개발에 관한 의견

Q3. 인구감소와 국·공립 도서관의 이용자 수요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Q4. 인구감소와 국·공립 박물관의 이용자 수요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Q5. 인구감소와 국·공립 미술관의 이용자 수요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Q6.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관련 정책을 개발한다면, 어떤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7.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개발한다면, 어떤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8. 지역소멸과 국·공립 도서관의 이용자 수요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Q9. 지역소멸과 국·공립 박물관의 이용자 수요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Q10. 지역소멸과 국·공립 미술관의 이용자 수요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Q11.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관련 정책을 개발한다면, 어떤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12.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개발한다면, 어떤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Part 3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 타 시설의 연계에 관한 의견**

※ 다음은 현재 도서관이 타 시설과 연계한 사례입니다. 아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 상업시설의 시설 복합화 사례	도서관 서비스가 공원시설에 일시적으로 적용된 사례
	

Q13.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다음은 현재 박물관이 타 시설과 연계한 사례입니다. 아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박물관과 대학시설의 시설 복합화 사례	박물관 서비스가 교육시설에 일시적으로 적용된 사례
	

Q14.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박물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다음은 현재 미술관이 타 시설과 연계한 사례입니다. 아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미술관과 상업시설의 시설 복합화 사례	미술관 서비스가 의료시설에 일시적으로 적용된 사례
	

Q15.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미술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Part 4**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의 연계(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에 관한 의견

Q16. 국·공립 도서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도서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방안	타당성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타당하다	④ 매우 타당하다
1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2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3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4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5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와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6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7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8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9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10	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Q16-1. 국·공립 도서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도서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	1순위	2순위	3순위
1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Q16-2. 국·공립 도서관과 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과의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문화시설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 이유와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Q16-3. 국·공립 도서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기타 시설이 무엇인지, 추가 제안 부탁드립니다.

Q17.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가 타 시설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도서관 서비스를 타 시설에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타당성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타당하다	④ 매우 타당하다
1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2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3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4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5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6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7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8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9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10	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Q17-1.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적용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도서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	1순위	2순위	3순위
1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Q17-2.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가 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문화시설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 이유와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Q17-3. 국·공립 도서관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적용되기에 적합한 기타 시설이 무엇인지, 추가 제안 부탁드립니다.

**Part 5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의 연계(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에 관한 의견**

Q18. 국·공립 박물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박물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방안	타당성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타당하다	④ 매우 타당하다
1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2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3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4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5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와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6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7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8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9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10	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Q18-1. 국·공립 박물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박물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	1순위	2순위	3순위
1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Q18-2. 국·공립 박물관과 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과의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문화시설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 이유와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Q18-3. 국·공립 박물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기타 시설이 무엇인지, 추가 제안 부탁드립니다.

Q19.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가 타 시설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박물관 서비스를 타 시설에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타당성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타당하다	④ 매우 타당하다
1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2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3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4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5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6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7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8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9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10	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Q19-1.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적용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박물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	1순위	2순위	3순위
1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Q19-2.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가 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문화시설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 이유와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9-3. 국·공립 박물관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적용되기에 적합한 기타 시설이 무엇인지, 추가 제안 부탁드립니다.

**Part 6**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의 연계(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에 관한 의견

Q20. 국·공립 미술관이 타 시설과 시설 복합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미술관과 타 시설의 시설 복합화 방안	타당성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타당하다	④ 매우 타당하다
1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2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3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4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5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와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6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7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8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9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10	타 문화시설(미술관 제외)과의 시설 복합화	①	②	③	④

Q20-1. 국·공립 미술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미술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타 시설	1순위	2순위	3순위
1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타 문화시설(미술관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Q20-2. 국·공립 미술관과 타 문화시설(미술관 제외)과의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문화시설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 이유와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Q20-3. 국·공립 미술관과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기타 시설이 무엇인지, 추가 제안 부탁드립니다.

Q21.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가 타 시설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미술관 서비스를 타 시설에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타당성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타당하다	④ 매우 타당하다
1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2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3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4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5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6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7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8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9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10	타 문화시설(미술관 제외)에 서비스 적용	①	②	③	④

Q21-1.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적용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우선순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미술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타 시설	1순위	2순위	3순위
1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타 문화시설(미술관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Q21-2.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가 타 문화시설(미술관 제외)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문화시설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 이유와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Q21-3. 국·공립 미술관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적용되기에 적합한 기타 시설이 무엇인지, 추가 제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랜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전문가 설문조사(2차)**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 관광 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본 정책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을 통해 얻어진 모든 정보는 통계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주관기관	조사기관
 <p><b>연구담당자</b> 김연진 연구위원 02)2669-9834 이희재 부연구위원 02)2669-8423</p>	 <p><b>담당연구원</b> 최지은 책임 02)3415-5188 이현진 선임 02)6009-2727</p>
<p>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art 1** **현행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설치 및 공급 기준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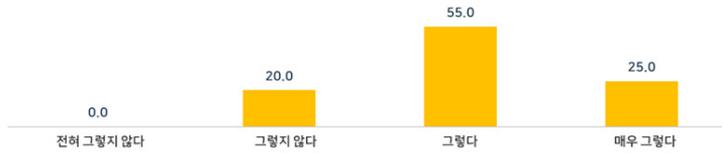
※ 다음은 **현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아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구분	설치 및 공급 기준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8, 매 5년 마다 수립)에 의해 설치</li> <li>- 2028년까지 1,400관(3.7만 명 당 1개관)을 건립할 것을 목표로 함</li> <li>-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반영</li> <li>- 도서관 입지: 인구밀집지역 및 도보 12~20분(반경 1~1.5km) 접근 규정</li> </ul>
박물관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2005~11, 2004년 수립)에 근거</li> <li>- 박물관·미술관: 인구 5만 명 당 1개관(OECD 평균 3.7만 명 당 1개관)</li> <li>-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 1관 추가 가능하고 대도시 인구기준으로 건립 허용</li> <li>-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 (인구 50% 증가 시 1개소 추가건립 가능)</li> <li>-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당 1관 건립 (인구 50% 증가 시 1개소 추가건립 가능)</li> </ul>

Q1. 지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 및 공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1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단위: %



동의 정도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①	②	③	④

Q1-1. [Q1 동의 정도 ① 또는 ② 응답한 대상자 해당]

Q1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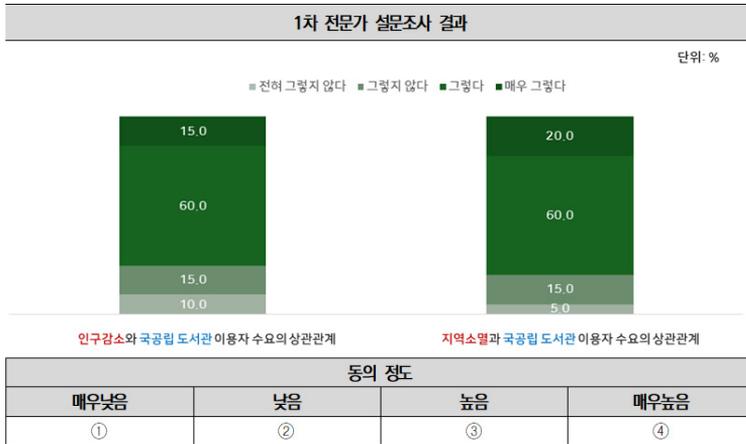
Q1-2. [Q1 동의 정도 ③ 또는 ④ 응답한 대상자 해당]

Q1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Part 2** 인구위기에 대응한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설치 및 공급 정책 개발에 관한 의견

※ 지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위기(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와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의 이용자 수요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각 문항 별로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Q2. 인구위기(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와 국·공립 도서관의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Q2-1. [Q2 동의 정도 ① 또는 ② 응답한 대상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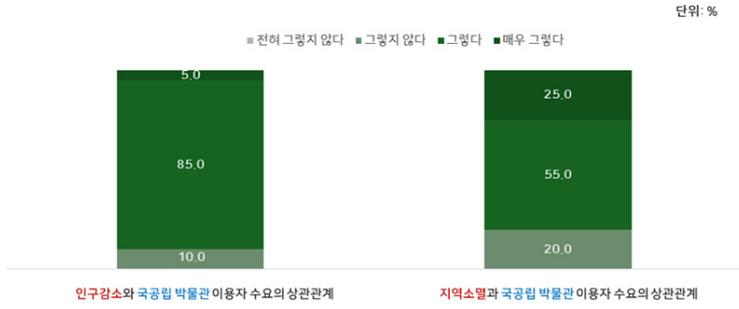
Q2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Q2-2. [Q2 동의 정도 ③ 또는 ④ 응답한 대상자 해당]

Q2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인구위기와 국·공립 도서관의 이용자 수요 간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3. 인구위기(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와 국·공립 박물관의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1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동의 정도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①	②	③	④

Q3-1. [Q3 동의 정도 ① 또는 ② 응답한 대상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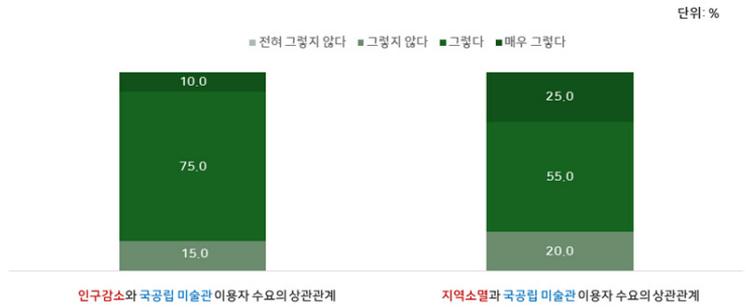
Q3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Q3-2. [Q3 동의 정도 ③ 또는 ④ 응답한 대상자 해당]

Q3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인구위기와 국·공립 박물관의 이용자 수요 간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4. 인구위기(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와 국·공립 미술관의 이용자 수요 간 상관관계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1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동의 정도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①	②	③	④

Q4-1. [Q4 동의 정도 ① 또는 ② 응답한 대상자 해당]

Q4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Q4-2. [Q4 동의 정도 ③ 또는 ④ 응답한 대상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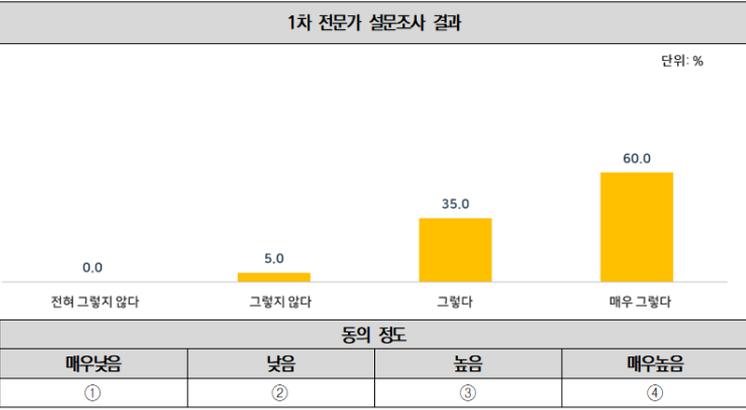
Q4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인구위기와 국·공립 미술관의 이용자 수요 간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art 3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 타 시설의 연계에 관한 의견**

※ 다음은 현재 도서관이 타 시설과 연계한 사례입니다. 아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Q5. 지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도서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Q5-1. [Q5 동의 정도 ① 또는 ② 응답한 대상자 해당]

Q5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Q5-2. [Q5 동의 정도 ③ 또는 ④ 응답한 대상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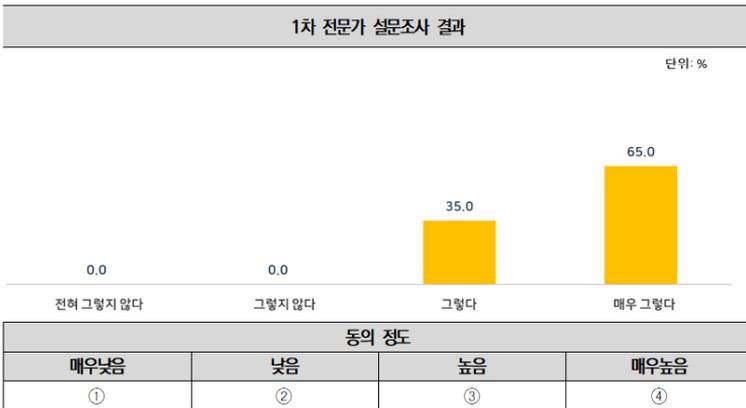
Q5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향후 도서관의 이용자 수요는 기존 도서관 서비스를 넘어 점차 다변화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다음은 현재 박물관이 타 시설과 연계한 사례입니다. 아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박물관과 대학시설의 시설 복합화 사례	박물관 서비스가 교육시설에 일시적으로 적용된 사례
	

Q6. 지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박물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Q6-1. [Q6 동의 정도 ① 또는 ② 응답한 대상자 해당]

Q6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Q6-2. [Q6 동의 정도 ③ 또는 ④ 응답한 대상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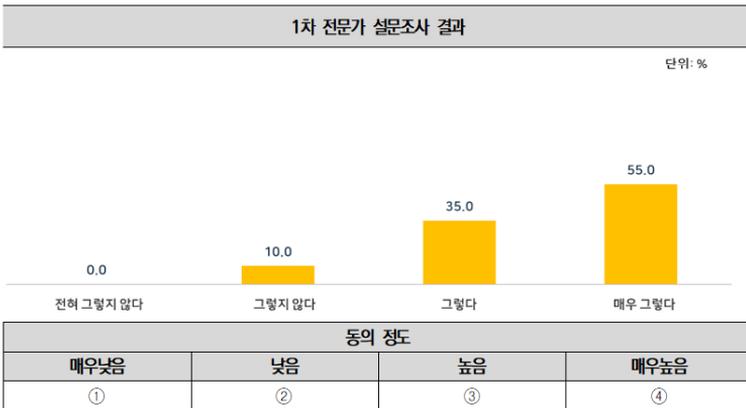
Q6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향후 박물관의 이용자 수요는 기존 박물관 서비스를 넘어 점차 다변화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다음은 현재 미술관이 타 시설과 연계한 사례입니다. 아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Q7. 지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 미술관이 문화시설 외 타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Q7-1. [Q7 동의 정도 ① 또는 ② 응답한 대상자 해당]

Q7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Q7-2. [Q7 동의 정도 ③ 또는 ④ 응답한 대상자 해당]

Q7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향후 미술관의 이용자 수요는 기존 미술관 서비스를 넘어 점차 다변화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Part 4**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 타 시설의 연계(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에 관한 의견

※ 지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을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타당성 순위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Q8. 현재 국·공립 도서관과 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을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타당성 순위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1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동의 정도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국·공립 도서관과 연계할 타 시설 타당성 순위				
1위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위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				
3위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				
4위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				
5위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	①	②	③	④
6위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7위 타 문화시설(도서관 제외)				
8위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				
9위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				
10위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Q8-1. [Q8 동의 정도 ① 또는 ② 응답한 대상자 해당]

Q8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Q8-2. [Q8 동의 정도 ③ 또는 ④ 응답한 대상자 해당]

Q8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국·공립 도서관과 타 시설의 연계(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를 추진할 시, 기존 도서관 운영 대비 어떤 방안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9. 현재 국·공립 박물관과 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을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타당성 순위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1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동의 정도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국·공립 박물관과 연계할 타 시설 타당성 순위				
1위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				
2위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위 타 문화시설(박물관 제외)				
4위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				
5위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	①	②	③	④
6위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7위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				
8위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				
9위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				
10위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Q9-1. [Q9 동의 성도 ① 또는 ② 응답한 대상자 해당]

Q9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Q9-2. [Q9 동의 정도 ③ 또는 ④ 응답한 대상자 해당]

Q9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국·공립 박물관과 타 시설의 연계(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를 추진할 시, 기존 박물관 운영 대비 어떤 방안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10. 현재 국·공립 미술관과 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을 추진하기에 타당한 타 시설의 타당성 순위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1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동의 정도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국·공립 미술관과 연계할 타 시설 타당성 순위				
1위 대학시설(대학교 캠퍼스)				
2위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위 타 문화시설(미술관 제외)				
4위 공공청사(행정자치센터 포함)				
5위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①	②	③	④
6위 공원시설(도시공원, 지역거점공원)				
7위 돌봄시설(어린이집, 경로당)				
8위 의료시설(보건소, 의료기관)				
9위 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10위 주차시설(공영주차장 포함)				

Q10-1. [Q9 동의 성도 ① 또는 ② 응답한 대상자 해당]

Q10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Q10-2. [Q9 동의 정도 ③ 또는 ④ 응답한 대상자 해당]

Q10에서 동의 정도에 대해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국·공립 미술관과 타 시설의 연계(시설 복합화 및 서비스 일시적 적용)를 추진할 시, 기존 미술관 운영 대비 어떤 방안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11. 추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로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랜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집필 내역

---

### 연구 책임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2장 일부

이희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4장 일부, 제5장

### 공동 연구

이지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제3~4장 일부

### 연구 참여

위예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수료

### 조사 참여

(주)코리아리서치센터

##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4년 10월 23일

발행일 2024년 10월 23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9-11-7198-030-7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23>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김연진·이희재·이지아(2024),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23>



[www.kcti.re.kr](http://www.kcti.re.kr)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